

# 미래사회 변동이 사회복지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예측 연구

## - 영향 변수 도출과 시나리오 작성을 중심으로

정홍원

김예슬·김기태·최혜진·홍성주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예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1-25

### 미래사회 변동이 사회복지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예측 연구

- 영향 변수 도출과 시나리오 작성을 중심으로

발 행 일 2021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주)삼일기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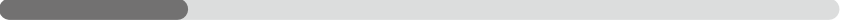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22-8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1.25>

## 발|간|사

우리는 불안정한(Volatile), 불확실한(Uncertain), 복잡한(Complex), 모호한(Ambiguous) 뷰카(VUCA)라고 부르는 세계, 그리고 격변하는(Turbulent), 불확실한(Uncertain), 새로운(Novel), 모호한(Ambiguous) 튜나(TUNA)라고 부르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1년 9.11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격변의 형태로 발생하고, 그 영향이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경험한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격변은 미리 알고 대비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지의 격변 또한 대비하기 어려운 것임을 의미한다. 미래를 예측하고, 격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지난 세기부터 급격하게 전개된 산업혁명과 생산기술의 발전, 세계화, 디지털화 등 거대한 변화 동력에 의해 세계가 연결성과 복잡도가 높은 거대 시스템으로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 생산체계의 연계성과 복잡성이 높아졌고 변화의 속도도 빨라졌다. 거대한 변화 동력과 인간 세계 구조의 상호 연결로 인하여 격변과 그 사후적 영향의 파급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연구는 격변 사건, 메가트렌드, 사회 구조, 생산·기술 시스템, 지구 환경이라는 주제들의 미래 전개와 각 요인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미래연구는 학술연구와 달리 데이터 추정치, 추론적인 가설과 전제, 상상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수행하며, 예측적 설명과 사건 서술(narrative)을 생산한다. 예측적 설명과 시나리오 같은 미래연구 결과물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입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견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중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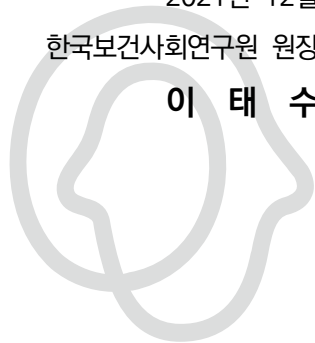
---



정책 수립과 결정을 담당하는 주체들은 지금보다 나은 미래라는 단일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를 미래연구가 뒷받침하기를 기대한다. 반면에 미래연구자는 정책과정에서 현재의 프레임워크에 도전적인 대안이나 사고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미래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정책과정에서 단일 전제화되는 우상향 정책 방향과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파괴적인 또는 각성적인 시나리오는 정책 과정에서 무시되기 쉽다.

미래연구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다소 무모한 그리고 무의미한 시도라고 평가 절하될 수 있다.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 예측 결과, 시나리오, 정책 대응의 우선순위와 과제 등이 기존의 정책연구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과거 지향적이거나 단일 우상향적 태도에 대한 도전이며, 발생할 수 있는 격변과 위험에 대한 경고이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연구 결과는 단순한 상상과 창작이 아닌 체계적인 방법론과 전문가들의 집합적 견해를 통해 산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시도에 의해서 수행된 이 연구가 우리 사회의 미래 사회정책에 상상력과 활력을 주기를 기대한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1
요 약 .....	3
<b>제1장 서 론 .....</b>	<b>7</b>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9
제2절 연구 목적, 내용 및 방법 .....	12
<b>제2장 미래연구 방법론과 사례 .....</b>	<b>21</b>
제1절 미래연구 개괄 .....	23
제2절 미래연구 방법론의 범위와 특징, 활용법 .....	28
제3절 미래상 도출을 위한 시나리오 방법론 .....	40
제4절 미래 시나리오 사례 .....	49
제5절 소결 .....	57
<b>제3장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 .....</b>	<b>59</b>
제1절 환경 분석 및 변화 예측 방법 .....	61
제2절 미래 변화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파급 효과 .....	67
제3절 선호 미래와 대응의 우선순위 .....	77
제4절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 .....	82
<b>제4장 미래 변동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네 가지 시나리오 .....</b>	<b>91</b>
제1절 시나리오 구성 .....	93
제2절 각자도생 생존게임 사회 .....	98

---

제3절 에코챔버 사회 .....	104
제4절 광장 공동체 사회 .....	110
제5절 판옵티콘(Panopticon) 통제 사회 .....	116
<b>제5장 결론 .....</b>	<b>123</b>
제1절 미래 환경 변화와 사회복지제도 .....	125
제2절 미래 대응의 우선순위와 복지정책의 주요 과제 .....	130
<b>참고문헌 .....</b>	<b>135</b>
<b>부 록 .....</b>	<b>139</b>
[부록 1] 델파이 조사표(1~3차) .....	140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가능미래 .....	154
[부록 3]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발생가능성 .....	169
[부록 4]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파급효과 .....	172
[부록 5]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바람직성 .....	175
[부록 6]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대응의 고려 정도 .....	177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미래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상식 .....	27
〈표 2-2〉 『미래연구용어집』의 미래연구 24개 방법론 .....	29
〈표 2-3〉 Futures Research Methodology-Version 3.0의 미래연구 37개 방법론 .....	30
〈표 2-4〉 Inayatullah의 미래연구를 이루는 여섯 개의 기둥 .....	35
〈표 2-5〉 STEPI 혁신전망 방법론의 작업패키지별 주요 절차와 활용도구 .....	38
〈표 3-1〉 사회보장 환경 분석을 위한 STEEP 분류 .....	62
〈표 3-2〉 델파이 조사 응답 전문가 현황 .....	64
〈표 3-3〉 미래 변화·사건의 발생 가능성 .....	72
〈표 3-4〉 미래 변화·사건의 파급효과 .....	74
〈표 3-5〉 유형별, 영역별 미래 변화·사건 .....	76
〈표 3-6〉 미래 변화·사건의 소망성 .....	79
〈표 3-7〉 미래 변화·사건의 고려 정도 .....	81
〈표 4-1〉 각자도생 생존게임 사회의 동인·양상 및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	98
〈표 4-2〉 에코채버 사회의 동인·양상 및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 .....	104
〈표 4-3〉 광장 공동체 사회의 동인·양상 및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 .....	110
〈표 4-4〉 판옵티콘 통제 사회의 동인·양상 및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 .....	116
〈표 5-1〉 미래 시나리오별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영향 .....	129
〈표 5-2〉 미래 대응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	131
〈부표 1〉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가능미래 .....	154
〈부표 2〉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발생가능성 .....	169
〈부표 3〉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파급효과 .....	172
〈부표 4〉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바람직성 .....	175
〈부표 5〉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대응의 고려정도 .....	177

#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연구 방법과 절차 .....	16
[그림 2-1] STEPI 혁신전망 방법론의 작업패키지 설계 개요 .....	37
[그림 2-2] 퓨처스 콘(futures cone) 이미지 .....	41
[그림 2-3] 글로벌 푸드 시스템의 미래: 4개의 미래 세계 시나리오 .....	45
[그림 2-4] 한국 과학기술 2035 시나리오 프레임워크 .....	47
[그림 2-5] 복지 시스템의 미래 시나리오 프레임워크 .....	53
[그림 2-6] 네덜란드 2040 시나리오 .....	55
[그림 2-7] 글로벌 푸드 시스템의 미래 시나리오 .....	56
[그림 3-1]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 예측 방법 및 절차 .....	66
[그림 3-2] 1차 델파이 결과에 따른 미래 변화와 발생 가능 사건 .....	71
[그림 3-3] 미래 변화·사건의 유형: 발생 가능성, 파급 효과 .....	76
[그림 3-4] 퓨처스 콘(futures cone)을 활용한 미래 개념 구분 .....	84
[그림 3-5] 미래 개념과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 사회 영역 .....	85
[그림 3-6] 미래 개념과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 기술 영역 .....	86
[그림 3-7] 미래 개념과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 경제 영역 .....	87
[그림 3-8] 미래 개념과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 환경 영역 .....	89
[그림 3-9] 미래 개념과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 정치 영역 .....	90
[그림 4-1]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의 방향성과 주요 내용 .....	95
[그림 4-2]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와 사회복지 시나리오 구성 .....	96
[그림 5-1]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 예측(요약) .....	126





## Abstract

### **The Impact of Future Changes on the Social Welfare:** Delphi Surveys and Scenario Planning

Project Head: Chung, Hong won

In the aftermath of the outbreak and spread of COVID-19,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experiencing collapse of medical protection systems and increment of social risks. Under this situation, predicting future changes becomes increasingly crucial for the public policy makers and the state administr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future changes focused on the social welfare, and to identify and analyze the impact of such changes on the social welfare and policy. This study comprises three analyses: 1) Prediction of changes in the future social welfare environment; 2) Extracting the two factors of “conflict” and “gap” introducing uncertainty in the future changes in order to outline scenarios by presenting a two-by-two matrix; 3) The impact of future changes on the social welfare.

For the study,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Political) framework was used to predict the future changes in each area, and Delphi surveys were con-

ducted three times involving 38 expert panels. And, based on the Delphi survey results, close examinations were conducted of the driving force and the development patterns of the future changes according to the four scenarios.

In this study, future changes in the environment affecting the social welfare were analyzed by classifying them as 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political sectors. Considering the relatively high priority of the policy response to the events over the next 10 years, the principal tasks of social welfare polic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address the demographic changes. Second, the income maintenance system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Third, efforts are needed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social conflicts. Fourth, the public health care system must be dramatically expanded in response to the events such as climate chang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andemic outbreaks. Fifth, in addition to the gap between classes, the response to the gap between regions will emerge as a key task of social welfare policy.

Keyword : future Research, STEEP, delphi survey, scenario planning, future change



## 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발생과 확산 여파로 전 세계적인 국가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 사회적 위험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정책 수립과 국정운영을 위해 미래사회 변동 예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를 둘러싼 환경을 중심으로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예측된 미래사회 변동이 사회복지 영역 및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사회는 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상호 결합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복잡계(complex system)이며, 미래사회 변동의 불확실성과 변화 예측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미래 예측과 대응 전략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탐색적, 추상적 성격이 높아 실제 정책에 즉각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으며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예측(forecasting)에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전략에 대한 체계적 예측을 위해 대상 범주와 시간적 범위를 향후 약 10년(2022~2032)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발생 가능할 만한 요소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미래연구 방법론의 활용과 변화 예측을 위해 과학적 기법(STEEP 분류체계, 델파이 조사, 시나리오 플래닝)들을 활용하였다. 나아가 미래 환경 변화가 사회복지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네 가지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주요 연구결과

이 연구의 내용은 1)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2) 미래 변

화에 있어 '갈등'과 '격차'라는 두 개의 불확실성 요인을 추출하여 시나리오(2X2 매트릭스형)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 미래 환경 변화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첫째,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 예측을 위해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nvironmental, Political) 분석 틀을 활용하여 영역별로 4가지 미래 개념을 범주화한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를 위해 38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세 차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미래 사건(event)·변화를 도출하였고,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미래 사건(event)·변화에 대한 발생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1차와 2차 결과의 분석을 기반으로 가능미래(possible futures), 타당미래(plausible futures) 그리고 유력미래(probable futures)를 식별하였다. 또한 3차에서는 바람직성(desirability)과 대응 고려 정도를 기준으로 선호미래(preferable futures)와 관심미래(concerned futures)를 분류하고, 미래대응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둘째, 앞선 델파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미래 환경 변화가 사회복지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갈등(Y 축)'과 '격차(X 축)'라는 두 가지 축에 따라 2X2의 조합에 의해 산출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1사분면에는 격차가 커지고, 갈등이 높아지는 '각자도생의 생존게임 사회'가, 2사분면에는 격차는 작아지고, 갈등이 커지는 '에코챔버(echo chamber) 사회'가, 3사분면에는 격차는 작아지고, 동시에 갈등도 낮아지는 '광장 공동체 사회'가, 그리고 4사분면에는 격차가 커지고, 반면에 갈등은 낮아지는 '판옵티콘(panopticon) 통제 사회'가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의 동인(driving force)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각각의 변화 양상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3.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미래 변화를 사회, 기술, 경제, 환경, 그리고 정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의 예측 결과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사항은 유력미래(probable futures)로 분류되는 이벤트로, 유력미래는 향후 약 10년의 기간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벤트이며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사회복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영역별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서 주목할 유력미래 이벤트들을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 영역의 경우 정년퇴직 연령 상승, 다양한 가족의 합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 영역의 환경 변화는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는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와 고용형태의 다변화, 저성장 체제의 고착화, 그리고 기업 간 격차 확대 등이다. 이러한 이벤트는 소득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동시에 복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환경 영역의 유력미래 중에서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환경오염의 심각성 증가, 그리고 팬데믹의 발생 등이다. 이러한 이벤트는 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제도의 급격한 수요 증가로 연계된다. 동시에 현재의 보건의료 자원과 전달체계, 그리고 공공부문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 영역의 미래 환경 변화는 사회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상황에서 이미 노인과 청년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기에 추가적인 영향력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은 현재보다 확대될 것이며, 양성평등 이슈와 여성복지의 확대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약 10년의 기간 동안 정책적 대응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벤트의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정년퇴직 연령 상승’(1단계), ‘출산율 추가 하락’(2단계) 등과 같은 인구구조 변동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다. 둘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핵심적 위상을 유지할 것이며, 사회복지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성별 갈등, 세대 간 갈등, 다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갈등에 대한 대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 넷째,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질병 증가, 팬데믹 발생 등의 이벤트에 대응하는 공공 보건의료체계의 획기적 확대와 확충이 필요하며, 의료보장제도는 질병의 사후 치료 중심에서 예방,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섯째, 계층 간 격차와 더불어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이 사회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복지제도 특히 사회서비스 제도의 다양화와 급여의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제도 특히 사회서비스 제도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개별적 욕구 충족을 위한 급여 유형 확대와 수준 상향을 지향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용어 : 미래연구, STEEP, 델파이조사, 시나리오기법, 미래변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내용 및 방법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재앙은 인간의 척도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들은 재앙을 비현실적이고 곧 지나가버릴 악몽에 불과한 것으로 여긴다.”(Camus, 2015, p.51).

코로나19 이후 ‘밥 한번 먹자’라는 인사는 사라지고, 마스크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시장, 식당, 공공기관, 학교, 직장, 대중교통 등 일상 공간에서 사람을 대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최초에는 보건·의료의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장기화하면서 경제, 사회 전반으로 위기로 확대되었다. 코로나19 발생과 확산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 공포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갈등과 차별, 이동 제한, 폐쇄,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경기 하락과 실업 등 미증유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

불과 2~3년 전에 수행한 미래연구에서 코로나19의 발생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간한 미래전략보고서(최병삼 외, 2020), 카이스트의 미래전략 2020(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 2019) 등에서 코로나19 또는 유사한 감염병 발생과 관련한 언급이 없다. 최근에 연구를 수행한 미래연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이러한 미래연구가 오류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불확실성의 증가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래 변화 예측에 있어서 특정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반면에 선행이 없는 사건의 발생 자체를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기도 한다. 기후 변화, 재난,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과 같이 물질문명의 급속한 진전과 인간적 요인의 결합으로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그 파급효과는 치명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래사회는 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상호 결합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복잡계(complex system)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변동은 불확실성이 크고, 변화 예측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 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을 위하여 미래사회 변동 예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행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장기 예측과 미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미래준비위원회, 2015; 서용석, 윤지웅, 2015; 박병원 외 2016; 박병원 외, 2017; 김유빈 외, 2018; 민보경, 김홍범, 이채정, 허종호, 강지희, 2018; 박성원 외, 2018; 송영조 외 2018; 김홍범 외, 2019; 이선화, 여영준, 2019; 박찬수 외, 2020; 최병삼 외, 2020).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정책에 적절히 반영되거나,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대응 전략과 정책 수립은 미래 변동의 예측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실제 정책의 수립과 결정은 근시안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기존의 미래 예측과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와 연구 결과들은 추상성이 높아서 실제 정책에 활용하기 어려우며, 또한 가독성과 수용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메가트렌드와 관련한 탐색(scanning)과 추상적인 수준의 서술을 제시하는 데 국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예측(fore-

casting)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또한 미래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의 경우에도 예측(forecasting)과 바람직한 미래상 도출(visioning)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획(planning)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사회정책 영역의 미래연구와 미래 대응 전략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에서 미래연구와 국가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삼식 외, 2011; 안상훈, 권순만, 이영, 김수완, 김영미, 2013; 이원희 외, 2013; 최은진, 김혜련, 이수형, 이난희, 김진호, 2017; 김미곤 외, 2017; 이윤진, 유해미, 조혜주, 2019).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미래연구를 위한 과학적 방법론의 활용이 미흡하며,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의례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미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주체들의 정책적 의도와 연계하여 일관성과 체계성이 미흡한 대응 과제를 나열하는 방식이 반복되어 왔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미래연구 및 대응 전략 수립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미래 변동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미흡하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래 대응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둘러싼 미래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래 변화에 대한 체계적 예측을 위해서는 대상 범주와 시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연구 방법론의 활용과 변화 예측을 위한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제2절 연구 목적,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복지 분야를 둘러싼 환경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기술 발전, 기후변화와 생태계, 에너지, 국제관계 등 거대 담론과 메가트렌드를 중심으로 추세와 동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과거 및 현재 상황을 근거로 하여 미래사회의 모습을 다양한 시각에서 추론하여 제시하는 작업이다.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변화 예측은 일과 노동, 소득 분배와 재분배, 격차, 빈곤, 가족구조, 부양체계, 갈등 등 보다 구체적인 대상과 세분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미래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예측은 탐색(scanning), 예측(forecasting), 판단(judgment) 등의 절차와 단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예측된 미래사회 변동이 사회복지 분야 또는 사회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미래연구는 ‘과거 및 현재의 경험과 자료를 기초로 사회구성원의 바람과 혜안(in-sight)을 결합하여,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과정’이다. 이는 미래연구가 단순히 미래 시점에서 특정 사건의 발생 또는 변화를 예측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하여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또한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며,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박병원 외, 2017, p.27). 미래사회 변동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미래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복지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

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미래사회 변동이 사회복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작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 예측’, ‘미래 변화의 시나리오 작성’, 그리고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사회복지를 둘러싼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거시환경분석(macro environment analysis) 기법을 활용한다. 사회복지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사회적(social) 요인, 기술적(technological) 요인, 경제적(economic) 요인, 생태적(ecological) 요인, 그리고 정치적(political) 요인으로 구분하는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cological, Political)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미래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도출한다. 또한 STEEP 분류체계의 5개 영역 별로 ‘타당미래’(plausible futures), ‘유력미래’(probable futures), ‘선호미래’(preferable futures) 그리고 ‘관심미래’(concerned futures)를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 변화 예측은 다양한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예측보다는 개연성이 높은 미래 변화 발견이 핵심이다. 개연성이란 특정 사건(events)의 발생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타당미래와 유력미래를 식별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선호미래와 관심미래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것인지 또는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식견이 필요하다. 발생 가능성, 파급효과, 바람직성, 그리고 미래 대응의 고려 정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미래 변

화를 판단한다. 여기에서 판단이란 미래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판단적 예측(Judgemental Forecasting)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미래사회 변화의 동인(driving forces)과 방향성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다.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도출한 발생 가능한 사건을 중심으로 미래 변화의 방향성과 추세를 분석하고,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갈등’과 ‘격차’라는 두 개의 기준으로 2×2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4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자 한다.

셋째, 4개의 시나리오별로 ‘사회복지를 둘러싼 미래 환경 변화’와 ‘환경 변화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능 시나리오의 내용에 따른 미래 변화의 동인과 전개 양상,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의 미래 변화는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의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응(adaptation), 조절(adjustment), 재배열(rearrangement), 개선(improvement), 개혁(reform) 등 다양한 반작용이 발생한다. 반작용과 변화 대응 방향성의 내용은 향후 사회복지 영역의 정책과제와 미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미래사회 변동 예측을 위한 연구의 범위는 시간과 대상 영역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미래사회 변동 예측의 시간적 범위는 향후 약 10년(2022~2032)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 기간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미래 예측의 목적, 내용, 포괄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중기보다는 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미래 예측의 대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따라서 시간적 범위는 장기 중에서 가능한 짧게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델파이 조사 및 시나리오 작성에서 동일한 시간적 범위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시간적 범위의 설정 내용을 델파이 조사 패널,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 자문그룹 그리고 연구진 모두가 사전에 공유하였다.

미래 예측의 대상 영역의 범위는 앞에서 제시한 STEEP(사회, 기술, 환경, 경제, 정치) 영역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일부 내용을 조정하였다. STEEP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를 가능한 한 국내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국제 관계 또는 대외 관계와 관련된 요소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였다. 예를 들어 국제 관계에 따른 외교, 안보, 국방 등과 관련된 요소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무역 또는 수출과 관련한 국내 경제 변동 요소는 포함하였다. 또한 미래 변동 예측은 개연성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불확실성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사건(events)을 중심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향후 약 10년의 기간 동안 변동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약 10년의 기간 동안 변동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변동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는 분석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노인 인구 변화에 따른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비중 등은 변동 가능성이 없으며, 이러한 항목은 기존에 공개된 공식 예측(예, 장래인구추계)의 내용을 4개 시나리오에 공통적으로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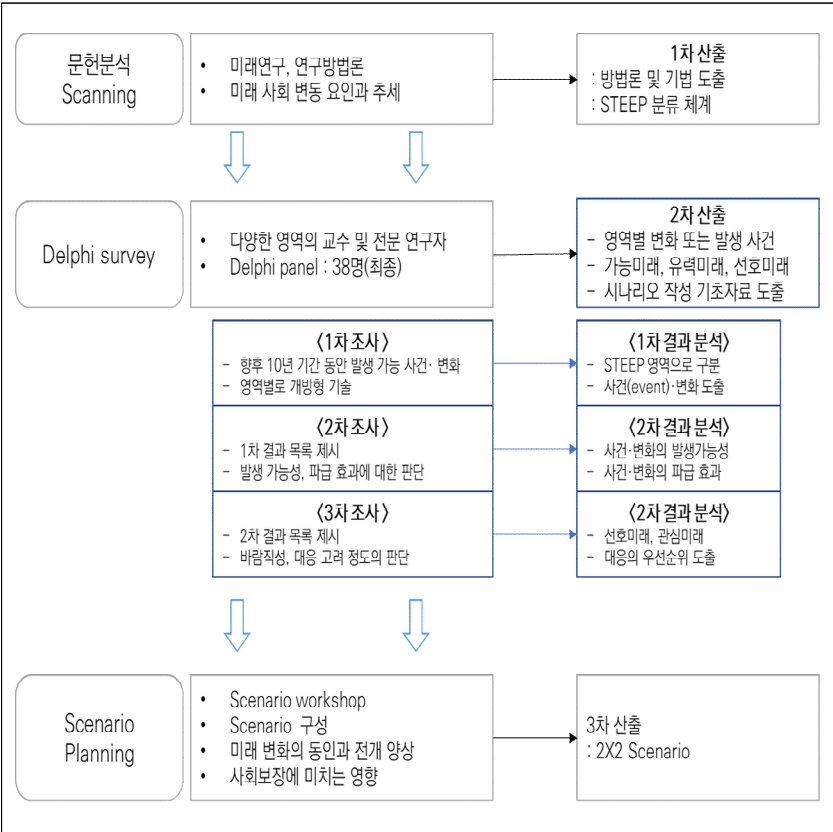
### 3.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사회복지 환경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변화가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과 절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1] 참고).

첫째로 미래연구 방법론과 사례에 관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 분석이

다. 미래연구를 개괄하고, 미래연구 방법론의 범위, 특징 그리고 활용방법을 정리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시나리오 방법론에 대해서 원칙, 기준, 작성 방법 그리고 작성 사례를 정리한다.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미래 변화 예측에 대한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이후에 델파이 결과를 기반으로 이 연구에 적합한 시나리오 방법론을 도출하여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 방법과 절차



자료: 필자 직접 작성



둘째,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통해 미래 변화와 이벤트를 도출하고자 한다. 델파이 조사는 1950년대 미국 RAND 연구소에서 전쟁에 대한 기술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이다. 델파이 조사 방법은 보건 의료, 교육, 환경,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과 반복되는 재답변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델파이 조사는 최소 2회 이상의 응답을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도출되는 결과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점차 구체화되며, 질적인 결과가 양적인 결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3회의 응답을 하는 조사로 설계하였다. 1차 조사는 향후 10년의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술하는 개방형 설문 형식으로 진행했다. 1차 조사의 응답 내용을 모두 통합한 결과는 가능미래(possible futures)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발생 가능한 모든 이벤트를 STEEP 체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부록 2] 참고).

1차 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가능미래 이벤트를 정리한 결과, 즉 타당 미래(plausible futures) 이벤트 목록을 토대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응답을 요청한 이벤트 목록은 1차 조사 결과를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며,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간접적인 피드백 효과가 있다. 2차 조사는 제시한 이벤트 목록의 발생 가능성과 파급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취합하는 것이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생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이벤트를 분류한다.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동시에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응답한 이벤트를 제외하고, 3차 델파이 조사의 응답 목록을 작성했다. 3차 조사는 제시한 이벤트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또는 바람직한 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미래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 해당 이

벤트를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취합하는 것이다. 바람직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활용하여 선호미래(preferable futures)와 관심미래(concerned futures)를 식별하게 된다. 또한 대응의 고려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이벤트 발생에 대한 대응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다.

셋째,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와 전개 양상,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플래닝 방법을 활용한다. 시나리오 플래닝이란 미래에 대한 다양하고 타당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미래 연구에 있어서 시나리오 방법론은 사람들이 미래상을 상상할 때, 사고의 폭을 선호미래나 추세 연장적 미래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나리오 플래닝은 미래상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나 서사적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대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시나리오의 작성은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시나리오 워크숍이란 시나리오 플래닝 과정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정책결정자 등을 참여시키는 기법으로, 해당 주제 및 미래 변화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사전 기획 단계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을 대규모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하였으며, 의사결정자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심각한 양상으로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대면 워크숍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회의 방식으로 대체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였으며, 델파이 패널의 전문가와 전체 연구진 등 7~9명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체한 것이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총 4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1차 워크숍에서는 델파이 조사 결과 검토를 통해 동인(driving forces) 선정과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2차 워크숍은 네 가지 시나리오별로 변수를 설정하고, 변수별로 전개 양상을 작성하였다. 3차 워크숍은 시나리오별로 사회복지에 대한 영향을 작성하였으며, 4차 워크숍에서 작성된 시나리오의 내용을 최종 검토하였다.





## 제2장

### 미래연구 방법론과 사례

제1절 미래연구 개괄

제2절 미래연구 방법론의 범위와 특징, 활용법

제3절 미래상 도출을 위한 시나리오 방법론

제4절 미래 시나리오 사례

제5절 소결



## 제2장 미래연구 방법론과 사례

### 제1절 미래연구 개괄

오늘날의 시대를 고찰하는 많은 이들은 우리가 뷰카(VUCA) 또는 튜나(TUNA)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말한다. 뷰카는 불안정한(Volatile), 불확실한(Uncertain), 복잡한(Complex), 모호한(Ambiguous)을 뜻하고(Bennett & Lemoine, 2014, p.311), 튜나는 격변의(Turbulent), 불확실한(Uncertain), 새로운(Novel), 모호한(Ambiguous)이라는 네 개의 단어들을 축약한(Rhoads & Babor, 2018, p.254) 것이다. 뷰카나 튜나 같은 신조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격변의 형태로 발생하고, 그 영향이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시대적 경험을 통해 나온 유행어다. 이러한 신조어는 21세기 초의 몇몇 격변이 인간이 미리 알고 대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 가능한 미지의 격변 또한 대비하기 어려울 것임을 암시한다.

과거에도 천재지변이 있었지만 21세기에 와서 격변적 사건을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지난 세기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난 산업혁명과 생산기술의 발전, 세계화, 디지털화 등 거대한 변화 동력에 의해 세계가 연결성과 복잡도가 높은 거대 시스템으로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대 변화 동력을 다른 용어로 글로벌 트렌드 또는 메가트렌드라고 일컫는데, 그 영향이 크고 광범위한 특성을 보인다. 메가트렌드는 단기간에 유행하다 그치는 일반적인 트렌드와 달리, 장기 지속적인 특성이 있어서 앞으로도 당분간 또는 더 오랜 기간 인간의 삶과 세계에 작용하게

된다. 메가트렌드로 전개됨에 따라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 생산체계의 글로벌 연계성과 복잡도는 규모가 커졌고 발전의 속도도 빨라졌다. 결국 거대한 변화 동력과 인간 세계 구조의 상호 진화라는 국면에서, 만약 어떠한 극단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예측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후적 영향의 파급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연구는 격변적 사건, 메가트렌드, 인간사회 구조, 생산과 기술 시스템, 지구환경이라는 주제들의 미래 전개와 각 요인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일이다. 물론 미래 전개에 대한 인간의 궁금증과 탐구란 인간 역사만큼 오래된 일이지만, 오늘날의 미래연구는 20세기 후반에 발흥하고 2000년대를 전후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된 전문적 활동에 한정되며, 큰 흐름에서는 뷰카 인식의 등장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미래연구란 인간의 생산과 활동으로 인해 더 복잡해지고 난해해지는 세계의 문제들에 관한 미래 탐색적 사고이자 해결책을 지향하는 지적 활동이다.

지적 활동의 차원에서 미래연구는 언뜻 일반적인 학술연구의 한 분야로 인식되지만, 연구 속성 차원에서 미래연구는 학술연구와는 다르다. 학술연구는 축적된 데이터와 사실, 실제의 경험을 기반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과정과 결과를 중시한다. 이는 근거 기반의 정책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학술연구는 정밀하게 설계된 절차와 순도 높은 데이터 및 재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료의 재현검증을 받을 수 있다. 그에 비해 미래연구는 데이터 추정치, 추론적인 가설과 전제, 상상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예측적 설명과 내러티브를 생산한다. 예측적 설명과 시나리오 같은 미래연구의 결과물은 미래 위험에 대한 경고 또는 현재적 사고의 틀을 넘어서



는 각성을 의도하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히 맞추고 그것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예견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학술연구에서는 수행 방법과 결과의 검증 및 재현 가능성을 살필 수 있지만, 미래연구에서는 수행 방법과 결과가 충분히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는지 정도까지만 평가할 수 있다.

세계 주요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미래연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높았고, 그와 관련된 조직과 성과가 일부 축적되었다. 21세기 초에는 의사결정과 정책 과정에서 미래연구 수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그러한 관심사가 도드라지지 않는 현상을 보면, 지난 20년간 실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래연구의 역할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정책 입안자는 지금보다 나은 미래라는 단일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를 미래연구가 뒷받침하기를 기대하지만, 미래연구자는 정책 과정에서 현재의 프레임워크에 도전적인 대안이나 사고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그렇다 보니 미래연구에서 도출한 시나리오가 정책연구에서 단일 전제화되는 우상향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 유용한가의 관점에서 미래연구를 이해하다 보면, 정책 보고서에서 다루는 미래연구의 내용은 단순히 글로벌 트렌드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파괴적인 또는 각성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대개의 정책 과정에서 무시되기 쉽다. 이러한 정책 생태계에서는 미래연구의 전문성과 역량이 발전할 기회가 줄며, 그 사회의 미래 문해력과 대응력도 성장하기 어렵다.

이렇듯 미래연구는 학술연구나 정책 과정과는 성격이 다른 활동이며, 그러한 차이를 통해 과거 지향적이거나 단일 우상향적 태도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미래연구 수행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직 한국 사회에서는 일부 학자 및 정책가들이 미래연구를 학술연구인지 아닌지, 정책에 유용한지 아닌지라는 관점으로만 평가함으로써 미래연구의 확장성과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일이 잦다. 그러한 협소한 태도보다는 미래연구를 하나의 독립적 활동으로 이해하고 미래연구에서 탐구해야 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보다 잘 다루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숙련을 체계화하는 일이 국가와 사회에 더 이로울 것으로 보인다.

미래연구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한 미래연구에 대한 하나의 큰 편견을 형성한다. 그것은 유사 이래 미래 탐색에 대한 인간의 기대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꼭 맞추는 데 있었던 관행에서 기인한다. 신점이나 점성술과 같이, 미래연구도 예측치를 내고 맞추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래학 또는 미래연구를 표방하며 미래를 점치는 도서들이 미래연구 관련 출판 시장의 주류를 장악함으로써 인해, 미래연구를 지적 사기와 연관시키는 비판이 적지 않은 점 또한 미래연구의 발전이 어려운 까닭의 하나다.

이렇듯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에 놓인 미래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부터 관련된 편견을 떨쳐내려는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미래연구자들이 미래는 점치는 게 아니라거나, 미래는 다양하게 열려 있다는 등의 원칙을 반복적으로 표방한다. 이러한 노력은 그 사회의 미래 문해력이 높아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숙련된 미래연구자들이 클리셰처럼 사용하는 미래연구의 전제나 원칙들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2-1>와 같다.

〈표 2-1〉 미래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상식

1	미래는 완벽하게 예언될 수 없다.
2	미래는 복수의 대안적 미래들로 설명되어야 한다.
3	미래로부터의 사실이나 증거는 없다.
4	종종 미래의 유용한 사고나 이미지들은 현재의 시각에서 기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습게 인식되거나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5	기술 자체가 미래는 아니다. 우리가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 기술이 가지는 미래의 의미를 결정한다.
6	미래는 호기심 있는 탐험가들의 영역이다. 그들은 현존하는 시스템과 사고 패턴의 너머를 보는 사람들이다.
7	미래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8	역사적으로 미래를 재구성한 중대한 사건들은 “약신호 (weak signals)”에서 시작되었다.
9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백의 예상된 미래가 있다. 우리는 늘 플랜 B가 필요하다.
10	다른 이의 과거를 자신의 미래로 생각하며 사는 게 가장 나쁜 것이다.

자료: UNDP GCPSE. (2018). Foresight Manual: Empowered Futures for the 2030 Agenda, p.8에서 번역 인용. [GCPSE는 Global Center for Public Service Excellence의 줄임말로 싱가포르에 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연구는 세계의 각지에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에서 미래연구는 분과학문의 길을 추구하는 학자 그룹을 통해 전문화되고 있으며, 미국 하와이대학교의 미래학 과정, 핀란드 터쿠대학교의 미래연구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KAIST가 미래전략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미래연구는 정부나 기업에 대한 컨설팅사의 경로로 성장해 왔는데, 예를 들어 싱가포르 정부는 총리실 산하 전략조직으로 CSF(Center for Strategic Futures)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을 운영 중이다.

비록 정책 과정과 다른 성격을 가지지만, 미래연구는 일반적인 학술연

구보다는 실천적 속성이 강하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개입하려는 지향성을 갖는다. 특히 민간의 기업과 조직은 우상향적 미래상을 넘어 미래의 전략적 기회와 위험을 예측하고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며 그로부터 현재 진행하는 계획과 로드맵을 점검하는 등의 실질적인 동기를 가지고 미래연구의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미래연구의 주된 직업 경로로 전략 경영이나 컨설턴시가 추천된다. 예를 들어 핀란드 터쿠대학교의 미래연구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는 직업 선택지에는 민간 기업과 정부 부문의 전략기획 담당자, 컨설턴트, 비즈니스 개발 관리자 등이 소개되어 있다. 다만 그 국가와 사회, 조직의 미래에 대한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가, 미래연구의 과정과 성과를 받아들이는 수용력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사회의 미래연구 역량의 축적 정도가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그 축적의 양과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장에서는 미래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본 연구와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미래연구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방법론적 도구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설명 이후에는 본 연구에서 활용할 만한 시나리오 방법론에 대해 상술할 것이고, 소결에서 본 연구의 미래 시나리오 절차 설계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제2절 미래연구 방법론의 범위와 특징, 활용법

미래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미래연구에 관심이 있거나 연구 입문자라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미래연구용어집』을 참조할 만하다. 이 책에는 미래연구에 관

련된 전문 용어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회자되는 여러 용어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검은 백조(Black Swan)나 특이점(Singularity)과 같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용어부터, 나비효과나 시계와 같이 미래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들이 소개되었다. 미래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는 24개의 주요 방법적 수단들이 서술되었는데 다음 표에 제목을 정리했다.

〈표 2-2〉 『미래연구용어집』의 미래연구 24개 방법론

행위자기반 모델링	백캐스팅	인과충위분석
교차영향분석	큐네빈 프레임워크	의사결정나무
델파이	탐색(Exploration)	외삽법(Extrapolation)
퓨처스 콘	퓨처스 다이아몬드	퓨처스 휠
형태학 분석	내러티브 탐구	참여적 방법
사전부검	레드팀	연관수목법
시나리오	감성분석	모의실험
STEEP 분석	시계열 분석	윈드 터널링

자료: 박병원, 윤정현, 정대예, 최수민. (2017b). **미래연구용어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69-122.

『미래연구용어집』의 24개 방법론을 보면 사회과학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델파이, STEEP 분석 같은 익숙한 기법이 있기도 하지만, 그 외의 여러 기법은 사회과학자 또는 정책연구자에게 생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위자기반 모델링(Agent-Based Modelling: ABM)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복잡계 경제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의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한 것이다. 윈드 터널링은 본래 공학에서 풍동시험이라고 부르는 용어로서, 풍동시험이란 거센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구조물의 내구성 등을 검사하는 방법을 뜻한

다. 미래연구에서 윈드 터널링이란 시나리오 같은 구성물을 조직이나 사회가 처한 특수하거나 전략적인 환경이라는 윈드 터널에서 시험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난 수십 년간 미래연구 수행을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 등장했고 발전해 왔다. 예를 들어, 델파이 기법은 1950년대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전쟁에 대한 기술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후 델파이 기법은 보건, 교육, 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대의 추정치에 기반한 재답변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발전해 왔다. 델파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미래연구 방법론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각국의 미래연구자들은 2000년대 초부터 밀레니엄 프로젝트라는 참여형 싱크탱크 활동을 중심으로 미래연구 방법론을 집대성했다. 그 결과 2009년 Futures Research Methodology-Version 3.0이 출판되었다. 이 저술은 CD-ROM 형태로 발행되었고 39개 주제에 1,3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가졌다. 이 저술에는 37개의 미래연구 방법론을 집성했는데, 각 방법론에 대해 역사적 개요, 사용법 설명, 강점과 약점, 응용법,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했다. 37개의 방법론 제목은 다음의 <표 2-3>에 정리하였다.

<표 2-3> Futures Research Methodology-Version 3.0의 미래연구 37개 방법론

환경 스캐닝	기술예측용 텍스트마이닝	델파이
실시간 델파이	퓨처스 휠	미래 다각형
트렌드 영향분석	교차영향분석	와일드 카드
구조분석	시스템 관점	의사결정 모델링
대체 분석	통계 모델링	기술 시퀀스 분석
형태학 분석	연관수목법	시나리오
시나리오 기획 도구상자	대화형 시나리오	RAND의 의사결정 지원기법

참여적 방법	시뮬레이션과 게임	천재적 예측, 직관과 비전
예측 시장	미래 비전	규범적 예측
과학기술 로드매핑	필드 아노말리 완화	에이전트 모델링
혼돈과 비선형 역학	다중 관점 개념	휴리스틱 모델링
인과층위분석	개인적 미래들	미래현황지수
미래현황지수 소프트웨어		

자료: Glenn, J., & Gordon, T. (Eds.). (2009). *Futures research methodology-version 3.0*. The Millennium Project.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제안한 미래연구 방법론 37개 각각에는 활용 목적과 기법의 개발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세부 기법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환경 스캐닝을 위한 기법에는 ① 전문가 패널, ② 데이터베이스 문헌 리뷰, ③ 구글 알리미나 웹크롤러 방식, ④ 도서 문헌 리뷰, ⑤ 전문가 이슈 에세이, ⑥ 핵심 인사 추적과 컨퍼런스 모니터링 등이 있다(Gordon and Glenn, 2009, pp.5-10). 환경 스캐닝이라는 방법론적 제목이 동일하더라도, 탐구하는 연구 주제와 목표에 따라 다양한 세부적 기법들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0여 년간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 스캐닝 방법은 상당히 디지털화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최신 이슈나 기술에 대한 관련 연구, 언론 기사, 각국의 동향 등이 담긴 환경 스캐닝 서비스를 제공한다(WEF, 2021).

미래연구 방법론은 그 세부의 기법들이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디지털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여러 응용 기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래연구의 37개 방법론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합해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미래 주제의 파생적 관계성을 시각화하는 퓨처스 휠 기법을 환경 스캔 및 인과층위분석과 결합하여 사용한다면 특정 트렌드나 이슈가 가지는 연결망적 인과 구조를 가시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다른 예로 트렌드

영향분석은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나 확률에 대한 추정치를 얻는 방법인데, 다양한 정량적 분석기법과 함께 델파이 조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듯 방법론과 그 세부 기법을 다양하게 응용하고 조합하는 것은 미래연구 작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미래연구 방법론과 그 세부 기법들이 다양하므로 각 방법론의 세세한 사용법만이 아니라, 각 방법론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연구 설계에 도움이 된다. Popper에 따르면 미래연구 방법론은 ① 본성과 ② 역량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본성 측면에서는 정성적, 정량적, 준정량적 방법론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개념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Popper, 2008). 1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래연구에서 정성적 방법론이 발달한 까닭은 미래에 대한 검증 가능한 데이터나 사건을 사전에 확보할 수 없다는 시간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정량적 방법이 발달한 분야는 일기 예보나 경제지표 전망, 환경 예측 등이다. 이들 분야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고품질 데이터에 기반하거나 현재에 집약한 고순도의 데이터 처리를 통해 미래의 추세를 산출한다. 이는 수학적 전망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전망치 도출 이후의 사회경제적, 지구적 영향에 대해서는 정성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델파이 같은 준정량적 방법은 주관적인 판단과 견해를 계량화하는 분석법으로 사회과학에서도 널리 활용된다.

- 정성적 방법: 일반적으로 사건과 인지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해석의 영역인데, 의견, 판단, 신념, 태도 등과 같이 종종 확증하기 어려운 주관성이나 창의성에 기초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 방법론으로는 백캐스팅, 브레인스토밍, 환경 스캐닝, 시민 패널, 에세이, 전문가 패널, 미래 워크숍, 게임, 인터뷰, 문헌 리



뷰, 형태학 분석, 설문조사, 연관수목법, 시나리오 등이 있다.

- 정량적 방법: 일반적으로 변수를 측정하고,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사회경제 지표와 같이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생성하는 통계 분석을 적용한다. 관련 방법론으로는 계량서지 분석법, 모델링/시뮬레이션, 추세외삽법/메가트렌드(또는 단순 외삽법) 등이 있다.
- 준정량적 방법: 전문가와 해석가의 주관성, 합리적 판단, 관점에 대해 수학적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의견과 확률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 등을 뜻한다. 관련 방법론에는 교차영향분석/구조분석, 델파이, 유망 기술도출, 다중기준분석, 이해관계자 매핑 및 (기술) 로드맵 등이 있다. (Popper, 2008: pp. 64-65)

다른 한편 Popper는 미래연구 방법론을 역량 측면에서 1) 창의성, 2) 증거, 3) 전문성, 4) 상호작용의 네 차원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역량들은 그 성격이 뚜렷하지만, 방법론마다 역량들이 상호배타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역량 간의 중간지대에 있는 방법론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델파이나 설문조사 방법론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네 가지 역량을 고루 필요로 하기도 한다. 각 속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창의성: 독창적인 사고와 상상력의 결합을 말한다. 창의성은 간혹 예술가나 기술 대가가 발휘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공상과학 작가나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운영하다 보면 참가하는 그룹의 어느 개인에게서 나오는 영감과 같이, 매우 숙련된 개인의 창의성과 독창성에 의존한다. 창의성 중심의 방법론에는 와일드 카드, SF, 시뮬레이션, 게임, 에세이, 시나리오 등이 있다.

- 전문성: 특정 분야 또는 주제에 대한 개인의 기술과 지식을 말한다. 전문성은 주로 하향식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조언을 제공하며 권장 사항을 제시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은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암묵적 지식 또는 특정 도메인 영역에 대한 수년간의 실무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전문지식은 종종 연구의 이론, 가설 및 관찰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전문성 중심의 방법론에는 전문가 패널, 로드매핑, 유망기술 발굴, 수리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정량적 기법 등이 있다.
- 상호작용: 미래연구의 여러 참여적 방법들은 민주주의적 이상이 공유되고 상향식 참여 과정이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활용되기 마련이다. 전문지식은 여러 전문가의 융합적 협력 과정에서, 또는 비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발전한다. 상호작용이 중요한 방법론에는 미래 워크숍, 시민 패널, 투표, 브레인스토밍 등이 포함된다.
- 증거: 통계 및 다양한 유형의 측정 지표에 대한 신뢰성 있는 문서와 분석 수단을 통해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가 중시되는 방법론으로는 모델링, 문헌 리뷰, 추세 외삽법, 스캐닝 등이 있다. (Popper, 2008: pp.65-66)

미래연구 방법론의 종류와 특성에 익숙하다면, 미래연구를 수행하는 절차 또는 방법론을 활용한 추진설계법에 대해 살펴보자. 대만 탕강대학의 Inayatullah는 미래연구 수행을 이루는 여섯 개의 기둥을 제시한 바 있다(Inayatullah, 2008). 하나의 미래연구에서 이 여섯 개의 기둥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기둥들을 적절히 체계화할 때 미래연구

의 수월성과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가 제시한 6개의 기동은 각기 독립적 연구 수단으로 활용할 만하면서도, 종합적인 미래연구를 위한 순서도처럼 이해되기도 한다. 그 주요 내용을 다음의 <표 2-4>에 정리하였다.

<표 2-4> Inayatullah의 미래연구를 이루는 여섯 개의 기동

	기동	주요 방법	방법 설명
1	시간의 매핑	공유된 역사 워크숍 미래 삼각형 맵 미래의 풍경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매핑을 통해 역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기록하며 미래로 이동할 브레인스토밍 프레임워크를 제공
2	미래의 예상	이머징 이슈 분석 퓨처스 휠	새로운 혁신의 전조를 식별, 향후 통제와 해결이 어려워질 문제의 단서를 예상하거나, 오늘날의 문제들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탐색
3	미래의 시계	거시사적 방법 역사 해석	변화의 패턴이나 장기적인 변화의 단계와 메커니즘을 규명, 역사가 미래로 전개되는 양식에 대한 거시사적, 제도사적, 미시사적 고찰
4	미래의 심화	인과층위분석 사분원 분석	일상적인 이슈부터, 시스템적 요인, 세계관 및 신화에 이르는 층위구조 분석 개인과 집단, 내부와 외부의 사분면을 통해 미래 변화의 의미를 발견
5	대안의 창조	시나리오	단일 변수나 이중 변수를 통한 시나리오, 시나리오 프로토타입, 조직 및 통합 시나리오 방법들을 활용하여 미래 대안을 창조
6	미래의 변혁	비저닝 백캐스팅	미래에 대한 보다 온전하고 합의된/선호된 비전의 도출 및 미래비전 성취를 위해 필요한 단계를 역산하여 설정

자료: Inayatullah, S. (2008). Six pillars: futures thinking for transforming. *foresight*, 10(1), pp.4-28.를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Inayatullah가 제시한 6개의 기동은 일련의 순서적 절차를 의미할 수 있다. 시간의 매핑에서 시작하여, 새로이 등장하는 변화의 요소들을 찾아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단계와 메커니즘을 고찰하는 세 번째 단계까지 진

행하면 미래에 대한 사고를 열고 변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과층위분석 같은 심화 과정을 거치면서 미래 변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시나리오를 통해 대안적 미래상을 도출한 후, 합의된 비전 속에서 실천 로드맵을 설계하면 미래연구의 한 사이클이 완결된다. 필자가 보기에 Inayatullah의 방법을 앞의 Popper가 제시한 미래연구 방법론의 본성과 역량의 기준으로 구분하면, 첫째, 본성 측면에서는 정성적인 성격이 강하고, 둘째, 역량 측면에서는 창의성과 상호작용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Inayatullah의 6개 기둥을 실제 미래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시간적 흐름을 통찰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6개의 기둥을 세우기 위한 참여자의 토론과 분석, 참여형 미래 대안과 비전 창조 활동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STEPI에서 혁신전망 방법론 연구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작업패키지(Work Package, WP)로 구성된 미래연구 수행설계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이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WP1) 변화의 요인이 되는 이슈 스캐닝에서 시작하여, WP2) 주제별로 미래 변화의 방향을 탐색한 후, WP3) 미래변화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작업패키지의 처음 세 단계가 미래상을 얻는 과정이라면, 그다음은 정책 개발로 이어진다. 시나리오로부터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와 실천적 제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WP4) 시나리오 기반 정책 이슈를 찾아냈고, WP5) 미래 정책대안과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했다.



다양한 토론 기법을 개발 및 활용했다. 또한 각 단계마다 참여자들로부터 단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평가를 받음으로써 절차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체계적인 미래연구 수행을 원하거나, 이슈 분석부터 시나리오, 정책대안 설계까지의 풀 패키지형 방법론이 필요한 연구 수행자에게는, STEPI의 선행연구가 참고할 만하다.

〈표 2-5〉 STEPI 혁신전망 방법론의 작업패키지별 주요 절차와 활용도구

작업패키지	하위 절차	활용 도구와 방법
WP I. 미래 변화 요인과 이슈 스캐닝	I-1) 전망 대상에 대한 시스템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이론 연구
	I-2) 프레임워크의 세부 구조 설계 및 변화 요인 선정	문헌 조사
	I-3) 요인별 변화 이슈 탐색	야누스 콘 컨텍스트 맵 미래 이슈 마이닝
	I-4) 요인별 미래 불확실성과 영향력 평가	불확실성/영향력 매핑
WP II. 주제별 미래 변화 탐색	II-1) 이슈 간 핵심 주제 발굴	클러스터링
	II-2) 핵심 주제별 기회/위협 탐색적 시나리오 작업	기회/위협 시나리오
	II-3) 시나리오 회를 통한 주제별 탐색적 시나리오 평가	발표, 토론, 피드백
	II-4) 탐색적 시나리오로부터 변혁 요소 도출	요인 간 상관성 분석 클러스터링
WP III. 미래 변화 시나리오 도출	III-1) 변혁 요소 선정과 시나리오 축 설정	요인 간 배타성 평가
	III-2) 국면별 시나리오 전개 방향 도출	시나리오 요소 개발
	III-3) 국면별 시나리오 평가	토론 및 평가
	III-4) 국면별 시나리오 스토리텔링	스토리 텔링
	III-5) 국면별 시나리오에 대한 이미지화 작업	시각디자인
WP IV. 시나리오 기반 미래 정책 이슈 도출	IV-1) 시나리오별 기회/위협 탐색	SWOT 분석
	IV-2) 시나리오별 정책 이슈와 의제 발굴	정책렌즈 1
	IV-3) 시나리오별 정책 과제와 대안 발굴	정책렌즈 2
	IV-4) 시나리오 간 정책 연계도 분석	윈드 터널링

작업패키지	하위 절차	활용 도구와 방법
WP V. 미래 정책 대안과 우선순위 제시	V-1) 미래 정책 이슈 및 과제에 대한 전문가 리뷰	전문가 회의
	V-2) 전문가 검토안에 대한 참여자 피드백 의견	피드백 의견 조사
	V-3) 미래 정책 대안 목록 도출	종합 작업
	V-4) 미래 정책 우선순위 도출	종합 작업

자료: 홍성주, 홍창의, 강홍렬, 전찬미, 박상욱, 최형섭, 강애진. (2015). 혁신 전망 방법론 개발 및 적용 (2차년도), pp.93-9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물론 이와 같은 사례 외에도 미래연구 수행을 위한 기획과 방법론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노하우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래연구 설계 능력은 명시화된 지식보다 암묵적 지식의 특성이 강하다. 즉, 미래연구 경력과 역사가 오래된 기관이나 연구자일수록 숙련된 연구 기획 스타일을 가지거나 각자가 심화해온 방법론을 활용한다고 보는 게 옳다. 예를 들어 미국 RAND 연구소는 1950년대 후반부터 델파이와 시나리오 방법론을 개발해 왔고 최근까지 미래연구를 정교화한 전통이 있으므로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등 최신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었다. 그에 비해, 1996년에 미래연구를 뒤늦게 시작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의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들을 보면, 초기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주요 방법론으로 삼다가, 점차 트렌드 분석 및 시나리오 중심으로 방법론이 심화하고 있다. NIC에는 본래 미래연구 조직이 없었는데, 미래연구 보고서들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에 전략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회미래연구원의 경우 발족한 지 몇 년에 불과하나, 시나리오 등의 미래연구 핵심 방법론을 활용한 발간물을 발신하고 있다. 결국 미래연구 수행의 설계 능력은 시간과 숙련에 달렸고, 미래연구 성과를 그 사회가 얼마나 요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의해 설계 능력 축적의 정도가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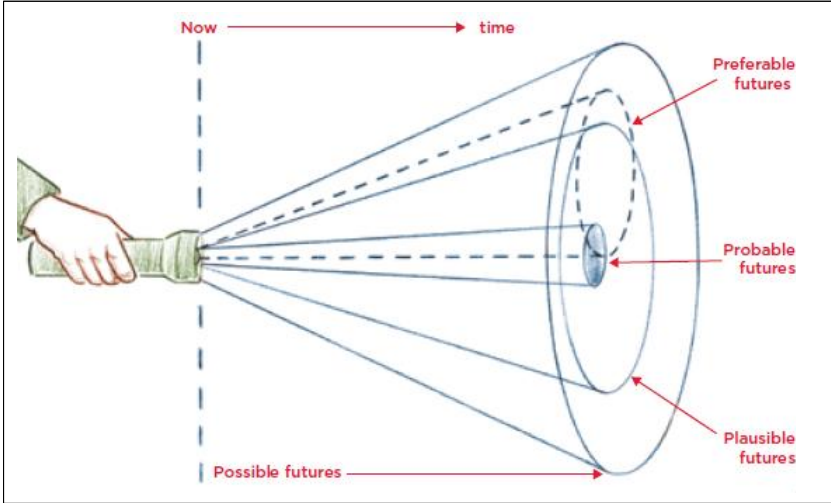
### 제3절 미래상 도출을 위한 시나리오 방법론

미래연구의 여러 방법론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론은 시나리오다. 다른 방법론과 비교하면, 예를 들어 글로벌 트렌드 분석은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 강점이 있으나 미래상에 대한 통찰을 주기 어렵다. 시스템 분석의 경우 구조적 복잡함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와 같은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대중적 서사나 이미지로서 미래상을 보여주는 시나리오 방법론을 대부분의 미래연구 프로젝트에서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상의 양식으로써 시나리오란 어떤 것일까? 앞서 제1절에서 서술한 미래연구의 10가지 상식 중에서 미래상은 복수로 그려진다는 내용이 있었다. 원하는 미래, 원치 않는 미래, 올 것 같은 미래, 생각지도 못한 미래 등 미지의 영역에 있는 미래상이란 본래 단일한 것으로 결정될 수 없다. 미래상이 펼쳐질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2절에서 나열한 방법론 중 퓨처스 콘이 유용하다.



[그림 2-2] 퓨처스 콘(futures cone) 이미지



자료: Bland, J., & Westlake, S. (2013). Don't Stop Thinking About Tomorrow: A modest defence of futurology. Nesta, London, May.p.9.

퓨처스 콘은 우리가 미래상을 말할 때 적어도 어느 정도의 범위를 고려할 것인지를 안내한다. 손전등의 빛이 퍼지는 영역에서 가장 가운데 위치한 원은 현재 추세가 지속될 때,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되는 미래상의 영역이다. 하지만 정부나 조직, 개인 대부분은 확률적 영역보다는 더 나은 발전형 미래상을 상상한다. 다시 말해 현재보다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는 우상향적 미래상이다. 이를 선호 미래상이라고 한다. 퓨처스 콘은 미래상에 대한 일반적인 상상, 즉 예상되거나 선호하는 영역을 넘어 가능하고 그럴듯한 영역 전체를 비추어야 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개될 미래 가능성은 손전등이 비추는 빛의 범위 전체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네 개의 미래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가능미래 (Possible futures): 미래상의 가장 넓은 영역이다. 현

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식을 포함하는 미래상까지 고려한다.

- 유력미래 (Probable futures): 현재 추세에서 추론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상이다. 이러한 예측은 경제 예측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미래 세계에 대해 확률통계적 기법을 적용한다.
- 타당미래 (Plausible futures):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법칙, 과정, 인과 관계, 인간 상호작용 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미래상이다. 예를 들어, 미래유망기술 기반 사회변화 예측 등에서 활용한다.
- 선호미래 (Preferable futures): 선호 미래상은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이며, 대체로 감성적이다. (Bland & Westlake, 2013, p.9)

미래연구의 시나리오 방법론은 사람들이 미래상을 상상할 때, 사고의 폭을 선호 미래나 추세연장적 미래에 제한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하도록 유도한다. 그 선구적 사례로서 Dator의 4대 대안 미래 시나리오를 들 수 있다. Dator는 사회변화에 관한 대부분의 서사가 다음에 상술한 네 가지의 대안 미래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Dator, 1979). 그는 1979년부터 미국 하와이 대학에 미래학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해 왔으며, 그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자 그룹을 마노아 학파라고 부른다(Dator, 2009). 마노아 학파에서 사용하는 대안적 시나리오는 각기 특정한 가설과 전제를 가지는 데 그 설명을 다음에 요약했다.

- 대안 미래 1) 성장: 가장 일반적이며 공식적으로 표방되는 시나리오 유형이다. 대부분의 정부나 조직은 미래에 대해 지속적인 성장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구상한다. 활기찬 경제를 건설하고 경제를 영원히 성장시키고 혁신할 수 있도록 사람, 제도, 기술을 개발한

다고 전제한다. 현실 경제가 침체하거나 쇠퇴하는 경우, “재생된/르네상스형 경제 성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대안 미래 2) 붕괴: 이 미래상은 사회 또는 환경 붕괴에 대해 우려하며, 경제가 우리의 유한한 세계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붕괴는 경제나 환경의 실패, 이념의 실패, 외부적 요인, 자연재해 등에서 기인한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오늘날 과도하게 확장되고 연결된 세계를 극한의 위험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이 대안적 미래는 붕괴하고 소멸하거나 현재보다 낮은 단계의 발전으로 가는 것을 그려낸다. 사실 붕괴와 소멸은 어느 공동체나 조직에도 가능한 미래다. 주의할 점은 붕괴의 미래를 그저 더 나쁜 시나리오 정도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경제적 레이스의 종말을 환영하며 더 단순한 삶을 갈망한다. 이들의 관점에서 붕괴가 반드시 나쁜 시나리오 오는 아니다.
- 대안 미래 3) 안정: 이 대안 미래상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아닌 생존과 공정한 분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미래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자연이나 영적,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가치들을 중심으로 삶을 지향해야 하며 끝없는 부와 소비지상주의의 추구보다 더 진중한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 대안 미래 4) 변혁: 네 번째 대안 미래상은 로봇과 인공지능, 유전 공학, 나노 기술, 텔레포트, 우주 이주, 그리고 정보 사회의 후계자로서 꿈의 사회의 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혁 사회 또는 변혁의 미래상은 새로운 “포스트 휴먼” 형태의 인류를 포함한 변화를 상상한다. (Dator, 2009, pp. 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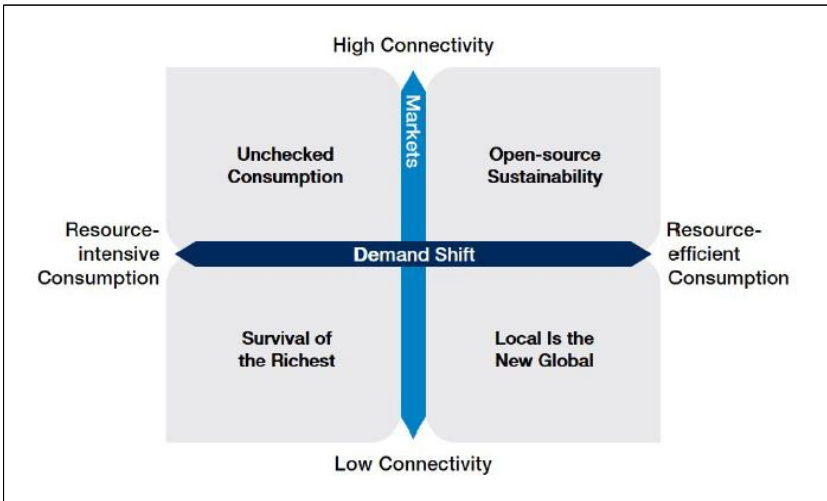
Dator가 제시한 네 가지 대안적 미래상은 사람들이 단일한 하나의 미래상에 고착하지 않고,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도록 인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나리오 방법론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네 가지의 대안적 미래상에서 출발한다면 새로운 관점을 얻기 위해 들여야 하는 많은 절차와 수고를 줄일 수 있는 강점도 있다. Dator의 방법은 거시 사회변동의 미래를 탐색할 때 큰 도움이 되지만 사회변동이 아닌 다른 주제 또는 사회의 세부적인 주제에 관해 탐색할 때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미래 변화 변수와 구조적 요인들을 종합하고 이로부터 변화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다른 시나리오 기법들이 쓰인다.

미래 전개에 변인을 추출하고 그 변인으로부터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과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나리오 방법론이다. Schwartz에 따르면 시나리오 개발 과정에는 1) 초점이 되는 이슈를 식별하고, 2) 그 핵심 변화 동력과 트렌드를 찾아낸 후, 3) 중요성과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변인들을 평가해야 하며, 4) 시나리오 로직을 선택하고, 5) 시나리오 제작에 들어가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나리오 개발 이후에도, 6) 시나리오 합의에 대한 평가, 7) 모니터링을 위한 선행 지표 설정 과정이 수반된다고 했다(Schwartz, 1991, pp. 226-234).

이후 시나리오 개발법에 관한 많은 연구와 실행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2×2 매트릭스다. 이 방법은 미래상을 직관적인 개념과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으며, 미래연구 절차상 만들어지는 복잡한 분석 내용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집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2 매트릭스 기법은 2개의 핵심 변인 또는 불확실성 요인을 행렬로 배열함으로써, 네 가지 시나리오 국면을 창조한다. 이때 2개의 핵심 변인은 상호배타적이어야 한다. 이 2개의 변인으로부터 도출되는 네 가지 시나리오는 상호연관성이 적고, 모두 그럴듯해야 하며, 각기 상대적 선호도를

보여야 한다. 이들 중 좋은 시나리오와 나쁜 시나리오를 미리 정하지 말라는 얘기다. 다만 이 방법의 한계는 추출한 여러 불확실성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핵심 변인을 선택해 내는 어려움에 있다.

[그림 2-3] 글로벌 푸드 시스템의 미래: 4개의 미래 세계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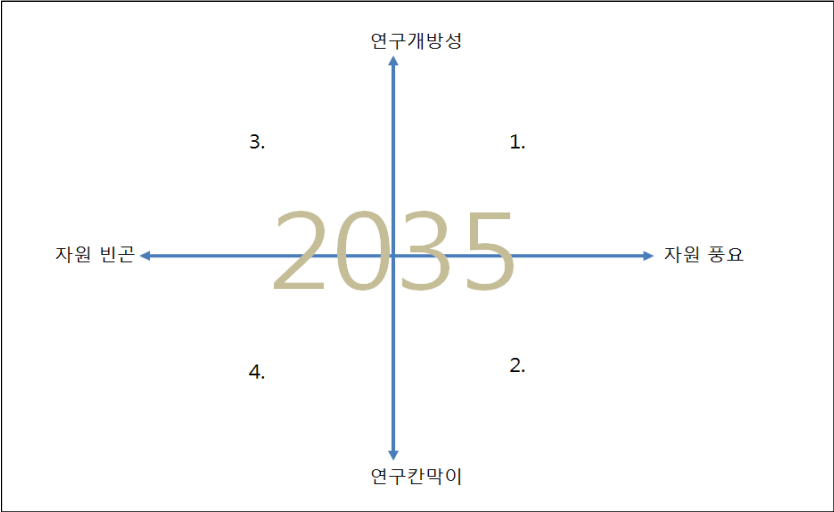
자료: WEF. (2017). *Shaping the Future of Global Food Systems: A Scenarios Analysis*, WEF Global Agenda, p.4.

이 그림은 2X2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글로벌 푸드 시스템의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사례다. 이 미래 시나리오에는 시장과 소비라는 두 개의 핵심 변인을 양대 축으로 삼았다. 세로축 변인인 시장에서의 연결성은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의 넓은 불확실성 범위를 가진다. 가로축 변인은 수요에서의 소비인데 한쪽에서는 자원 효율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자원 집약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불확실성 범위를 보였다. 2X2 매트릭스는 네 가지 시나리오 국면으로 전개된다. 첫째, 시장 연결성이 높고 자원 효율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국면은 오픈 소스형 지속가능

성 시나리오가, 둘째, 연결성이 높고 집약적 소비 국면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소비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셋째, 시장 연결성이 낮고 자원 효율적인 국면은 로컬이 곧 새로운 글로벌인 시나리오가, 넷째, 연결성이 낮고 집약적 소비 국면에서는 부자생존의 시나리오가 전개된다.

STEPI에서 수행한 한국 과학기술 2035의 시나리오 방법론도 2X2 매트릭스를 사용했는데, 이 방법에서는 구체적인 시나리오 서사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과학기술의 2035에서 핵심 변인은 개방성과 자원으로 설정했다. 이 두 개의 불확실성 요인은 한국 과학기술에 관한 이슈 발굴 및 분석, 미래 탐색과 불확실성 요인 선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수의 변인 간 상관성 클러스터링, 영향력 및 불확실성 평가 과정에서 두 개의 핵심 변인이 추출되었다. 개방성은 높고 낮음의, 자원은 풍요와 빈곤의 넓은 불확실성 범위로 펼쳐진다. 또한 그 우측의 표와 같이 2X2 매트릭스의 각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세부 예측 작업이 필요하다. 표와 같이 한국 과학기술 2035에서는 시나리오 구성을 1) 동인, 2) 양상, 3) 전개, 4) 특징 차원에서 구체화했음이 드러난다(홍성주, 전찬미, 최효민, 장성일, 2014, pp. 98-100).

[그림 2-4] 한국 과학기술 2035 시나리오 프레임워크



분류	변수	변화 방향
동인	핵심 동인	개방성:
		자원 투입:
	변혁 촉발제기	대외적 계기:
		대내적 계기:
양상	연구개발 활동	
	연구개발 제도	
	과학기술-사회	
전개	연구 목적/성격	
	투자주체	
	거버넌스방식	
	성과평가 방식	
	지식전달/확산	
특징	등장할 것	
	사라질 것	

자료: 홍성주, 전찬미, 최효민, 장성일. (2014). **미래 혁신전망 방법론 개발 및 적용**, pp. 69~7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 외에도 미래연구 탐구 주제에 따라 Dator의 대안 미래상이나, 2×2 매트릭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주제가 있다. 미래상을 성장, 붕괴와 같은 개념으로 표현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불확실성 요인을 두 개로 축약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정부의 전략기획을 위한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그 주제에 적합한 최선, 차선, 현상유지, 차악, 최악, 돌발 시나리오 등, 참여자들이 구체적으로 사고해 낼 수 있는 개념 틀을 주고 그 안에서 불확실성 요인과 변화의 전개 방식을 찾아내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참가자들에게 이미 시나리오별 좋고 나쁨의 가치를 전제하기 때문에 전략기획에는 유리하더라도 미래 가능성의 넓은 범위를 살피기에는 제한적이다.

시나리오의 개수 또한 네 가지에 국한할 필요가 없으며, 불확실성 요인들의 조합에 따라 더 많은, 때론 더 적은 시나리오를 양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우주항공 산업 혁신전망 2040의 경우, 에너지 자원의 공급양상, 경제성장, 지정학적 상황이라는 세 가지 불확실성 요인을 중심으로, 1) 글로벌 그린 우주항공, 2) 지역적 우주항공, 3) 제로섬 게임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Giessen, 2011). 유럽 연구와 혁신의 미래를 연구한 RIF 2030(Research and Innovation Futures 2030)의 경우, 사회와 연구혁신의 관계 양상에 따라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Erdmann, L., Schirrmeister, E., Warnke, P., & AIT, M. W., 2013)

요컨대 시나리오 방법론은 얻고자 하는 미래상의 주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미래상을 그려낼 것인지를 설계하는 일이다. 미래연구자는 몇몇 정형화된 시나리오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또는 연구자 스스로 기존의 방법과 틀을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영향력과 불확실성이 큰 핵심 변인을 찾아내고, 이 변인이 사회구조 및 메가



트렌드와 함께 만들어내는 변화의 양상을 그려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미래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 수행 노하우, 경험, 방법론적 창의성에 달려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역량이 축적 가능한 사회환경에 의존한다.

## 제4절 미래 시나리오 사례

미래 시나리오는 대개 이야기나 이미지로 표현된다. 트렌드 분석 등 여타의 방법론 또한 이미지를 생산하지만, 이들은 대개 표나 개념도, 인과관계 지도처럼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에세이, 편지, 일기, 대화, 만화처럼 표현되는 미래 시나리오는 미래연구의 산출물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표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2021년 초에 발간한 *Global Trends 2040: A More Contested World*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다. 이 보고서는 “Global Trends”라는 브랜드명으로 4년마다 발간되는데, 그 생산주기가 미국 대통령 선거 주기와 일치하고 대통령 취임 직전 또는 직후에 발표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신정부에게 대외정책에 대한 정보와 식견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보고서에는 5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는데, 각각 1) 민주주의 르네상스, 2) 표류하는 세계, 3) 경쟁적 공존, 4) 분리된 사일로, 5) 비극과 동원으로 명명되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민주주의 르네상스’ 시나리오 개요를 다음에 인용하였다 (NIC, 2021, p. 109).

“2040년 세계는 미국과 동맹국이 주도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부활의 한가운데에 있다. 미국 및 기타 민주주의 사회의 민관 파트너십에 의해 촉진된 급속한 기술 발전은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고 소득을 높이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경제 성장과 기술적 성취의 증가는 글로벌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분열을 완화하며, 민주적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인다. 대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년간 증가하는 사회적 통제와 모니터링으로 인해, 선도적 과학자와 기업가가 미국과 유럽에서 망명을 신청함에 따라 두 나라의 혁신이 억제되었다.” (NIC, 2021, p. 110)

자세히 살펴보면, *Global Trends 2040*의 각 시나리오는 하나의 주요 미래 변인을 상정한 후, 그것이 미치는 글로벌 시스템에의 영향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쓰였다. 인용한 ‘민주주의 르네상스’ 시나리오의 핵심 가정은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강력한 역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리더십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세계의 경제와 기술적 성장이 가능하고, 민주주의의 진전 및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 공조가 성사된다고 기술되었다(NIC, 2021).

*Global Trends 2040*의 두 번째 시나리오인 ‘표류하는 세계’는 중국이나 다른 강대국의 부상을 전제한 상황에서의 변화를 기술했다. 흥미롭게도, 두 번째 에세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강대국의 부상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그려냈다. 새로운 강자가 종래의 국제 규칙과 제도를 무시하여 국제 시스템이 혼란을 겪고, 종래의 OECD 선진국가는 성장이 둔화하고 사회가 분열하며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전망이다. 나머지 시나리오도 제목에서 암시하듯 강대국 간 경쟁적 공존이나, 세계 각지의 고립화, 문제가 악화되는 비극적 상황을 보여준다. 이 다섯 가지 시나리

오를 통해 유추할 때, *Global Trends 2040*은 글로벌 체제 변동의 핵심 변인을 미국의 주도나 아니냐, 중국 등 타 강대국의 부상이 어느 정도냐로 삼고 시나리오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IC, 2021).

두 번째 사례는 앞과 같은 NIC Global Trends의 이전 보고서인데, 시나리오 양식을 서신으로 택했기 때문에 인용했다. 2008년 대선 국면에서 발행한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를 보자. 이 보고서의 시나리오는 1) 서양이 없는 세계, 2) 10월의 서프라이즈, 3) 브릭의 부상, 4) 비국가 네트워크 정치의 네 가지였다. 이 중 첫째 시나리오를 발췌하여 다음에 인용하였다(NIC, 2008).

“상하이협력기구(SCO) 의장이 나토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 (2015년 6월 15일)

우리가 내일 만나 전략적인 대화를 시작할 것을 압니다만, 사전에 SCO에 대한 저의 생각과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15~20년 전만 해도 SCO가 나토와 동등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중략) 제 생각에, 그것은 탈레반을 진정시키려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당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을 때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게 옳겠습니다. 당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미국과 서구의 느린 성장 또는 무성장에 가까웠던 수년 동안에 국방 예산을 삭감했지요.”(후략) (NIC, 2008, p. 38)

서신 방식은 독자에게 마치 실제 저 편지가 쓰여질 듯 한 미래 체험의 느낌을 제공한다. 인용한 서신은 2015년에 중국이 부상함으로써 상하이협력기구가 나토만큼의 국제적 위상을 가지게 된 상황 속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흥미로운 점은 2008년 Global Trends 보고서의 첫 번째 시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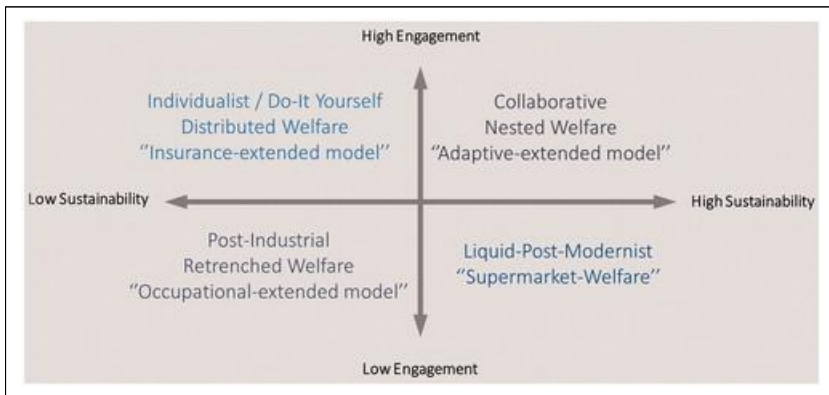
오가 서구의 쇠퇴를 우려한 것이었다면, 2021년 보고서의 첫째 시나리오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회복과 관련되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듯 두 시나리오의 제작 시점과 내용상의 향방은 다르지만, 세계 질서에서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경제와 기술 발전과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의 핵심 질문들이 각 시나리오의 기저에 놓여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세 번째 사례는 유럽위원회의 ICT 기반 사회혁신 프로그램 (ICT-Enabled Social Innovation, IESI)에서 수행한 복지 시스템의 미래연구다. Pasi와 Misuraca에 따르면, 유럽의 복지 2.0 탐색을 위한 미래연구는 지속가능성과 참여를 두 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삼아 2X2 매트릭스의 네 가지 시나리오 국면을 만들었다. 그림에서 보듯, 가로축은 지속가능성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구분되고, 세로축은 참여의 높고 낮은 수준에 따라 나뉜다. 각 시나리오는 복지가 어떻게 이해되고, 재정지원을 받는지, 디지털 변혁의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다루며 복지 시스템의 진화 경로를 살핀다. 네 개의 시나리오는 1) 개인주의자/DIY 분산형 복지 “보험-확장 모델”, 2) 후기산업화의 긴축형 복지 “직업-확장 모델”, 3) 리퀴드-포스트 모더니스트 “슈퍼마켓 복지”, 4) 협력적 등지형(내장형) 복지 “적응-확장 모델”로 명명되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 내용을 다음에 발췌 인용했다(Pasi & Misuraca, 2020).

“개인주의자/DIY 분산형 복지 “보험-확장 모델” 시나리오에서 지속가능성이 낮은 까닭은 노동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간 양극화가, 전체 인구와 “쥐여 짜여진 중산층(squeezed middle class)”의 임금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함께, 불가피하게 지역 및 국가의 전체 세수를 감소시킨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재정 부담

금과 사회적 공공 지출 사이의 균형을 흔드는데, 결국 복지 모델 뒤에 있는 전통적인 보험 체계 논리를 변화시킨다. (중략) 복지 수요에 대한 메커니즘을 강화하지 않으면 참여 수준도 영향을 받는다. 자기부담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예: 보완적인 보험 제도에 지불하는 것)에게는, 약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수요 때문에 일부 "참여"가 나타난다. (중략) 그러나 취약계층의 복지에 대한 접근 제한 문제와 사회적 및 디지털 배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후략) (Pasi & Misuraca, 2020, p. 171)

[그림 2-5] 복지 시스템의 미래 시나리오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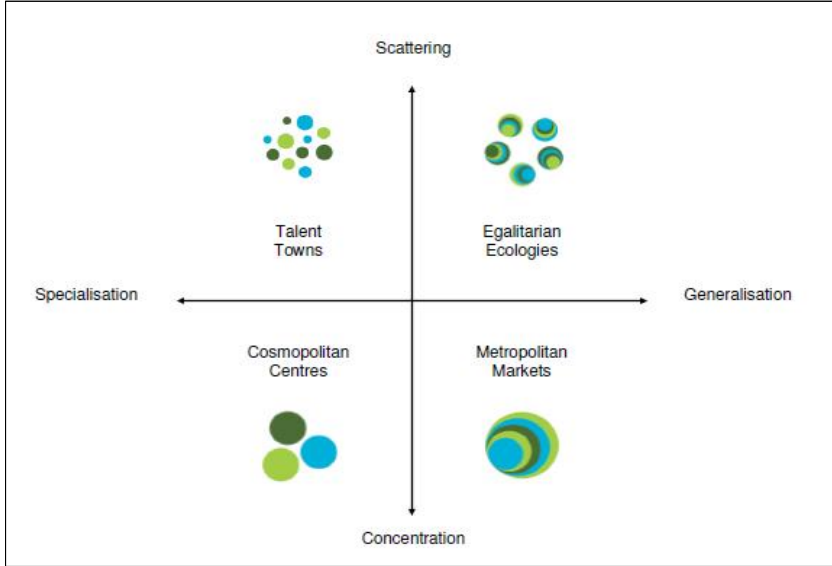
자료: Pasi, G., & Misuraca, G. (2020). Welfare 2.0: future scenarios of social protection systems in the digital age. *Policy Design and Practice*, 3(2), 163-176. Retrieved from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25741292.2020.1770965> 2021.10.11.

복지 시스템의 미래 시나리오 사례는 앞의 Global Trends 2040처럼 에세이 형식으로 기술되었다. 이 시나리오는 복지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다루는 내용의 수준 또한 대중적이지 않다. 네 개의 시나리오는 유럽의 복지 시스템에서 다루어야 할

노동시장, 복지재정, 민간 보험체계, 계층적 요인 등 미래상의 주요 요소가, 참여와 지속가능성의 변인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기술했다. 복지의 미래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디지털 기술을 유럽의 복지제도 개혁의 전략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논의가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는 않은 듯하다 (Pasi & Misuraca, 2020).

네 번째 사례는 시나리오를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경우다. 네덜란드 2040년 도시의 미래를 탐색한 다음의 시나리오는 핵심 변인을 도시의 형태와 일의 성격으로 삼았다. 도시의 형태가 분산될 것인가 집중될 것인가에 따라 이미지가 작은 원으로 나뉘어 있거나(상), 큰 원으로 집중되어 있는 모양(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의 성격이 종합적일 경우 하나의 원 내에 다양한 색상이 표현되어 있고(우), 일이 전문화될 경우 원의 색상이 하나로 그려져 있다(좌). 원의 크기는 도시 인구와 크기를 암시한다. 이러한 변인들은 시나리오 국면을 네 개로 나눈다. 1) 재능 타운형(Talent Towns), 2) 평등 생태형(Egalitarian Ecologies), 3) 세계시민 센터형(Cosmopolitan Centers), 4) 대도시 시장형(Metropolitan Markets)이 각기 그것이다. 이 시나리오 이미지는 단순한 도형적 형태로 그려져 있지만, 독자로 하여금 대단히 직관적으로 미래 도시상의 차별적인 전개를 인식하도록 돕는다(Bas ter, Gelauff & van der Horst, 2010).

[그림 2-6] 네덜란드 2040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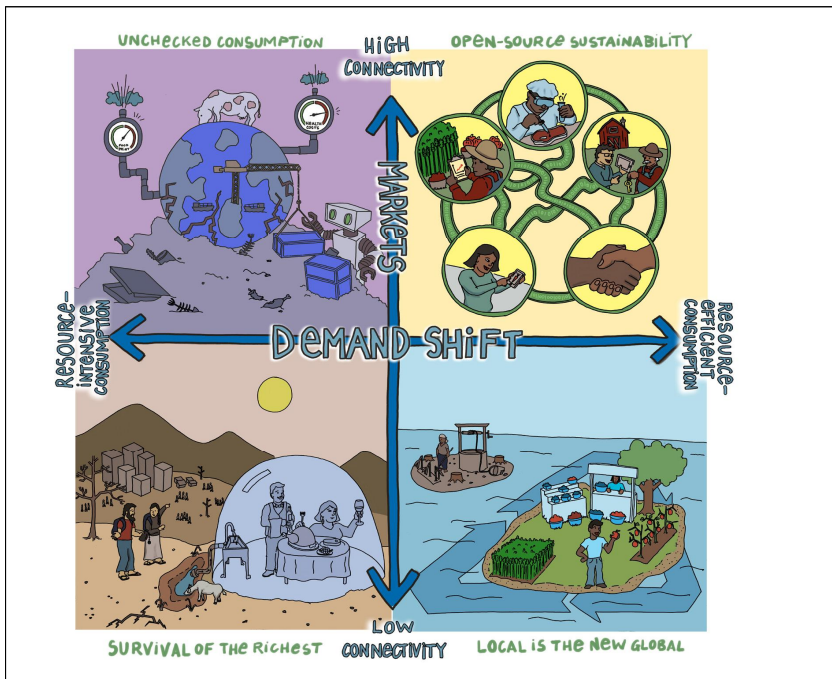
자료: Ter Weel, B., Gelauff, G. M., & van der Horst, A. (2010). *The Netherlands of 2040*.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p.15.

다섯 번째 사례도 이미지로 표현된 시나리오다. 다음 그림은 앞에서 언급한 WEF의 푸드 시스템의 미래상을 만화로 나타낸 것이다. 우상 면의 ‘오픈소스 지속가능성’ 시나리오는 비교적 밝은 색채로 표현되었으나, 좌상 면의 ‘통제되지 않는 소비’ 시나리오는 쓰레기 더미 위에 올려진 지구가 언제라도 폭발할 듯 높은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좌하 면의 ‘부자 생존’의 시나리오는 부유한 이들이 온실 같은 환경에서 양질의 식사를 하고 있는 반면, 그 바깥의 세상은 황량해 보인다. 우하 면의 ‘로컬이 새로운 글로벌’인 시나리오에서는 하나의 섬 안에 있는 자기완결적 밝은 미래가 보이지만 다른 섬에서는 황량함이 공존한다 (WEF, 2017, pp. 10-17).

미래 시나리오를 표현하는 방식은 에세이, 편지, 이미지 등 다양하다. 에세이 형식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별다른 꾸밈이 없이 그 양

상을 직접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미래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상상을 가능케 한다. 에세이 형식은 전문성이 높은 분야일수록 선호되며 대중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편지는 마치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달될 듯 한 몰입감을 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특정한 간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인해 시나리오 속에 담게 되는 미래 전개에 구체성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이미지는 직관적 이해를 일으키는 강점이 있으나, 표현상 시나리오 간 차이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시나리오 자체가 가지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모두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2-7] 글로벌 푸드 시스템의 미래 시나리오



자료: WEF. (2017). *Shaping the Future of Global Food Systems: A Scenarios Analysis*, WEF Global Agenda, p.1.



미래 시나리오 사례를 살핀 결과, 그 표현 양식은 연구의 목적이나 고객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하나의 연구 성과 내에서도 동시에 채택 가능하다. 예컨대 미국 NIC의 Global Trends 2020: Mapping the Global Future에서는 공적 서신, 일기, 사적 편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미지를 한 보고서의 시나리오 제작에 모두 활용하였다(NIC, 2004). 미래연구의 산출물이 어떠한 고객에게 읽힐 것인가에 따라 시나리오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등장도 가능하다. 이미 유튜브에서 미래 변화 전망이나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동영상도 넘친다. 기업들은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통해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느라 바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공공부문 및 정부부문에서 미래연구의 메시지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관측된다는 사실이다. 미래연구의 효용 및 대중적 활용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미래연구에 대한 개괄에서 시작하여, 방법론의 종류와 특성, 활용법에 대해 소개한 후 시나리오 방법론과 그 적용 사례를 설명하였다. 미래연구를 시작하거나 방법론을 활용할 연구자라면 미래연구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과 주의점을 먼저 파악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구나 일반적인 학술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또는 미래를 꼭 맞추기 위한 통상적 목표를 가질 경우, 미래연구의 강점과 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미래연구의 방법론은 수십 가지에 이르지만 그 대부분이 사회과학 일

반에서 사용하는 것들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 델파이, 트렌드 분석, 연관 분석 등은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고,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또한 현재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활용하는 추세다. 물론 시나리오 방법론과 같이 미래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특화된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훈련된 사회과학자라면 미래연구 방법론을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본 장에서 상술한 미래 시나리오 방법은 미래상에 대해 시각적이거나 서사적인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다. 특히 이상향적 단일 미래상을 가진 지도자나 일반 대중의 고정 관념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서사적 메시지만큼 좋은 게 없다. 따라서 많은 미래연구 기관과 연구자가 미래 시나리오를 프로젝트의 핵심 산출물로 삼고 그 표현 양식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가 한국 사회복지 제도의 미래를 고찰하는 첫 시도인 만큼 미래연구의 전통적인 방법 중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1) 미래 환경요인 분석, 2) 델파이를 통한 미래 이벤트 예측, 3) 불확실성 추출, 4) 시나리오 개발, 5) 정책적 함의 도출로 전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과정에서 불확실성 요인을 두 개로 추출한다면 2X2 매트릭스형 시나리오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 설계를 위한 요소와 전개에 대해서는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기여와 창의성의 발현을 기대한다.



## 제3장

###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

제1절 환경 분석 및 변화 예측 방법

제2절 미래 변화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파급 효과

제3절 선호 미래와 대응의 우선순위

제4절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



## 제3장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

### 제1절 환경 분석 및 변화 예측 방법

#### 1. 거시 환경 분석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의 분석과 예측은 사회보장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두 가지 작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환경 분석은 사회보장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 변화의 요소, 변동 요인, 변화 추이, 그리고 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여 분석하고, 개별적인 중요성과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넘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와 분석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라 영역별로 구분하여 환경 변화의 요소를 판단하게 된다. 외부 환경의 요소를 영역별로 구분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정치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요소로 구분하는 PEST를 널리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범주를 세분화하여 영역을 추가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법률적(legal) 요소를 추가하는 SLEPT, 환경적(environmental) 요소를 추가하는 STEEP(또는 STEPE), 그리고 윤리적(ethics) 요소와 인구적(demographic) 요소를 추가하는 STEEPLE 방식이 있다. 외부 환경의 영역을 범주화하는 방식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거시 환경 분석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개별 영역에 포함되는 세부 구성 요소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PEST 분류에 환경적 요인을 추가하는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nvironmental, Political) 관점에 따른 범주화된 분석 틀을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보장 환경 분석을 위한 STEEP 분류의 영역과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사회보장 환경 분석을 위한 STEEP 분류

영역	세부 구성 요소
사회(Society)	사회, 문화, 가치관, 갈등, 신뢰, 미디어, 인구 변동(수, 분포, 구조, 고령화, 출산) 등
기술(Technology)	과학, 기술 발전, 연구 개발(R&D), 자동화, 정보통신, 교통 및 이동, 의료·바이오 기술, 혁신 등
환경(Environment)	기후변화, 환경(오염, 보전), 생물(종) 다양성, 에너지(연료, 전기 등), 천연자원, 국토 이용, 해양 자원 등
경제(Economy)	경제 성장, GDP/GNP, 물가, 소비, 노동(시장), 실업, 산업구조, 무역, 금융, 이자율 재정, 조세 등
정치(Politics)	정치체제, 정당, 정치 지형, 리더십, 법률, 정책 목표와 내용, 법률, 규제, 행정제도, 국제 관계, 외교, 안보 등

자료: 필자 직접 작성

## 2. 미래 변화 예측: Delphi 조사

델파이는 1950년대 미국 RAND 연구소가 개발한 전문가 설문조사 기법으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시각을 제시하게 하면서 미래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병원 외, 2017b, p.82). 또한 델파이 방법은 한 사람의 전문가보다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며,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이 우월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이종성, 2001, p.29). 델파이는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근거하여 직관적, 탐색적, 그리고 규범적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전문가들의 판단을 양적 결과

로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 변화 분석 또는 미래연구에 활용하는 델파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2회 이상의 설문조사로 구성한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조사 결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에서 구체화되는 양상을 나타내며, 질적인 결과에서 양적인 결과로 전환되기도 한다. 조사 결과의 구체화와 양적 자료 전환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판단과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며, 동시에 논의하는 이슈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델파이 방법에서 가장 핵심은 응답 대상자인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는 것이다. 전문가 패널 구성의 핵심 요건은, 첫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 환경의 미래 변화를 분석·예측하는 경우에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패널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패널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조사에 참여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전문성이 델파이 조사에서 활용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델파이 조사는 2차례 이상 반복하여 실시된다는 점에서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전문가 패널의 구성원이 이탈하지 않는 것은 델파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이 된다.

사회보장 환경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델파이 조사는 총 3차례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또한 경제, 사회복지, 보건, 행정, 환경, 과학기술 등 분야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3차례 조사에 모두 응답한 전문가는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8명이다. 응답자를 현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연구자 18명, 대학교수 16명,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재직자 4명이다. 또한 응답자의 전공 및 현재 담당하고 있는 영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보건·복지학 6명, 경제

학, 정치학, 정책·행정학이 각 5명, 사회학과 과학기술이 각 4명, 그리고 교육, 노동, 환경·에너지 전공자가 각 3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3-2〉 델파이 조사 응답 전문가 현황

번호	소속기관	전공	번호	소속기관	전공
1	대학교	정치	20	대학교	행정
2	연구기관	노동	21	공공기관	사회
3	대학교	교육	22	연구기관	환경
4	연구기관	경제	23	연구기관	교육
5	대학교	보건·복지	24	연구기관	보건·복지
6	연구기관	행정	25	대학교	행정
7	연구기관	노동	26	연구기관	사회
8	대학교	경제	27	대학교	경제
9	대학교	보건·복지	28	연구기관	노동
10	대학교	보건·복지	29	연구기관	보건·복지
11	대학교	행정	30	연구기관	에너지
12	연구기관	과학기술	31	연구기관	경제
13	연구기관	과학기술	32	대학교	정치
14	연구기관	사회	33	공공기관	정치
15	대학교	사회	34	공공기관	행정
16	대학교	보건·복지	35	대학교	과학기술
17	연구기관	정치	36	공공기관	정치
18	연구기관	경제	37	대학교	교육
19	연구기관	환경	38	대학교	과학기술

자료: 필자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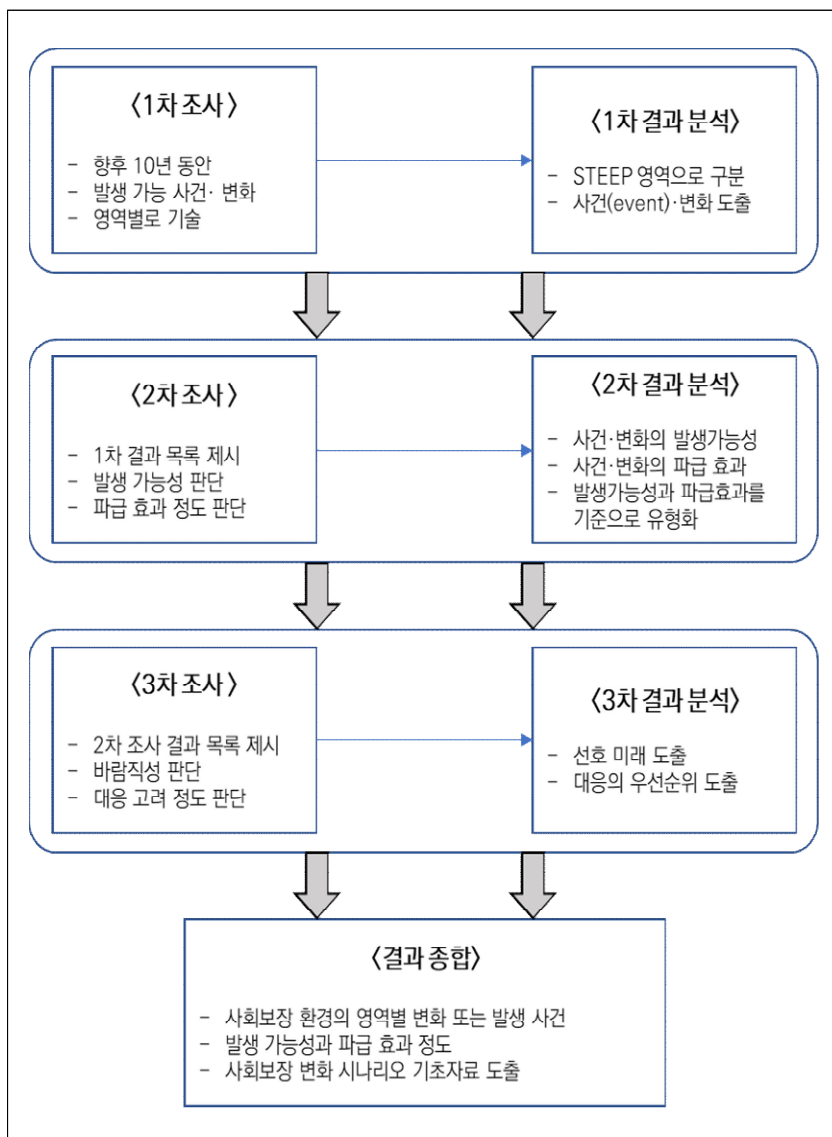
### 3.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의 미래 예측 방법

사회보장을 둘러싼 환경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거시 환경 분석과 추세 변화 예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STEEP 방식을 기준으로 하고,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 환경의 영역별로 미래 변화 추세를 예측하고자 한다.

미래 예측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을 둘러싼 환경 전반을 영역별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event)이나 변화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식별된 사건이나 변화의 발생 가능성, 영향력 등을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화 추세를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둘러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와 사건을 추출하여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 된다. 환경 변화와 발생 가능 사건의 추출과 정리는 전문가 대상 델파이 1차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미래 예측을 위한 델파이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에서 추출된 다양한 변화 추세와 발생 가능 사건을 목록화하고, 이러한 변화와 사건이 향후 10년의 기간 동안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발생하는 경우에 파급 효과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1차 조사에서 추출된 변화와 사건이 무엇인지 조사 대상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하는 것이며, 해당 변화와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집약하는 것이다. 응답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정 사건 또는 변화 추세의 발생 가능성과 파급 효과 정도를 양적 데이터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발생 가능성이 높고 파급 효과가 큰 경우와, 반대로 발생 가능성이 낮고 파급 효과가 낮은 변화 또는 사건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 예측 방법 및 절차



자료: 필자 직접 작성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선호 미래와 변화 대응에 있어 고려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파악한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발생 가능성이 낮고 파급 효과가 낮은 변화와 사건을 제외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파급 효과가 큰 변화와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파급 효과가 적은 변화와 사건, 그리고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파급 효과가 큰 변화와 사건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응답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목록에 제시한 사건과 변화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또는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응답한다. 또한 향후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 해당 사건 또는 변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응답하도록 하였다. 즉 선호 미래와 대응의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를 확인함으로써 미래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STEEP 방식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10년의 기간 동안 사회보장 환경의 미래 변화 추세를 정리한다.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 추이, 변화의 요소와 내용, 특정 사건 또는 변화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변화의 영향력 등을 영역별로 파악하여 정리한다. 이를 통해서 사회보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을 추출하고, 다음 장에서 외부 환경이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그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제2절 미래 변화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파급 효과

### 1. 미래 변화 및 발생 사건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환경 변화를 STEEP 방식

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영역별로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세한 응답 내용은 이 보고서의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정치 영역에서 향후 10년의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또는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정치체제의 구조 변화였다. 현재의 권력구조는 헌법 개정을 통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제도 및 선거 참여 연령의 변경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여성, 청년, 노인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동시에 집단 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에 대해서 국민의 대의기구(입법부)가 효과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언급이 적지 않았다. 반면에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될 것이며,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정책과 규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역할 증대는 재정지출 증가로 연계될 것이나, 증세 같은 추가적인 재원 조달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병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과 역할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반면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패권 경쟁으로 국제 관계 악화와 무역 등의 국제 경제 상황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그리고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변화이다. 기술 발전과 더불어 고용 감소와 실업 증가,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 형태 및 고용 관계의 다양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및 플랫폼 경제의 가속화는 계층 간, 기업 간 그리고 산업 영역 간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며, 승자 독식의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불가피할 것이며, 국제

경제와 교역에서 불확실성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대)빈곤층의 증가,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심화가 지속될 것이며, 데이터와 정보가 경쟁우위의 핵심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격차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 영역의 미래 변화 추세와 관련하여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와 저출산 현상 지속, 1인 가구의 증가와 비혼 인구 증가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9) 및 장래 가구특별추계(2019)의 결과를 보면 향후 10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예측에 있어서 인구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추세는 변동 가능성이 없는 실질적인 상수(常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인구 구조 변동을 제외하면, 사회 영역의 미래 변화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회 갈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대 간, 지역 간, 성별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외국인과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은 인종 간, 국적 간 갈등이라는 새로운 갈등을 낳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활동의 증가는 비대면 접촉의 증가와 개인화 추세의 강화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재택근무 증가와 외부 활동 감소는 주거 공간으로서 집의 역할과 기능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회 영역의 미래 변화로서 주목할 점은 현재의 교육기관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인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존폐와 통폐합은 불가피하며, 초중등 교육기관 역시 지역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체제 변화로 인하여 학교 교육의 위상이 하락하고, 반면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술 영역의 환경 변화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확산이라는 추세와 새로운 기술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의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은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통신 기술,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생체정보 기술, 스마트 팩토리, 로봇, 지능형 자동화, 반도체, 양자컴퓨터, 우주 기술, 교통수단 변화, 자율주행, 저공해 운송 수단, 해저 개발, 유전공학과 바이오 기술, 3D 프린팅 등을 들 수 있다. 기술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 문제와 기술 통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 정보 보안과 사생활 침해 문제, 정보 통제와 독점, 확증 편향, 사이버 범죄 등을 언급하고 있다.

환경 영역의 미래 변화는 에너지, 환경오염, 기후 변화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에너지 영역의 경우 원자력과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증가, 탄소중립, 소비 증가로 인한 에너지 부족, 그리고 에너지 격차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등 모든 영역에서 악화될 것이며, 오염 문제로 인하여 인접국가와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확대된다는 언급도 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온난화,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이 지속될 것이며, 이는 식량자원 부족, 물 부족, 그리고 환경성 질환과 감염병이 확대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미래 변화에 대한 매우 다양한 견해와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응답 결과를 STEEP 방식에 근거하여 변화 추세와 발생 가능 사건을 도출하여 목록화하였다. 정리된 목록을 바탕으로 사회보장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 변화와 사건을 정리하였으며, 연구진 회의를 거쳐 주요 변화와 사건을 선정하여 59개 항목으로 재정리하였다. 선정된 미래 변화와 사건의 내용은 다음에 제시하는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1차 델파이 결과에 따른 미래 변화와 발생 가능 사건

S : 사회	T : 기술	E : 경제	E : 환경	P :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간 갈등 격화</li> <li>• 성별 갈등 심화</li> <li>• 다문화 갈등 증가</li> <li>• 출산율 추가 하락</li> <li>• 자살율 증가</li> <li>• 존엄사 논란 확대</li> <li>• 청년취직 연령 상승</li> <li>• 수도권 인구 집중</li> <li>• 일부 지자체 통합합</li> <li>• 다양한 가족 합법화</li> <li>• 학교교육 약화</li> <li>• 사교육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 장벽 해소(AI)</li> <li>• 정보 독점과 편중</li> <li>• 인공지능 활용 윤리</li> <li>•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li> <li>• 무인 첨단공장 본격화</li> <li>• 양자컴퓨터 상용화</li> <li>• 이동시간 급격 단축</li> <li>• 완전 자율주행 버스</li> <li>• 대인서비스 로봇</li> <li>• 일상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성장경제</li> <li>• 여성 경제활동 증가</li> <li>• 불안정 일자리 증가</li> <li>• 고용형태 다변화</li> <li>• 노동 조적율 감소</li> <li>• 청년 실업 원화</li> <li>• 기업간 격차 확대</li> <li>• 온라인 시장 주류화</li> <li>• 정보를 통한 이윤 확대</li> <li>• 전자화폐 보편화</li> <li>• 사회적 책임 경영</li> <li>• off-shoring</li> <li>• 국제경제 영향력 증가</li> <li>• 중국경제 의존도 증가</li> <li>• 주먹가려 급격한 상승</li> <li>• 부동산 버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 증가 중지</li> <li>•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li> <li>• 그리드 패리티</li> <li>• 탄소중립 법률 제정</li> <li>• 환경오염 심각</li> <li>• 쓰레기 매립 갈등 증폭</li> <li>• 탈플라스틱 국제 압력</li> <li>• 식량부족 현상</li> <li>• 자연재해 증가</li> <li>• 기후변화 질병 증가</li> <li>• 팬데믹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장 목표 유지</li> <li>• 정부 역할 강화</li> <li>• 자국우선주의</li> <li>• 정치적 포퓰리즘</li> <li>• 디지털 정치 확산</li> <li>• 행정부 영향력 확대</li> <li>• 정치권 세대교체</li> <li>• 노인 정치적 영향 확대</li> <li>• 여성 정치적 영향 확대</li> <li>• 청년 정치적 영향 확대</li> <li>• 지방정부 위상 강화</li> </ul>

자료: 필자 직접 작성

1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5개 영역별 미래 변화를 정리한 결과 총 59개 항목으로 축약하였다. 전체 59개 항목 중 경제 영역이 27개 항목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 12개, 환경과 정치 각 11개, 그리고 기술 9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항목의 미래 변화는 델파이 2차 조사의 설문 항목으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사회 영역에 속하는 미래 변화 중에서 인구 고령화, 노인 인구 증가, 1인 가구 증가와 4인 가구 증가 등은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미래 예측 기간이 10년이며,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조 변화는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판단이나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2. 미래 변화·사건의 발생 가능성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추출된 미래 변화·사건이 향후 10년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응답은 <표 3-3>에 정리한 바와 같다. 발생 가능성은 9점 척도를 기준으로 38명의 전문가가 응답한 수치

를 평균한 값이며, 평균이 높을수록 해당 변화 및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표 3-3〉 미래 변화·사건의 발생 가능성

미래 변화·사건 항목	발생 가능성	미래 변화·사건 항목	발생 가능성
불안정 일자리 증가	8.11	세대 간 갈등 격화	6.58
자연재해 증가	8.05	다문화 갈등 증가	6.58
정보를 통한 이윤 확대	7.76	전자화폐 보편화	6.58
기후변화 질병 증가	7.66	출산율 추가 하락	6.55
인공지능 활용 윤리 논란	7.63	지역 간 이동시간 급격 단축	6.53
팬데믹 발생	7.61	정치적 포퓰리즘	6.47
고용형태 다변화	7.61	식량부족 현상	6.45
온라인 시장 주류화	7.61	사회적 책임 경영	6.45
쓰레기 매립 갈등 증폭	7.61	완전 자율주행 버스	6.42
저성장 체제	7.47	노인 정치적 영향 확대	6.34
일부 지자체 통폐합	7.37	정부 역할 강화	6.24
기업 간 격차 확대	7.24	중국경제 의존도 증가	6.11
디지털 정치 확산	7.24	국제경제 영향력 증가	6.11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7.21	청년 정치적 영향 확대	6.08
탄소중립 법률 제정	7.16	자살률 증가	6.08
여성 경제활동 증가	7.13	대인서비스 로봇 일상화	6.00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	7.05	사교육 확대	5.92
환경오염 심각	7.03	노동 조직률 감소	5.87
정보 독점과 편중	7.03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5.82
탈플라스틱 국제 압력	7.00	언어 장벽 해소(AI)	5.76
존엄사 논란 확대	6.97	자국 우선주의	5.74
무인 첨단공장 본격화	6.87	off-shoring	5.68
수도권 인구 집중	6.82	학교교육 약화	5.68
다양한 가족 합법화	6.76	부동산 버블	5.61
정년퇴직 연령 상승	6.74	지방정부 위상 강화	5.58
성별 갈등 심화	6.68	주택가격 급격한 상승	5.45
양자컴퓨터 상용화	6.63	정치권 세대교체	5.45
여성 정치적 영향 확대	6.63	원자력 발전 증가 없음	5.39
경제성장 정책 목표 유지	6.63	행정부 영향력 확대	5.13
		청년 실업 완화	3.92

자료: 미래 변화 예측에 대한 델파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직접 작성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불안정한 일자리(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플랫폼 노동 등) 증가(8.11/9.00), 자연재해(가뭄, 홍수, 국지성 호우 등) 증가(8.05/9.00)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이윤 창출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증가,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에 대한 논란 확대, 제2의 팬데믹 발생, 고용형태 다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고용 증가 등이 선정되었다.

반면에 청년 실업문제의 완화의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부의 역할 및 영향력 확대, 원자력 발전소 증가 중지, 정치권 세대교체,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지방정부의 위상 강화 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발생 가능성이 낮은 항목 중 일부는 내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였으며, 1차 델파이 조사의 주관식 응답 내용과 응답 전문가 일부와의 면담을 통해 결과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미래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노인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경우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은, 현재 노인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향후 정치적 영향력의 추가적인 증가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정치적 영향력은 현재 여성의 영향력이 낮은 상황에서 향후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미래 변화·사건으로는 출산율 추가 하락, 자살률 증가, 행정부의 역할과 영향력 확대 등이 있다.

### 3. 미래 변화·사건의 파급 효과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추출된 미래 변화·사건의 파급 효과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표 3-4>에 정리하였다. 발생 가능성과 동일하게 파급 효과 정도는 9점 척도를 기준으로 응답한 수치를 평균한 값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변화 및 사건의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래 변화·사건의 파급 효과 정도는 발생 가능성과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파급 효과가 가장 크다고 응답한 항목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이며, 다음으로는 자연재해 증가, 팬데믹 발생,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질병 증가, 저성장 체제 고착화, 출산율 추가 하락, 고용형태 다변화 등이 제시되었다.

<표 3-4> 미래 변화·사건의 파급효과

미래 변화·사건 항목	파급 효과	미래 변화·사건 항목	파급 효과
불안정 일자리 증가	7.74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6.34
자연재해 증가	7.66	디지털 정치 확산	6.24
팬데믹 발생	7.66	전자화폐 보편화	6.18
기후변화 질병 증가	7.45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	6.13
저성장 체제	7.42	언어 장벽 해소(AI)	6.11
출산율 추가 하락	7.42	정부 역할 강화	6.08
고용형태 다변화	7.34	다양한 가족 합법화	6.05
환경오염 심각	7.32	여성 정치적 영향 확대	6.05
정보를 통한 이윤 확대	7.18	지역 간 이동시간 급격 단축	6.03
온라인 시장 주류화	7.13	자국 우선주의	5.92
정보 독점과 편중	7.13	노인 정치적 영향 확대	5.84
기업 간 격차 확대	7.05	경제성장 정책 목표 유지	5.82
식량부족 현상	7.05	off-shoring	5.79
수도권 인구 집중	6.92	청년 정치적 영향 확대	5.76
인공지능 활용 윤리 논란	6.84	대인서비스 로봇 일상화	5.76
탄소중립 법률 제정	6.82	완전 자율주행 버스	5.74
탈플라스틱 국제 압력	6.76	존엄사 논란 확대	5.71
부동산 버블	6.74	중국경제 의존도 증가	5.68
세대 간 갈등 격화	6.71	사회적 책임 경영	5.61

미래 변화·사건 항목	파급 효과	미래 변화·사건 항목	파급 효과
쓰레기 매립 갈등 증폭	6.68	지방정부 위상 강화	5.58
성별 갈등 심화	6.68	정치권 세대교체	5.55
무인 첨단공장 본격화	6.61	원자력 발전 증가 없음	5.50
주택가격 급격한 상승	6.61	자살률 증가	5.45
일부 지자체 통폐합	6.58	학교교육 약화	5.42
여성 경제활동 증가	6.55	사교육 확대	5.21
양자컴퓨터 상용화	6.45	노동 조직률 감소	5.21
정치적 포퓰리즘	6.45	국제경제 영향력 증가	5.13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6.45	행정부 영향력 확대	4.79
다문화 갈등 증가	6.39	청년 실업 완화	4.29
정년퇴직 연령 상승	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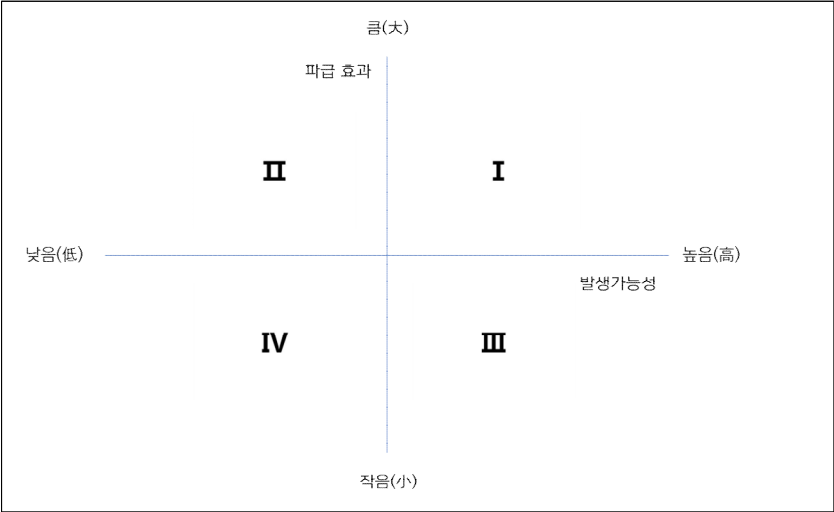
자료: 미래 변화 예측에 대한 델파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직접 작성

파급 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미래 변화·사건으로는 청년 실업 완화 항목이다. 다음으로 행정부 영향력 확대, 국제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 증가, 노조 조직률 감소, 학교 교육 약화와 사교육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 4. 미래 변화·사건의 유형: 발생 가능성과 파급 효과

발생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미래 변화·사건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파급 효과가 큰 I 유형부터 발생 가능성이 낮고, 파급 효과가 작은 IV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3] 미래 변화·사건의 유형: 발생 가능성, 파급 효과



자료 : 필자 직접 작성

2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 미래 변화·사건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다시 STEEP 영역별로 구분한 결과는 <표 3-5>에 정리하였다.

<표 3-5> 유형별, 영역별 미래 변화·사건

유형	영역	미래 변화·사건
I 발생 가능성 高 파급 효과 大	사회(S)	성별 갈등 심화, 정년퇴직 연령 상승, 수도권 인구 집중, 일부 지자체 통폐합
	기술(T)	정보 독점과 편중, 인공지능 활용 윤리 논란, 무인 첨단공장 본격화, 양자컴퓨터 상용화
	경제(E)	저성장 체제, 여성 경제활동 증가, 불안정 일자리 증가, 고용 형태 다변화, 기업 간 격차 확대, 온라인 시장 주류화, 정보를 통한 이윤 확대
	환경(E)	탄소중립 법률 제정, 환경오염 심각, 쓰레기 매립 갈등 증폭, 탈플라스틱 국제 압력, 자연재해 증가, 기후 변화·환경오염에 따른 질병 증가, 팬데믹 발생

유형	영역	미래 변화·사건
II 발생 가능성 低 파급 효과 大	사회(S)	세대 간 갈등 격화, 다문화 갈등 증가, 출산율 추가 하락
	경제(E)	주택가격 급격한 상승, 부동산 버블
	환경(E)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식량부족 현상
	정치(P)	정치적 포퓰리즘
III 발생 가능성 高 파급 효과 小	사회(S)	존엄사, 적극적 안락사 논란 확대, 다양한 가족 합법화
	기술(T)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
	환경(E)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정치(P)	경제성장 최우선 목표 유지, 여성 정치적 영향력 확대, 디지털 정치 확산
IV 발생 가능성 低 파급 효과 小	사회(S)	자살률 증가, 학교교육 약화, 사교육 확대
	기술(T)	언어 장벽 해소(AI), 지역 간 이동시간 급격 단축, 완전 자율주행 버스, 대인서비스 로봇 일상화
	경제(E)	노조 조직률 감소, 청년 실업 완화, 전자화폐 보편화, 사회적 책임 경영, off-shoring, 국제경제 영향력 증가, 중국경제 의존도 증가
	환경(E)	원자력 발전 증가 없음
	정치(P)	정부 역할 강화, 자국 우선주의, 행정부 영향력 확대, 정치권 세대교체, 노인 정치적 영향력 확대, 청년 정치적 영향력 확대, 지방정부 위상 강화

자료: 미래 변화 예측에 대한 델파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직접 작성

## 제3절 선호 미래와 대응의 우선순위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발생 가능성이 낮고 파급 효과가 작은 미래 변화·사건을 제외하고 3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3차 조사에서 제외 한 항목은 <표 3-5>에서 유형 IV에 해당하는 22개이며, 따라서 37개 항목에 대해서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제시된 미래 변화·사건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도 또는 바람직한 정도, 그리고 향후 미래 대응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전자의 항목은 선호미래(preferable futures)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후자의 항목은 미래 대응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 1. 미래 변화·사건의 바람직성(desirability): 선호미래

향후 10년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미래 변화·사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라고 답하고 있다. 그리드 패리티란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과 석유,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같아지는 균형점을 지칭한다(신동현, 임형우, 조하현, 2019, p.40).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탄소중립 법률 제정 등이 바람직한 미래 변화라고 응답하고 있다.

환경 영역 외에 바람직한 미래의 변화로 제시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여성 경제활동 증가, 다양한 가족 형태의 합법화, 디지털 정치 확산, 양자 컴퓨터 상용화, 그리고 정년퇴직 연령의 상승 등이 있다.

〈표 3-6〉 미래 변화·사건의 소망성

미래 변화·사건	소망성	미래 변화·사건	소망성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7.97	무인 첨단공장 본격화	4.50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7.66	일부 지자체 통폐합	4.18
여성 정치적 영향 확대	7.39	부동산 버블	3.79
탄소중립 법률 제정	7.26	탈플라스틱 국제 압력	3.53
여성 경제활동 증가	7.16	정치적 포퓰리즘	3.26
다양한 가족 합법화	6.76	쓰레기 매립 갈등 증폭	2.76
디지털 정치 확산	5.97	불안정 일자리 증가	2.71
양자컴퓨터 상용화	5.92	기업 간 격차 확대	2.66
정년퇴직 연령 상승	5.89	정보 독점과 편중	2.66
인공지능 활용 윤리 논란	5.50	저성장 체제	2.63
고용형태 다변화	5.47	수도권 인구 집중	2.61
정보를 통한 이윤 확대	5.34	출산율 추가 하락	2.37
경제성장 정책 목표 유지	5.26	다문화 갈등 증가	2.32
온라인 시장 주류화	5.24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	2.26
존엄사 논란 확대	5.18	세대 간 갈등 격화	2.26
		환경오염 심화	2.21
		성별 갈등 심화	2.18
		식량부족 현상	2.13
		자연재해 증가	2.03
		주택가격 급격한 상승	1.95
		기후변화 질병 증가	1.84
		팬데믹 발생	1.68

자료: 미래 변화 예측에 대한 델파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직접 작성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 변화·사건으로 응답자들의 의견이 수렴한 항목은 팬데믹(대규모 감염병) 발생과 기후 변화·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증가이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 항목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자연재해 증가,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자원 부족, 성별 갈등 심화, 환경오염의 심각성, 세대 간 갈등 격화

등을 들고 있다. 질병, 재해, 오염, 갈등 같은 현상을 동반하는 미래 변화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미래 변화·사건을 선호미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선호미래는 보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특정인의 선호는 다른 사람의 비선호가 될 수 있으며, 특정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미래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중고령층에게는 바람직한 것이나, 청년층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선호가 상반될 수 있으며, 첨단 무인공장의 본격화는 고용 감소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른 선호미래에 보편성이 있다고 단언하기보다 조사에 응답자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2. 미래 대응의 고려 정도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 또는 사건 중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반대로 발생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낮거나, 대응이 아닌 회피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바람직한 변화라고 판단한다면 대응 또는 개입이 아닌 관망을 하는 것은 타당한 선택이다.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미래 변화 또는 사건에 대한 고려 정도가 어떠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미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을 신설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혁하고자 할 때 해당 변화 또는 사건을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표 3-7>에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3-7〉 미래 변화·사건의 고려 정도

미래 변화·사건	고려 정도	미래 변화·사건	고려 정도
불안정 일자리 증가	8.00	정보를 통한 이윤 확대	6.97
출산율 추가 하락	8.00	쓰레기 매립 갈등 증폭	6.89
팬데믹 발생	7.87	탈플라스틱 국제 압력	6.82
기후변화 질병 증가	7.74	성별 갈등 심화	6.82
환경오염 심각	7.68	식량부족 현상	6.82
고용형태 다변화	7.55	디지털 정치 확산	6.79
저성장 체제	7.55	다문화 갈등 증가	6.71
탄소중립 법률 제정	7.53	다양한 가족 합법화	6.61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7.42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	6.53
정보 독점과 편중	7.37	정년퇴직 연령 상승	6.50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7.34	경제성장 정책 목표 유지	6.42
기업 간 격차 확대	7.29	일부 지자체 통폐합	6.37
주택가격 급격한 상승	7.29	무인 첨단공장 본격화	6.32
자연재해 증가	7.24	온라인 시장 주류화	6.26
여성 경제활동 증가	7.21	존엄사 논란 확대	5.89
수도권 인구 집중	7.21	정치적 포퓰리즘	5.76
부동산 버블	7.11	양자컴퓨터 상용화	5.68
여성 정치적 영향 확대	7.08		
세대 간 갈등 격화	7.05		
인공지능 활용 윤리 논란	7.00		

자료: 미래 변화 예측에 대한 델파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직접 작성

미래 대응을 위한 고려 정도가 높은 변화와 사건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변화와 사건이다. 또 다른 유형은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경우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미래 변화와 사건으로는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 출산율의 추가 하

락, 팬데믹, 환경 오염, 저성장 체제 고착, 자연재해 증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탄소중립 법률 제정,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이 해당한다.

미래 대응을 위한 고려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미래 변화·사건은 정책적 대응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성별 갈등 심화, 쓰레기 매립 관련 갈등 증폭, 다문화 갈등 증가, 정치적 포퓰리즘 등과 같은 미래 변화·사건은 정책적 대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일부 지자체 통폐합, 정년퇴직 연령 상승 등과 같은 미래 변화는 인구구조 변화 적응의 필연적 결과이며, 정책적 대응이 상황을 반전시킬 여지가 낮다. 온라인 시장 주류화, 디지털 정치 확산, 첨단 무인공장, 양자컴퓨터 등과 같은 기술적 진보의 결과는 정책적 대응이나 개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 정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 제4절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

### 1. 미래 개념과 식별

미래 변화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이 있고,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일한 실체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래의 다양한 속성과 모습을 구분하여 개념화함으로써 미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과 예측 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개념과 관련하여 가능미래(possible futures), 타당미래(plausible futures), 유력미래

(probable futures), 그리고 선호미래(preferable futures)의 네 가지 개념을 들 수 있다(Bland, J., & Westlake, S., 2013, p.9). 4가지 미래 개념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정리하고자 하며, 미래 개념을 식별하는 방식은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미래 개념을 이미지로 표현하면 [그림 3-4]와 같다.

첫째, 가능미래(possible futures)는 현재의 과학 지식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범주를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미래 변화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미래 변화와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며, 델파이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전체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타당미래(plausible futures)는 가능미래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며, 타당미래는 현재의 과학이론이나 지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범주의 미래 변화와 사건이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목록으로 만든 59개 항목이 타당미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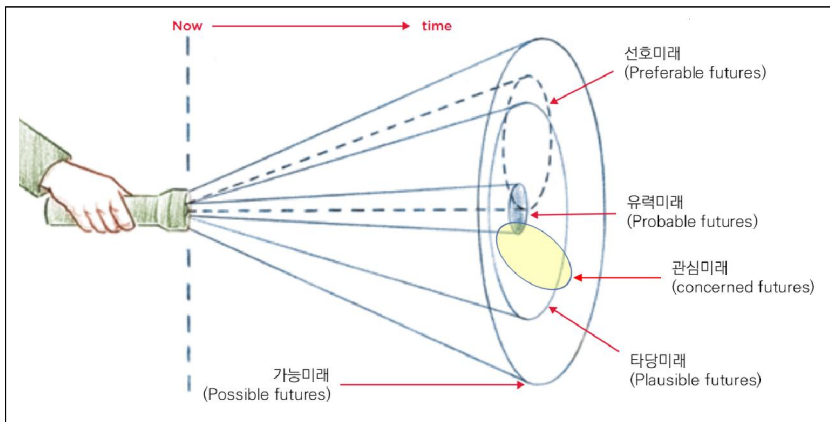
셋째, 유력미래(probable futures)는 현재 추세를 연장하여 추론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를 지칭하는 것이며, 타당미래에서 범위를 더욱 좁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미래 변화와 사건을 의미한다. 59개 항목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발생 가능성 점수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을 유력미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선호미래(preferable futures)는 발생 가능성과 관계없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미래, 또는 바람직한 상태의 미래를 의미한다. 선호미래는 델파이 3차 조사의 바람직성(desirability)의 점수 값이 높은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개의 미래 개념에 관심미래(concerned futures)를 추가하고자 한다. 관심미래는 미래 변화 또는 사건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며, 그 파급 효과도 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관심미래는 미래 변동 대응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고, 정책적 중요도가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심미래를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파급 효과가 크고, 또한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바람직성의 수치가 낮은 미래 변화와 사건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4] 퓨처스 콘(futures cone)을 활용한 미래 개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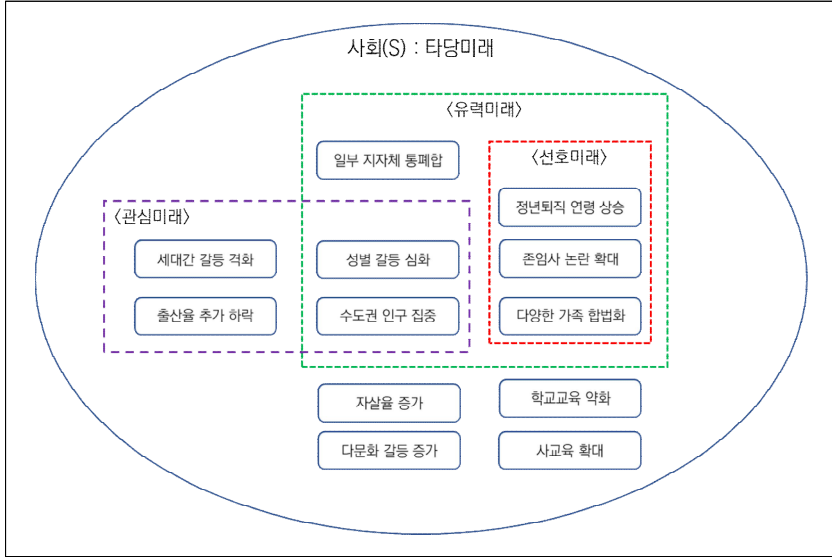
자료: Bland, J., & Westlake, S. (2013). *Don't Stop Thinking About Tomorrow: A modest defence of futurology*. Nesta, London, May. p.9의 내용을 수정·보완함.

## 2. STEEP 영역별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

### 가. 사회(S) 영역

사회 영역의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인구구조 변화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낮은 출산력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3~4인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1인 가구의 두드러진 증가로 대표되는 가구구조 변화를 들 수 있다.

[그림 3-5] 미래 개념과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 사회 영역



자료: 필자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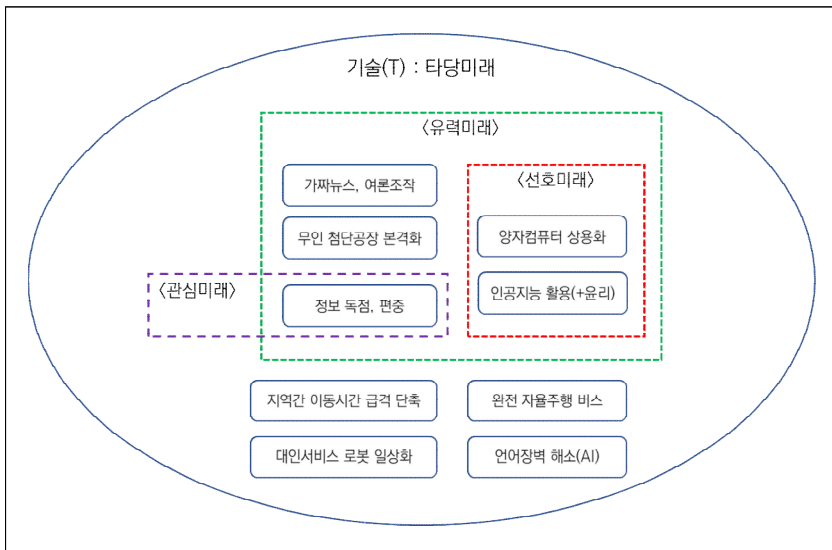
인구구조 변화를 제외하면, 사회 영역의 타당미래는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개 항목의 변화·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 타당미래 중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인구 집중, 성별 갈등 심화, 다양한 가족 합법화 등 6개 항목의 변화·사건은 유력미래로 볼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미래 변화에 해당하는 선호미래는 정년퇴직 연령 상승, 존엄사 논란의 확대, 다양한 가족 합법화 3개 항목이며, 정책적 대응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관심미래로는 세대 간 갈등 격화, 성별 갈등 심화, 출산율 추가 하락, 수도권 인구 집중의 4개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 나. 기술(T) 영역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의 기술 영역에서 미래 변화·사건은 다른 영역

에 비해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다. 타당미래에 해당하는 미래 변화·사건은 9개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중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력미래는 양자컴퓨터 상용화,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 문제,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무인 첨단공장 본격화, 그리고 정보 독점과 편중 5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미래 개념과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 기술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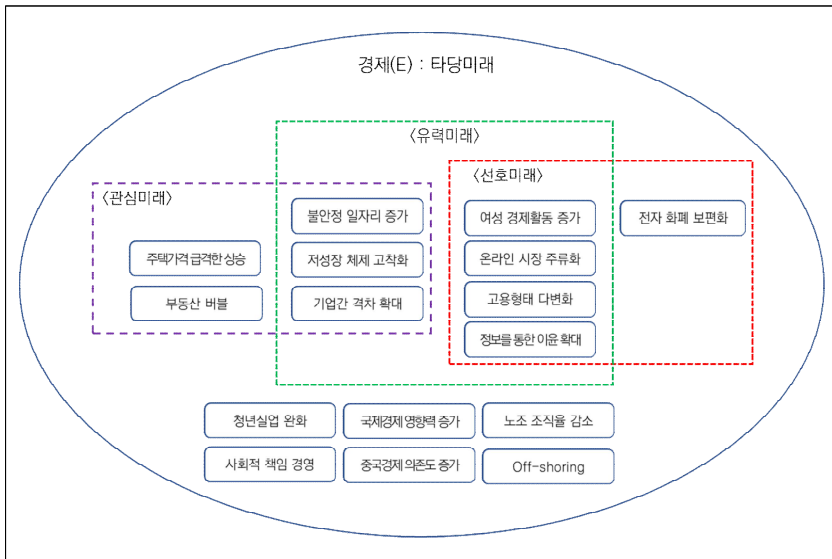
자료: 필자 직접 작성

기술 영역의 선호미래와 관심미래는 모두 유력미래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은 관심미래는 정보 독점과 편중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바람직한 성격을 갖는 선호미래는 양자컴퓨터의 상용화와 인공지능 활용 및 이에 따른 윤리 문제라 할 수 있다.

## 다. 경제(E) 영역

경제 영역의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항목을 보이고 있다. 경제 영역의 타당미래는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정 일자리 증가, 여성 경제활동 증가, 청년실업 완화 등 총 16개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7] 미래 개념과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 경제 영역



자료: 필자 직접 작성

경제 영역의 미래 변화·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른 영역에 비해 개인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 16개 항목의 타당미래 중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력미래로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은 7개이며, 유력미래의 내용은 불안정 일자리 증가, 저성장 체제 고착화, 기업 간 격차 확대, 여성 경제활동 증가, 온라인 시장 주류화, 고용형태 다변화, 정

보를 통한 이윤 확대이다.

경제 영역의 미래 환경 변화로 부정적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관심 미래는 5개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5개 항목 중에서 불안정 일자리 증가, 저성장 체제 고착화, 기업 간 격차 확대의 3개 항목은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반면에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 버블의 2개 항목은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 영역의 선호미래는 총 5개 항목으로, 이 중 여성 경제활동 증가, 온라인 시장 주류화, 고용형태 다변화, 정보를 통한 이윤 확대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전자 화폐 보편화는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라. 환경(E) 영역

환경 영역의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는 총 11개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발생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11개의 타당미래 항목 중에서 식량자원 부족 현상과 원자력 발전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2개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이 유력미래에 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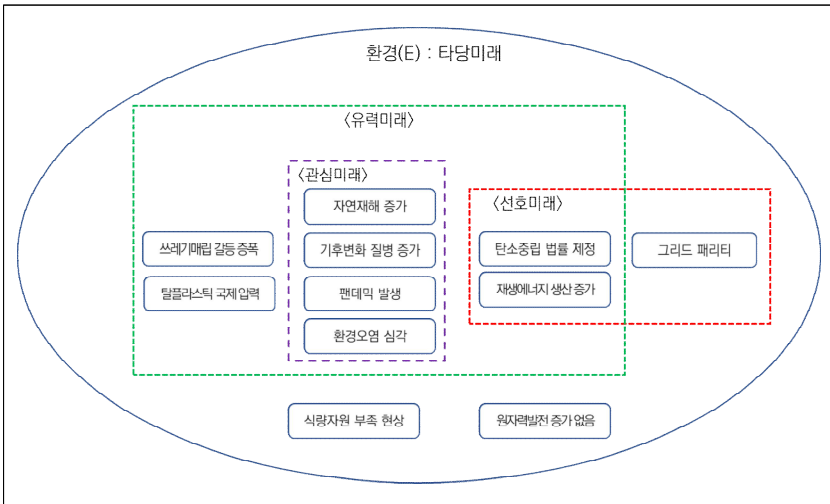
환경 영역의 경우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래 변화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미래 변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화석에너지와 기후 변화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부정적 파급 효과와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이 높은 관심미래는 자연재해 증가, 기후변화 질병 증가, 팬데믹 발생, 환경 오염 심각이 있다. 이러한 미래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는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전 지구적 범위의 위험성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환경 영역의 선호미래는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실현(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법률 제정과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체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재생 에너지 생산 비용이 화석에너지 생산 비용과 동일하게 되는 그리드 패리티는 발생(실현) 가능성이 낮아 유력미래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림 3-8] 미래 개념과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 환경 영역



자료: 필자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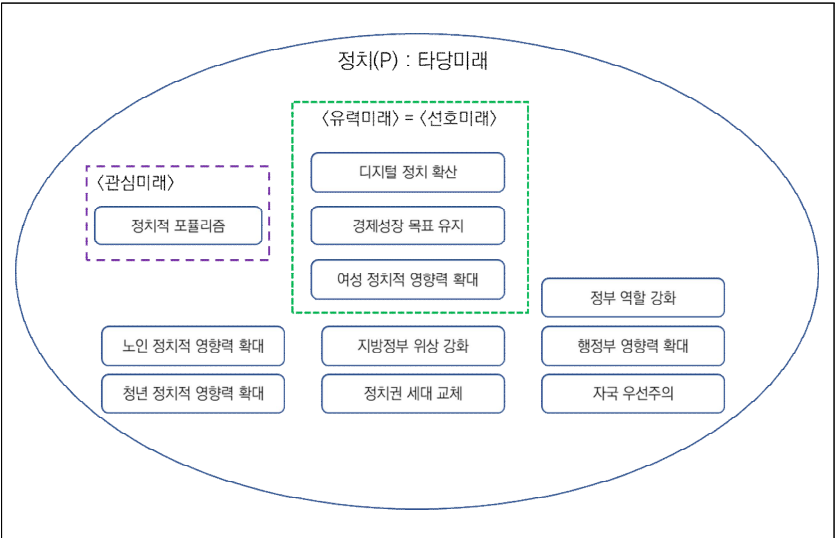
## 마. 정치(P) 영역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정치 영역의 사회보장 환경 변화는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영역의 타당미래는 11개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디지털 정치 확산, 경제성장 정책목표의 유지, 여성 정치적 영향력 확대 3개 항목만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에 나머지 8개 항목은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영역의 미래 환경 변화에서 특징적인 점은 유력미래와 선호미래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적 파급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관심미래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이 역시 발생 가능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 3-9] 미래 개념과 미래 사회보장 환경 변화: 정치 영역



자료: 필자 직접 작성



## 제4장

### 미래 변동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네 가지 시나리오

제1절 시나리오 구성

제2절 각자도생 생존게임 사회

제3절 에코챔버 사회

제4절 광장 공동체 사회

제5절 판옵티콘(panopticon) 통제 사회



## 제4장

# 미래 변동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네 가지 시나리오

### 제1절 시나리오 구성

2×2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기준 설정은 다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제2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먼저 한국 과학기술 2035 시나리오는 자원(풍요 vs. 빈곤), 연구 개방성(높은 vs. 낮은)으로 설정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ICT 기반 사회혁신 프로그램에서 수행한 사회보장 미래연구 시나리오는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참여 정도를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참여(engagement)는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 또는 편입되어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따라서 제도의 보장 범위(coverage)는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 규모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의 미래 도시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은 도시의 분포(분산 vs. 집중)와 노동의 전문화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2×2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기준은, 하나는 미래 예측 대상의 속성 및 상황에 대한 변수이며, 다른 하나는 미래 예측 대상에게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사회보장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는 참여와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참여는 개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또는 상황을 표현하는 변수이다. 지속가능성이란 사회복지 재정, 고용 지위에 따른 개인의 비용부담 능력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직면하는 제약조건을 표현하는 변수이다. 네덜란드 미래 도시와 한국 과학기술 2035 시나리오의 사례 역시 미래 예측 대상의 주관적 속성과 객관적 제약조건이라는 두 가

지 측면의 변수를 시나리오 구성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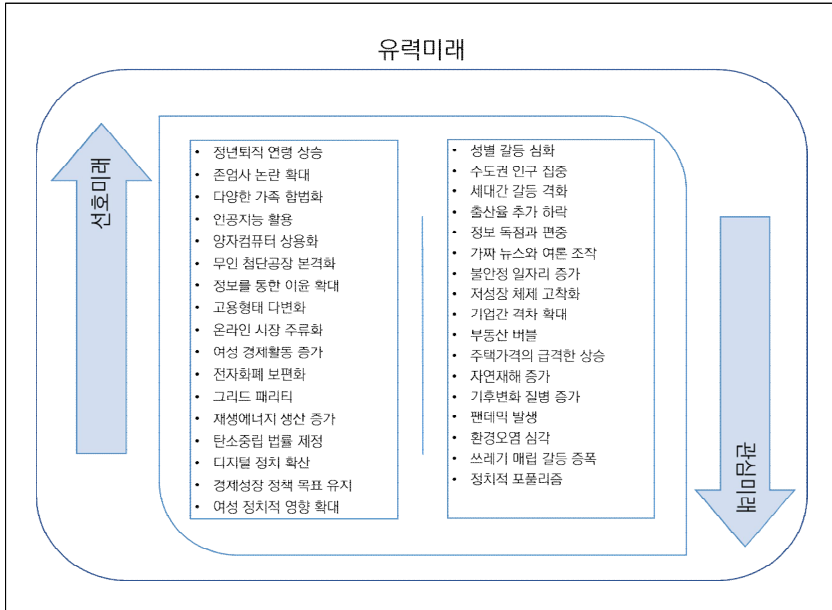
시나리오 구성의 기준이 되는 핵심 동인의 선정은 미래 예측을 위한 이슈 발굴 및 분석, 미래 탐색, 미래 변화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불확실성 요인의 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래 예측을 위한 델파이 조사 결과에 근거하는 것이 적절하다.

델파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력미래(probable futures)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4-1]과 같다.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있어서 바람직한 변화를 의미하는 선호미래(preferable futures)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관심미래(concerned futures)를 대비하여 정리하였다.

선호미래는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등과 같은 기술 발전의 긍정적 효과가 핵심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등과 같은 환경 영역의 변화와 경제성장 정책목표 유지, 디지털 정치 확산,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과 같은 정치적 영역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선호미래는 기술 발전과 생산력 향상이 자원 총량을 증가시키고, 생산된 자원의 분배가 비교적 원활하고, 사회 갈등이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 등을 보여주고 있다.

관심미래의 주요 내용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갈등과 격차(또는 편중)이다. 성별 갈등, 세대 간 갈등, 쓰레기 매립을 둘러싼 갈등, 정치적 포퓰리즘 등과 같은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수도권 인구 집중, 정보 독점과 편중, 기업 간 격차 확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저성장 체제의 고착, 불안정 일자리 증가 등과 같이 자원 배분의 편향성, 격차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의 방향성과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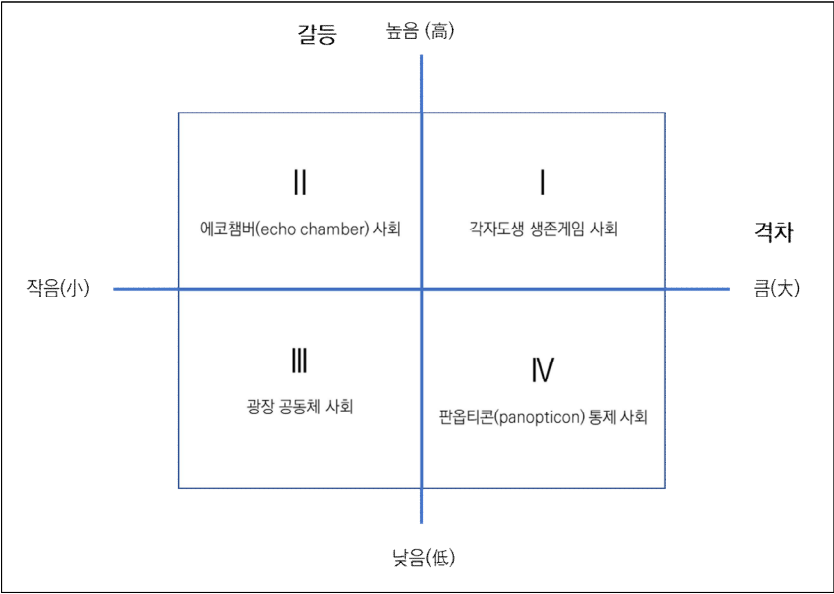
자료: 필자 직접 작성

텔파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10년의 기간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력미래에 해당하는 사건(events) 중에서 선호미래와 관심미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동인(driving forces)은 ‘갈등’과 ‘격차’로 정리할 수 있다. 변화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동인은 시나리오 구성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래 환경 변화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시나리오 구성의 핵심 축은 갈등과 격차로 설정하였다.

사회 갈등 수준은 갈등 조정 능력과 사회통합 정도를 표현하는 변수이며, 갈등 조정과 관리의 핵심 기제인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수준을 표현하는 척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자원 재분배를 통해서 갈등을 완화하는 기제이며, 갈등 수준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사회의 역량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변인이 된다.

격차는 시장메카니즘과 공공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원 분배 및 재분배의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사회 전체 자원의 분포 상황과 보유 자원의 편중 정도를 표현하고 있다. 자원의 편중과 격차가 확대되면 빈곤 완화와 격차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수요 증가로 연계된다. 동시에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가중시킴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격차는 사회보장제도의 제약조건에 해당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2]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와 사회복지 시나리오 구성



자료: 필자 직접 작성

사회보장을 둘러싼 환경의 미래 변화의 핵심 내용을 기준으로 미래 환경 변화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자 한다. 시나리오는 ‘갈등’과 ‘격차’라는 두 가지 축에 따라 2×2의



조합으로 네 가지로 제시한다([그림 4-2] 참고). X축은 미래 사회의 격차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격차는 자원 분배의 집중 혹은 분산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Y축은 갈등 수준의 고조 혹은 하강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1사분면에는 격차가 커지고, 갈등이 높아지는 ‘각자도생의 생존게임 사회’의 시나리오가 위치한다. 2사분면에는 격차는 작아지고, 갈등이 커지는 ‘에코챔버(echo chamber) 사회’가, 3사분면에는 격차는 작아지고, 동시에 갈등도 낮아지는 ‘광장 공동체 사회’가, 그리고 4사분면에는 격차가 커지고, 반면에 갈등은 낮아지는 ‘판옵티콘(panopticon) 통제사회’가 위치한다.

격차와 갈등은 상호 비례적 관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격차가 작아지고 갈등이 낮아지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회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 사회통합, 협력적 관계, 소통, 공익, 민주주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광장과 공동체 중심의 사회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 각자도생 생존게임 사회이다. 격차가 커지고 갈등이 많아지는 것은 분열, 개별화, 경쟁, 사익 추구, 폐쇄성 등을 추구하며,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경제력이 비례하는 양상을 보이는 사회이다.

격차와 갈등이 비례적 관계를 보이지 않는 변화의 시나리오는 에코챔버 사회와 판옵티콘 통제사회이다. 먼저, 격차는 작아지는데 갈등이 커진다는 것은 갈등의 발생이 경제 수준과 격차, 자원 보유 정도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계층 간 갈등에 비해 성별, 세대별, 지역별, 직업군별, 이해관계별 집단이 증가하고, 이들 집단 간 갈등이 확대된다. 이 사회에서는 집단 내 결속력이 강화되고,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경쟁이 커지고,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성이 높아지고, 개별적 이익과 선호에 따른 알고리즘과 필터버블(filter bubble),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와

경향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인 에코챔버 사회로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에코챔버 사회와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판옵티콘 통제 사회이다.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갈등이 낮아진다는 것은 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불평등 심화를 사회구성원들이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의 운영 주체에 의해서 갈등이 억제 또는 관리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추세가 강화된다는 것은 권력관계의 불균형, 개인의 고립화, 재분배 장치의 후견주의적 속성 강화 등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의 동인(driving force)과 그 동인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각각의 변화 양상이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제2절 각자도생 생존게임 사회

〈표 4-1〉 각자도생 생존게임 사회의 동인·양상 및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변수	동인과 양상	사회복지에 대한 영향
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독점으로 승자 독식 심화</li> <li>- 벤처기업 약화 및 중소기업의 종속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로봇이 대신하게 됨에 따라 관련 산업이 촉진</li> </ul>
기업과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에 대한 노동의 종속 심화</li> <li>- 불안전 노동과 자영업 증가</li> <li>-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형노동자에 대한 보호기제 약화에 따라 사회보험제도의 기능 부전</li> <li>- 영리 보전, 복지서비스의 강화</li> </ul>
시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의 전반적 영향력 약화</li> <li>-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 집단의 참여 약화</li> <li>- 지리적 분리(segregation) 확대</li> <li>- 대중매체의 역할 증대 및 포획(capture) 현상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 세원을 기업을 중심으로 납부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시민사회 영향력 약화</li> </ul>

변수	동인과 양상	사회복지에 대한 영향
국가/정부	- 기업 등 사회 내 핵심 이익을 대변	- 기업의 정부에 대한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잔여적 성격 강화

자료: 필자 직접 작성

## 1. 동인과 양상

시나리오 축에서 1사분면에 위치한 ‘각자도생의 생존게임 사회’ 시나리오는 격차가 크고 갈등이 높은 환경을 전제로 한다. 연구진은 2035년 한국사회의 양상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영향을 토론하여 다음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기술의 발전은 영리추구 목적의 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품 혁신을 목적으로 전개된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는 공유되거나 공개되지 않는다. 혁신기술은 생산 수단화되기 때문에 연구문화는 연구 방법과 노하우(know how)에 대한 비밀주의가 만연해지고, 자율적인 소통과 교류는 축소된다. 대기업은 연구 환경과 연구자를 독점하고, 기업 단위를 벗어난 연구 활동은 자원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다.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분쟁이 심해지며 이로 인해 혁신의 결과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경제 부문에서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물가상승률은 높게 지속된다. 물가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경제적 변동성은 확대되지만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는 유지되며, 빈번한 경제 위기로 인해 사회 내 경제주체들의 취약성이 강화된다(12. 경제성장률이 하락·정체되어 저성장 구조가 고착될 것이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경기 변동 속에서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벤처기업 같은 새로운 기업의 출현은 점차 감소하고, 규모와 기술력을 독점한 대기업이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양상이 뚜렷해진다. 중소기업들의 대기업 종속화 경향도 뚜렷해지는데, 개별적 브랜드로 시장에서 생존이 어렵게 되면서 대기업의 관리구조 내에 편입한 중소기업들만이 살아남게 된다(18. 기업 간 격차 확대로 승자독식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자영업자의 생존이 끊임없이 위협받지만, 고용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현상 역시 지속된다. 자영업 역시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브랜드로 생존하기보다는 대기업에게 가맹비를 지불하는 프랜차이즈 형태가 대세가 된다. 지역에서 자생하는 자영업에서 생산되는 식료품의 관리 구조 등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유통구조에서 경쟁력 부족으로 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시민의 선호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은 소수의 안정된 일자리 외에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플랫폼노동이 증가하게 된다(14. 불안정한 일자리(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플랫폼노동 등)가 증가할 것이다). 고소득 직장과 불안정 일자리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자 계급의 양극화도 심화되면서 노동자 내의 연대성은 급속히 약화된다. 또한, 배달업과 같이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on demand) 제공 시간 단위로 계약을 맺고 노동을 거래하는 깃노동(gig economy)이 활성화된다. 일반 기업에서도 로봇과 AI, 데이터 처리능력을 갖춘 슈퍼컴퓨터를 넘어서는 양자컴퓨터가 도입 및 상용화되고(45.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자컴퓨터가 상용화, 보편화될 것이다) 노동자가 근무하지 않는 무인공장이 확대되면서(44. 사람이 전혀 근무하지 않은 무인공장, 첨단공장이 본격적으로 출현할 것이다) 전통적 의미의 노동은 점차 약화된다. 새로운 일자리는 주로 시간 단위로 분절화

되고, 장소성을 상실한 낯 노동 같은 형태가 창출되면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역시 점차 약화된다. 대규모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며, 노동자가 조직적으로 기업에 협상하고 대응하는 노동문화는 점차 사라지게 된다(16. 노동조합 조직율(가입율)이 감소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와 공공성 담론보다는 부의 축적에서 소외된 대중들이 자본주의에 부정적 인식과, 생산수단과 지식 및 기술을 소유한 계층의 소비행태에 대한 거부감만이 표출되는 장으로 변모한다. 이 과정에서 물신주의나 한탕주의가 만연해지게 되며, **시민사회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사회 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 집단의 참여는 약화된다. 환경 문제 등 사회전반의 공익을 다루는 시민단체의 영향력도 함께 약화되면서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53. 미세먼지,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지역사회라는 개념이 점차 축소되고, 임금 소득 증가를 상회하는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된다(26. 소득 증가를 상회하는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회 내에서 지위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상징재가 된다. 서울 강남지역의 토지가는 홍콩에 버금갈 정도로 상승하게 되며,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지리적인 분리(segregation)는 강화되어 소득계층에 따라 구획화되고 분리된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진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적 규범의 부재현상**이 심화되는데, 구성원들의 일탈적 사고방식과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상류계층은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축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서 이자 및 이윤의 회수율에 의존하고, 이를 기초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축적하는 사례가 빈번해진다. 과시

적 소비, 금전만능주의 등에 매몰되면서 노동의 가치는 하락하는 사회적 가치와 관행이 만연해진다. 미래 사회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분야에도 갈등의 폐해가 나타난다. 교육제도는 과거에는 계층 간 이동을 촉진하는 계층 사다리로서 기능하였지만, 불평등이 고착화된 한국에서는 불평등의 완화 기능을 거의 담당하지 못한다.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사교육 시장이 실질적으로 공교육을 대체하는 현상이 심화된다(38.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약화될 것이다. 39. 사교육 시장이 현재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불안정한 경기 상황 가운데 ‘경제 성장과 발전’은 최우선 정책목표로서 중요성을 유지하게 되며(1. ‘경제 성장과 발전’은 향후에도 최우선 정책목표로서 중요성을 유지할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게 된다. 정부는 기업 등 생산수단을 독점한 핵심이익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시장친화적인 개혁이 지속되는데, 개개인의 생존이 중요한 사회에서 사회 내 구성원들은 개별화되고, 개별성이 강조되지만 이러한 요구가 집단적으로 조직되지는 않는다.

미디어는 대중매체의 역할 확대와 함께 1인 매체의 역할이 더욱 증대된다. 대중매체는 사회 내 주요한 갈등과 문제를 제시하는 매체로 기능한다. 그러나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언론 매체의 특성상 기업친화적 콘텐츠를 주로 생산하게 된다.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문제점을 드러내는 역할은 지속하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방이나 비판 기사는 빠르게 생산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되는 내용의 기사는 생산·유통되지 않는다.

## 2.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

지금까지 살펴본 적자생존의 생존게임 사회에서 미래사회 변화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술 발전은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사회서비스를 돌봄로봇 등 민간의 상업적 기술력으로 대신하게 되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시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를 민간서비스로 대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비용 감소를 위해 AI, 로봇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가정마다 돌봄로봇을 구매하거나 사물인터넷 등 여러 기술을 도입하여, 노동력을 활용한 서비스를 대체한다. 하지만 상업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는 확대된다.

둘째, 비전형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전통적인 개념의 집단적 노동이 약화되면서 사회보험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다. 비전형노동에 대한 보호기제는 시간 단위 노동과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한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빠르게 발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로그인하고, 종료되는 시점까지 근로시간이 연동되는 형태의 보험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며,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 등의 제도도 이러한 시간 단위의 구매수요(on demand)를 반영한 체계를 개발하게 된다.

셋째, 정부에 대한 기업(시장)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퇴조한다. 이는 곧 복지국가의 쇠퇴와 사회보장제도의 잔여적 성격의 강화로 연결된다. 공공부조 같은 잔여적 제도의 잔여성이 더욱 심화된다. 기존의 보편주의 원리에 기초를 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돌봄제도 등에서 급여 수급을 위한 소득·자산 요건은 강화되며, 소수의 빈곤층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수급 범위가 점차 축소된다.

넷째, 정부의 거버넌스 방식은 위원회 구조가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이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주체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면서 국가운영을 위한 재원을 부담하는 기업이 될 것이며, 이들이 주요한 의사결정자로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제3절 에코챔버 사회

〈표 4-2〉 에코챔버 사회의 동인·양상 및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

변수	동인과 양상	사회복지에 대한 영향
기술 발전	- 기술발전을 통한 생산력 증대 - 기술발전의 결과물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배분	-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었던 취약계층이 사회복지 주체로서 영향력 강화
기업과 노동	- 최저임금의 상승 및 기업 간 임금 격차 감소 - 노동의 조직력 유지	- 노동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 제도의 존속
시민사회	- 사회 내 다양한 정체성에 기반한 재조직화 - 정체성을 대변한 개별적 시민사회 - 집단화된 미디어 체제	- 시민사회는 집단별로 분절화 되지만, 개별적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증대 - 시민사회가 개별 집단 간 권력의 장으로 변화
국가/정부	- 다양한 이익집단의 갈등의 장(場)으로서 정치적 플랫폼 활용	- 위원회 구조를 통해 취약계층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적극적 조치 등의 정책수단이 활발) - 소득기준보다는 대상별 개인 중심 정책 (여성, 노인, 아동, 청년 등 소득기준보다는 개인이 중심)

자료: 필자 직접 작성



## 1. 동인과 양상

시나리오 축에서 2사분면에 위치한 ‘에코챔버 사회’ 시나리오는 격차가 적고, 사회 갈등이 높은 환경을 전제로 한다. 연구진은 2035년 한국사회의 양상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영향을 토론하여 다음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기술 발전**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가 생산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점차 로봇에 의한 생산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44. 사람이 전혀 근무하지 않은 무인공장, 첨단공장이 본격적으로 출현할 것이다). 로봇세 등 분배 기제가 원활히 운영되면서 새롭게 증대된 생산력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며, 이는 기존의 분배 문제 개선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산업발전에 있어 국내에 기반을 둔 대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보호 기제가 활성화되면서 임금 격차가 완화된다. 주택가격 하락과 부동산 버블 붕괴가 발생하면서(27. 주택가격 하락과 부동산 버블 붕괴가 발생할 것이다) 자산 불평등은 일부 심화되거나 반대로 일부 완화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감소**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주요한 지위를 유지한다. 과거 생산지(production site) 중심의 노동 특성은 다소 감소하지만,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한국사회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생산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노동의 지위가 유지된다. 또한, 사회서비스 등 기존에 충분히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공공부

문 일자리에 대한 보상체계가 개선되면서 공공부문의 **직접일자리 역시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경제적 풍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며, 경제활동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사회에 대한 욕구 표출을 활발하게 하게 된다. 잉글하트가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경제적 요소들은 경제 결핍의 조건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결핍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요소들이 사회의 형성 및 변화에 있어서 점차 중요하게” 된다는 ‘결핍 가설’이 현실화된다 (Inglehart, 1990, 조영훈 2012에서 재인용).

그러나 사회 내 갈등 구조는 디지털 기반 정치의 확대를 통해 심화되는 양상을 가지게 된다(5.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을 활용한 정치활동과 정당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사회 내 격차 문제에 대한 불만은 온라인을 통한 정당, 정치활동 증가를 가져오지만,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하기보다는 동질적인 구성원이 자신들만의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하게 되면서 확증편향과 갈등이 증폭되는 에코챔버(echo chamber) 현상이 심화된다.

**시민사회 역시 개별성**이 뚜렷하게 강화되며 특수성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취약계층으로 논의되던 주요 집단들이 핵심적인 이익집단으로 부각된다. 민족적 정체성이나 민족적 유대는 퇴색하게 되며 사회 내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시민성이 잠식되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시민참여는 오히려 축소된다. 사회 전체를 횡단하는 크로스커팅 이슈에 대한 관심은 제약되는 반면, 정체성에 입각한 개별적 특수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진다. 장애인은 장애인의 인권을 주장하고, 여성은 여성의 인권을, 남성은 남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형태이다(10. 청년세대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8. 노인세대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28. 세대 간, 연령 간 갈등이 증폭되고, 격화될

것이다, 29. 성별(젠더) 갈등이 확대·심화될 것이다, 30.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증가로 인종 간, 국적 간 갈등이 확대·심화될 것이다).

공간적 측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온다. 현재에도 게이바 같은 좁은 공간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공간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넓어진다. 즉, 여성만이 모이고, 환경론자들이 모이고, 보수주의자들이 모이는 곳이 생기기 시작하며, 이러한 공간이 서구의 게이거리(gay street)처럼 하나의 지역 범위(area)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성소수자의 공간, 여성주의자와 남성주의자의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가치관과 규범이 이러한 공간에서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표준화된 생애과정보다는 개인이 선택한 생애과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진다.

언론의 역할은 유지되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성격보다는 특수집단의 이해와 관점을 반영하는 특수이익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된다. 여성, 남성, 장애인, 이민자 등 기존의 특수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던 매체들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매체들의 영향력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교육의 측면에서도 공교육하에서의 표준적 교육보다는 개별성을 기초로 한 교육컨텐츠가 개발되며,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비공식 교육체제가 활성화된다.

국가의 정치적 플랫폼은 광범위한 국가적 플랫폼이 유명무실해지고, 정체성에 바탕을 둔 개별이익의 플랫폼이 득세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정책 입안자들이 광범위한 국가적 플랫폼보다는 좁은 이해관계에 부응하여 정치력을 집중한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들의 이익이 정치적으로 조직되면서, 기존의 이익집단과 새롭게 반목하고 갈등하게 된다. 상이한 가치관과 규범을 가진 집단들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체제를 활용하며, 정치인들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소외된 측면을 부각하

며 우대정책을 주장함에 따라 이익집단의 정치가 심화된다. 소위 말하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가 정치 지형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보편성이 아닌 차이에 기반을 둔 정치로 정책과정을 환원시키게 된다. 이로 인하여 국가는 갈등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보다는 갈등의 장(場)으로 기능하게 된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로지르는 연대성(solidarity) 논의는 약화되며,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집단들이 주도권을 경쟁하는 논의가 정책의 장을 점령하게 된다. 국가는 탄소세, 로봇세와 같이 경제 분야를 규율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은 유지하지만,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기능하는 역할은 퇴색한다.

정책 어젠다는 이러한 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의 가치관을 반영하게 되면서, 윤리 및 환경 문제가 더욱 첨예하게 제기될 것이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윤리문제를 지적하는 집단들의 기술 진보에 대한 논쟁이나(42.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이다) 환경주의자들이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를 반대하는 요구들에 대한 중재자로서 정책 어젠다가 기능하게 된다(49. 원자력 발전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한 존엄사, 안락사, 사실혼 등 기존의 사회제도에 대한 변화요구 및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어젠다들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33. 존엄사,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될 것이다).

## 2.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

지금까지 살펴본 에코챔버 사회에서 사회보장 혹은 사회보장제도가 받게 될 영향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술 발전은 지속되지만, 기술 발전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활용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사회 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 대립이 첨예화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윤리 문제는, 돌봄로봇이나 AI가 상용화되면서 이들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논쟁이 첨예화된다. 이러한 논쟁은 일견 돌봄분야 종사자들의 이익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에 따라 실제 기술 발전의 양상보다 사회적 합의 문제로 인해 도입과 상용화가 느려질 수 있다.

둘째, 노동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제도는 존속하게 될 것이다. 사회 내 격차가 감소하고, 정부의 직접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되면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중요한 노동세력이 된다. 이는 사회보험제도를 존속시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편성보다는 차이의 정치가 강화되면서 개별 대상에 대한 정책이 확대된다. 소득 기준 등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적용하던 공공부조 및 자산조사형 사회보장제도보다 세대, 성별과 같이 조직화되기 유리한 조건들이 더욱 중요시된다. 서비스 전달체계는 다변화하고, 개별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민간영역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특수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재단 혹은 비영리조직이 조직되며,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게 된다. 예컨대, 성소수자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이 설립되어 이들을 위한 차별적인 요양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성소수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화된 서비스보다는 이러한 민간서비스가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세원의 부담은 정부가 주요 생산수단에 대한 세원 부담을 체계화한다. 또 사회 내 구성원의 소득 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회 내 구성원 전체가 주요한 세원 부담 주체로 자리 잡게 된다. 보편 증세는 중

산층의 확대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시민성의 강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된다. 국가의 거버넌스 방식은 위원회 구조가 주요한 의사결정 구조가 될 것이다. 이때 위원회에 참여하는 주체는 개별 이익집단이 되며, 이들이 각자 자신의 정체성의 정치를 실현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

제4절 광장 공동체 사회

〈표 4-3〉 광장 공동체 사회의 동인·양상 및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

변수	동인과 양상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
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술 발전으로 생산력 증대</li><li>- 생산력 증대로 전반적인 사회의 부의 증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술 발전을 통한 사회복지 사각 지대 해소</li><li>- 전통적 고용관계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도전</li></ul>
기업과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노동시간 감소, 여가시간 증대, 시민 참여 확대</li><li>- 노동의 새로운 재편</li><li>- 기업의 공공성 강화</li><li>-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통제 및 견제 강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리·보건·복지서비스의 퇴조 혹은 공공성 강화</li></ul>
시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민의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및 성숙</li><li>-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 집단의 참여 강화</li><li>-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 영역과 원활한 소통을 통한 갈등 조정</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복지서비스 및 급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증대</li><li>- 노동조합,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취향공동체 등에서 다양한 자치적 복지서비스 제공</li></ul>
국가/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li><li>-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시장 통제 강화</li><li>- 국가의 분배, 재분배 역할 강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가의 보건, 복지, 교육, 주거 영역에서의 권한 강화</li><li>- 개인들의 사회적 니즈 충족을 위한 국가 역할 증대</li></ul>

자료: 필자 직접 작성

## 1. 동인 및 양상

시나리오 축에서 3사분면에 위치한 ‘광장 공동체 사회’ 시나리오는 부의 격차가 적고, 갈등이 낮은 환경을 전제로 한다. 연구진은 2035년 한국 사회의 양상과 사회보장에 대한 영향을 토론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지속적인 기술 발전**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 분야의 **생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은 일찍이 산업용 로봇이 가장 널리 보급된 나라이며, 전체 산업에 걸쳐 공장자동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2035년에 이르러서는 무인공장,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발달된 무인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의 가구에 매우 빠른 속도로 전달될 것이다(44. 사람이 전혀 근무하지 않은 무인공장, 첨단공장이 본격적으로 출현할 것이다). 또한 비약적인 과학기술 발전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45.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자컴퓨터가 상용화, 보편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과정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감소될 것이며, 일자리 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유연한 노동의 형태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15. 자율근무, 플랫폼을 활용한 유연한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전통적인 계약 시작 및 종료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면서 다수의 인구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노동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전통적인 완전고용의 지향 및 종신고용의 관행은 빠른 속도로 허물어질 것이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2차 산업 중심의 제조업 현장을 떠나서 대인 서비스 중심의 3차 산업 혹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더 많이 이동할 것이다. 생산성 증가 및 급여의 균등한 분배, 전통적인 노동계약 방식의 퇴조로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출근과 퇴근의 기준도 모호해지고, 노동시간도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노동자들은 줄어든 만큼의 노동시간을 가족과의 여가, 개인의 취향에 따른 클럽 혹은 동호회 활동, 마을 공동체 등 지역 단체 참여, 혹은 정당 및 시민단체 참여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민의 참여 증가는 **시민사회의 역할도 강화**할 것이다. 다수의 노동자들은 늘어난 여가시간에 시민단체의 비상근 간사, 정당 지역위원회 비상근 임원 등으로 참여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거름이 될 것이다. 디지털화 등 기기의 발전은 시민 참여의 편의를 증진하면서 참여를 촉진한다(5.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을 활용한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숙은 그간 공론장에서 배제됐던 소수자 집단들, 이를테면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의 참여 공간을 넓힐 것이다(9.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사회갈등의 소지가 있는 지역/젠더/학력/노사/빈부 등의 문제는 시민사회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예방 혹은 해결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민 참여는 민주주의의 강력한 토대가 된다. 엘리트 중심으로 운영됐던 한국의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여가시간을 확보한 시민들의 참여로 활성화하게 된다. 민주주의적인 합의 구조는 마을 회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직능집단, 동호회집단, 마을공동체, 정당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의로 반영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합의의 질서는 매우 강력한 정치적 권위를 가지게 되며, 그와 같은 합의 구조의 결정체로서 국가의 기능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일부 이해집단, 기득권 집단에 의한, 사회적 의사 결정의 왜곡을 막게 된다.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다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국가 역할의 강화**는 시장 영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가는 20세기 중반부터 지속되어온 부의 집중에 대해 제어를 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정치적 권력 및 도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이를 통



해서 국가는 시장 영역에서의 독점 및 과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수단을 갖게 된다(2. 정부의 역할과 권한, 시장에 대한 개입은 확대·강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 규제는 특히 **기업과 노동의 영역에서 두 가지 부조리에 대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부의 불균형을 초래했던 전통적 부조리의 문제에 대한 시정이 이뤄진다. 이를테면, 일부 대규모 기업집단의 편법적 가업승계 문제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업무 관행, 대자본 집단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노동 현장에서의 공공연한 노동법 위반 및 노동권 탄압의 사례들이 빠르게 시정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마련된다. 둘째, 시장의 불균형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의해서도 초래됐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이뤄지게 된다.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 각 이코노미의 발전은 생산수단 및 정보의 독점을 초래했다. 국가는 이와 같은 플랫폼들에 대해 공공화, 과세 강화, 규제 강화를 통해서 공유부에 대한 시민들의 적절한 권리를 보장해줄 것이다. 이는 곧 자본과 노동 사이의 적절한 균형 혹은 통합을 가져온다.

시민사회와 국가가 개인 및 집단 사이의 갈등을 조정 및 중재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동안, 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위축하게 될 것이다. 50년 넘게 전세계를 압도했던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의 위력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즉, 시장지상주의 퇴조를 의미한다. 물론, 창의와 혁신의 공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형태의 시장은 그 본연의 모습을 유지할 것이다. 일부 개인 및 친족의 사(私)금고 구실을 했던 구태적인 기업의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공공선에 반하는 이익 추구 행위, 이를테면 환경오염, 노동권 침해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다(22. 기업은 극단적 이익 추구보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공공성은 증대될 것이며, 기업

을 둘러싼 이해당사자(stakeholders)들의 견제와 통제는 강화될 것이다. 즉, 생산력의 증대에 따라서 늘어난 사회 전체의 부는 민주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서 공평하게 분배되고, 경제적 여유를 확보한 시민들은 사회의 결정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복지사회가 구현된다.

## 2.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

이와 같은 포용사회의 모델에서 사회보장 혹은 사회보장제도가 받게 될 영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술 발전이 사회보장의 충분성, 보편성, 포괄성에 조응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생산성의 증대는 사회보장의 충분성을 보장해줄 가능성이 높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실시간 소득 파악을 용이하게 하면서 사회보장의 고질적인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복지 현장의 수요도 효과적으로 충족할 것이다(48.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로봇 활용이 일상화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발현 및 기존 사회적 위험의 증대 및 축소에 발맞춘 사회적 위험의 포착 시스템 개발은 사회보장의 포괄성을 강화하는 추세로 발전할 것이다. 고용관계에 근거한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는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새로운 사회 변화에 빠르게 순응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영리형 모델의 보건의, 복지서비스들은 위축되거나, 공공의 영역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작동될 것이다.

둘째, 기술의 발전과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이에서의 딜레마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42.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이다). 개인이 사

생활의 영역에서 마주치게 될 사회적 위험의 신속한 포착을 위해서, 사회 보장 시스템은 프라이버시의 일정한 양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개인의 건강 위험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개인 건강 정보의 데이터화 및 공공화, 집적화를 일정하게 요구할 것인데, 이에 대한 프라이버시 논란을 수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개인의 사회보장을 위한 단위가 소득 및 돌봄의 필요에서, 개인의 삶의 질 혹은 여가의 질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성 발달에 따른 부의 증대 및 민주주의의 발달로 인한 부의 공평한 분배로 개인의 삶의 질에서 노동의 질이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고, 여가의 질이 차지하는 영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사회보장이 소득 보장 혹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 수요 충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조금 더 추상 수준이 높은 삶의 질, 혹은 여가의 질, 행복 수준의 측정 및 보장으로 사회보장의 패러다임이 상향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넷째, 앞서 삶의 질 문제와 관련해서, 정신 보건의 문제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32. 자살률이 현재보다도 더 높아질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보장이 발달한 북유럽에서 우울증이나 자살 같은 정신병리적인 현상이 자주 목격되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의 기본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제도가 안정된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에게 닥친 불행에 대해서 시스템을 비난할 근거가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비난의 몫은 개인 스스로에게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은 미래 사회보장의 도전이 될 것이다.

다섯째,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다원화는 사회보장제도의 다원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결정 과정에서 수요자들의 자기 결정권이 증대될 것이며, 지방정부, 노동조합,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취향공동체, 다양한 연령대별 집단 등에서 정치적 발언권을 높이면서,

(08. 노인세대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09.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10. 청년세대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11. 지방정치와 지방정부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다양한 자치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는 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국가 중심의 보편적, 평등주의적 복지 질서와는 일정한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제5절 판옵티콘(panopticon) 통제 사회

〈표 4-4〉 판옵티콘 통제 사회의 동인·양상 및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

변수	동인과 양상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
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술 독점으로 승자 독식 심화</li><li>- 부의 불평등 심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득 불평등 심화 → 고소득층은 납세(비용부담) 회피, 저소득 빈곤층은 제도 불신 증가</li></ul>
기업과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디지털 자본의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 독과점 강화, 데이터의 독점</li><li>- 기술이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실업의 증가</li><li>-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 노동의 증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인세, 근로세 감세가 복지재정 위축으로 이어짐</li><li>- 비전형노동, 실업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사각지대 잔존 혹은 증대, 사회보험의 재정 위협</li></ul>
시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인 정보 집적 및 통제 강화</li><li>- 통제 강화에 따른 범죄 예방 등 순효과에 대한 시민적 동의 상승</li><li>- 금권 정치로 인한 민의 왜곡</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치 및 언론 분야의 왜곡으로 불평등 문제의 원인을 개인 혹은 외부인에게 돌리는 여론 형성</li><li>- 시민 통제에 대한 자발적 순응, 복지제도의 위축</li></ul>
국가/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의 독점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 민주주의의 퇴조</li><li>- 금권 정치의 강화</li><li>-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전체주의적 경향 증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빈곤층 등 취약계층 배제 심화</li><li>- 빈곤 계층(집단) 증가로 공공부조의 역할 증가</li><li>- 소득의 분배, 재분배를 왜곡하는 정책의 등장</li></ul>

자료 : 필자 직접 작성

## 1. 동인 및 양상

시나리오 축에서 4사분면에 위치한 ‘판옵티콘 통제 사회’ 시나리오는 격차가 적고 갈등이 높은 환경을 전제로 한다. 연구진은 2035년 한국사회의 양상과 사회보장에 대한 영향을 토론하여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미래의 **기술 발전은 승자 독식의 생태계를 낳게** 된다(18. 기업 간 격차 확대로 승자독식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19. 일상생활용품 구매에서 온라인 시장의 비중이 오프라인 시장의 비중을 넘어설 것이다) 시장은 더욱 더 글로벌화 한다. 이를테면, 국가 단위에서 실시간 배달 시스템을 운영하던 개별 국가들의 온라인 유통의 승자들은 다시 글로벌화한 유통 강자의 등장으로 위축된다. 국내의 상품은 24시간, 해외의 상품도 48시간 안에 배달되는 유통라인의 글로벌화는 소비자 편의 증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이러한 글로벌화는 **기업과 노동의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의 글로벌화는 결국 소수의 글로벌 유통 업체가 시장을 독과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전세계적 규모의 데이터가 집적된다(20. 정보·데이터의 생산, 활용, 유통, 통제 등을 통한 기업 이윤 창출이 증가할 것이다). 오프라인의 유통망과 온라인의 방대한 데이터 구축으로 글로벌 승자는 시장과 정치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41. 정보, 데이터(DB)의 독점적 소유와 활용으로 권력 편중 및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기존 배달 노동도 대부분 로봇이나 드론이 대체하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다. 국지적 단위에서 살아남은 일부 플랫폼 서비스는 규제 완화를 등에 업고 불안정 노동을 양산한다(14. 불안정한 일자리(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플랫폼노동 등)가 증

가할 것이다). 자동화에 따른 노동 수요의 감소로 실업인구가 양산되면서, 그나마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려는 실업인구는 온라인 직업 소개 사이트를 전전한다. 승자 독식의 구조 속에서 자본과 노동의 힘의 균형추는 무너진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곧 불평등 심화로 이어진다.

부의 독식이 이뤄지면서, 국가 내부 단위의 권력에도 편중이 생긴다. 경제 권력은 정치 영역에서도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다. 탈규제를 위한 로비가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이뤄진다. 정치인들은 막대한 자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의 역할은 위축되고 왜곡**된다. 거대자본은 광고 등의 수단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공론의 장을 왜곡한다. 실업이 증가하면서 노동조합의 힘도 줄어든다(16. 노동조합 조직률(가입률)이 감소할 것이다). 금권 정치의 확장 속에서 시민사회도 힘을 잃는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토대는 잠식된다. 공공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는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다. 기득권의 이익에 복무하는 언론과 전문가 집단도 불신의 대상이 되면서, 일반 시민들은 제도권 자체에 회의하게 된다. 공론의 장이 무너지면서, 여론을 왜곡하는 가짜뉴스가 민심을 왜곡한다(43. 개인 매체 확산에 따라 사생활 침해,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정치적, 사회적 경로를 통한 사회 개선의 여지가 줄어들면, 그 경로 자체를 파괴해야 한다는 의식이 나타난다. 일부에서 극우적, 극좌적 혹은 전체주의적 의견이 대두된다. 포퓰리즘이 설 자리가 늘어난다(4.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강화될 것이다).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증가하고, 정치 언어가 극단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인 정보 집적 및 시민에 대한 통제가 강화하게 된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경시된다. 이를 옹호하고 나설 수 있는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의 목소리가 크지 못하다. 민주주의의 연로가 막히게 된 결과다. CCTV, 휴대폰 사용 기록 및 이동 경

로, 신용카드 구입 이력, 개인 건강 정보 등이 국가 권력 및 시장 권력에 집중된다. 개인들의 생체 정보 및 개인 정보는 국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동시에 시장에서는 상품으로 거래된다. 이와 같은 정보 집중은 매우 강력한 범죄 예방 수단으로도 작용한다. 일부 시민들은 이를 옹호한다. 이른바 ‘범죄 없는 안전한 국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 그 사이에 프라이버시는 침해된다. 중앙 집중화한 권력은 시민의 집회,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일부 시민은 그 질서에 자발적으로 순응하지만, 다수는 불만을 품고 침묵한다. 국가 권력은 시민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로마가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를 진행하고, 나치 정권에서 폭스바겐 자동차를 공급했던 것과 동일한 양상이다. 국가 권력은 시민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다수의 게임, VR 서비스를 옴가로 제공한다. 일부 시민들은 사이버 공간이 주는 기쁨에 마비된다. 다른 시민들의 저항은 권력에 의해서 장악된 고도화한 감시 시스템에 의해 모니터되고, 처벌된다. 갈등은 음성화하고, 밀실에 갇힌다.

관점을 국제적으로 넓히면,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된다.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민주주의가 퇴보하면서, 국제적인 협조와 공생을 시도하기보다는 자국 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강화한다. 국가들은 외부 갈등을 통해서 내부의 폭력을 정당화한다. 기후 변화, 온실 가스, 환경오염 등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게 된다(55. 플라스틱 사용/유통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가하고,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국가 간 보호무역이 강화하고(3. 정부 정책에서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 re-shoring)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교역량은 급감한다. 무역을 통한 후생 개선 효과는 줄어든다. 국가 간 긴장 수준이 올라가면서, 시민들

사이에 외국,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늘어난다. 특히 이웃한 국가,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자주 등장한다(30.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증가로 인종 간, 국적 간 갈등이 확대·심화될 것이다). 내국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빈곤층과 실업자들은 자신의 분노를 이들에게 투영한다.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책임은 이들의 탓으로 치환된다. 국가는 이러한 왜곡된 분노를 묵인하거나 조정한다. 타자에 대한 왜곡된 분노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동안, 내부의 갈등은 은폐되거나 봉합된다.

## 2. 사회보장에 미칠 영향

지금까지 살펴본 통제사회에서 사회보장 혹은 사회보장제도가 받게 될 영향은 아래와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으로 예견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일자리 감소이다. 특히, 중산층 이하의 다수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으며, 판옵티콘 통제사회의 정치권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같은 모델에서 자동화로 나타나게 될 이른바 ‘노동의 종말’(44. 사람이 전혀 근무하지 않은 무인공장, 첨단공장이 본격적으로 출현할 것이다.)은 전통적인 사회보험의 존립 기반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취업인구가 대거 줄어들게 된다면, 사회보험의 기여 이력이 없는 인구가 다수가 될 것이며, 이들 가운데 다수는 연금 등 사회보험 수혜에서 배제된다. 취업인구 혹은 노동인구의 감소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적 기반을 약화시킨다.

둘째, 판옵티콘 통제 사회에서는 사회보험제도가 기능을 다수 상실하



게 되는 반면, 공공부조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게 된다. 일자리도 없고, 과거 사회보장 기여 이력도 없는 집단은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빈곤화될 것이다. 공공부조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기형적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공공부조 수급 인구의 증가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수의 인구의 빈곤화가 기술개발로 인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빈곤인구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은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기계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고, 정치의 영역에서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기본소득 같은 조건 없는, 보편적 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다.

셋째, 재정적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급격한 양극화에 따라, 과세의 주요한 대상은 대규모 기업과 소수의 고소득층이 되겠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강제할 만큼 국가가 공공성을 갖거나 강제력을 가질 가능성은 적다. 정치권이 대자본과 고소득층과 결탁한 통제사회에서 이른바 ‘부자증세’를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반대의 정책적 선택을 하게 된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국가는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극화한 사회에서 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중산층의 규모도 크지 않다. 게다가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고소득층이나 중산층, 저소득층 모두 세금을 납부할 동기도 크지 않다. 물론, 기술 발전으로 과세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면 세금 회피의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수 마련이 통제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험 재정은 부실해지고, 공공부조에 대한 재정적 수요가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원은 한정적인데, 세출 수요는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복지재정의 문제는 통제사회의 국가 간 긴장 심화라는 변수에 따라서도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 간 보호무역 기조의 강조로 인해서(3. 정부 정책에서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 re-shoring)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교역이 줄어들게 되면, 국가의 관세 세수도 크게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해마다 국세 수입에 육박하는 수준의 관세 수입의 감소는 다시 국가의 재정 여력을 크게 줄인다.

넷째, 대규모 자본에 의해 공론의 장이 위축되고, 시민들의 정치 및 사회 참여의 기회도 말살되면서, 복지정치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국가는 시민들의 권리에 근거해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터지지 않는 수준에서만 복지의 수준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정치는 사라지고, 자본과 기술관료들의 통치만 남는다(6. 정책 결정,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행정부의 역할 및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 제5장

## 결론

제1절 미래 환경 변화와 사회복지제도

제2절 미래 대응의 우선순위와 복지정책의 주요 과제



## 제5장 결론

### 제1절 미래 환경 변화와 사회복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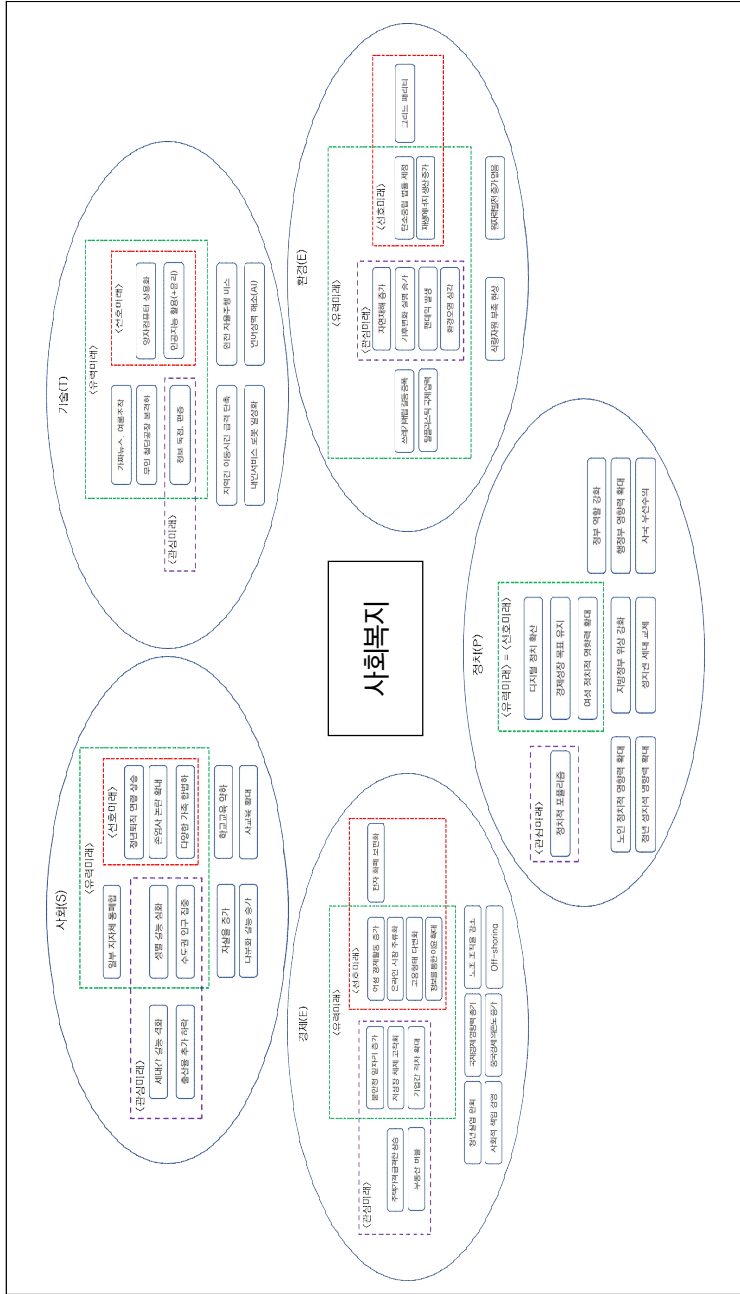
#### 1.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결과의 분석, STEEP 분류체계를 활용한 거시환경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를 예측한 결과는 [그림 5-1]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의 예측 결과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사항은 유력미래(probable futures)로 분류되는 이벤트이다. 유력미래는 향후 약 10년의 기간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벤트이다. 유력 미래에 해당하는 이벤트는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사회복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유력미래의 모든 이벤트가 동일한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력미래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그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이벤트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미래 변화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그리고 정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사회 영역의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서 주목할 유력미래 이벤트는 정년퇴직 연령 상승, 다양한 가족의 합법화가 있다. 정년퇴직 연령의 상승은 소득보장제도와 노인복지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닌 새로운 가족의 본격적 출현은 사회복지 급여 구조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5-1]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 예측(요약)



자료: 필자 직접 작성

기술 영역의 환경 변화는 사회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미래 이벤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양자컴퓨터 상용화와 인공지능 활용의 활성화는 복지급여 관리와 복지 관련 데이터 처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 영역의 환경 변화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영역의 이벤트는 저성장 체제의 고착화와 기업 간 격차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경향성이 강화되는 경우에 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수요 증가와 동시에 복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인데, 이는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영역에서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이벤트는 불안정 일자리 증가와 고용 형태 다변화이다. 고용 안정성 저하와 일자리 격차의 증가, 그리고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대되는 것은 임금 소득과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위축시키는 것이며,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경제 영역과 더불어 사회복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은 환경 영역의 미래 변화이다. 환경 영역의 유력미래 중에서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환경오염의 심각성 증가, 그리고 팬데믹의 발생 등이다. 이러한 이벤트는 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제도의 급격한 수요 증가로 연계된다. 동시에 현재의 보건의료 자원과 전달체계, 그리고 공공부문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 영역의 미래 환경 변화는 사회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상황에서 노인과 청년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며, 따라서 추가적인 영향력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성의 정치

적 영향력은 현재보다 확대될 것이며, 이는 양성평등 이슈와 여성 복지제도의 확대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2. 미래 환경 변화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미래 환경 변화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시나리오에 따라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미래 환경 변화가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5-1>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각자도생 생존게임 사회에서 미래 환경 변화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영리성 강화,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보호기제 약화, 기업 또는 고용주의 압력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는 복지급여의 잔여적 성격 강화, 소득보장 사각지대 확대, 고용 기반 사회보험제도 위축 등이 예상된다.

격차와 빈곤문제가 완화되지만 사회 갈등이 높아지는 에코챔버 사회에서 미래 환경 변화는 취약계층, 노동단체,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복지 향상과 급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제도는 보편적, 통합적 특성이 약화되는 반면에 대상별 서비스 증가와 제도의 다변화가 진행될 것이다. 공공부조제도를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은 확충될 가능성이 높으며, 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자산) 기준은 약화되는 반면에 대상별 욕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진행될 것이다.



〈표 5-1〉 미래 시나리오별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영향

시나리오	사회복지에 대한 영향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압력
각자도생 생존게임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로봇이 대신 하게 됨에 따라 관련 산업이 촉진</li> <li>• 비전형노동자에 대한 보호기제 약화</li> <li>• 보건·복지서비스의 영리성, 시장성 강화</li> <li>• 복지재원을 기업을 중심으로 납부함에 따라 노동단체와 시민사회 영향력 약화</li> <li>• 사회보장에 대한 기업(고용주)의 압력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서비스 종사 인력의 열악한 처우</li> <li>• 고용 기반 사회보험제도의 위축</li> <li>•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확대</li> <li>• 사회복지 급여의 잔여적 성격 강화</li> </ul>
예코 챔버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에 대한 취약계층의 영향력 강화</li> <li>• 고용 기반 사회보험의 역할 존속</li> <li>• 노동단체, 시민사회의 영향력 증대</li> <li>• 시민사회가 개별 집단 간 권력의 장으로 변화</li> <li>• 위원회 구조를 통해 다양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조를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제도 확충</li> <li>• 사회보험제도 분화 및 일부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개선</li> <li>• 대상별 복지서비스 증가와 다변화</li> <li>• 급여 선정에 있어서 소득 기준이 약화되고, 대상별 욕구가 강조</li> </ul>
광장 공동체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발전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 효과</li> <li>• 보건·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li> <li>• 복지서비스 및 급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증대</li> <li>• 노동조합, 시민단체, 공동체 등 다양한 자치적 복지제공체계 활성화</li> <li>• 보건 및 복지 영역에서 국가 권한과 역할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능력 향상</li> <li>• 고용 기반의 전통적 사회보험제도 약화</li> <li>•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출현</li> <li>•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li> </ul>
판옵티콘 통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불평등 심화 → 고소득층은 납세(비용부담) 회피, 저소득·빈곤층의 제도 불신 증가</li> <li>• 조세 감소(감세)로 복지재정 위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협</li> <li>• 비전형노동 및 실업 인구의 증가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증가</li> <li>•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여론 형성</li> <li>• 정책결정과정에서 빈곤층 등 취약계층 배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계층 증가로 공공부조제도의 수요 증가</li> <li>• 사회복지제도의 재분배 기능 약화</li> <li>• 사회복지제도의 위축</li> </ul>

자료: 필자 직접 작성

광장 공동체 사회는 4개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며, 동시에 복지급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 것이며, 사회복지 제공체계의 측면에서 공동체 등 대안적 조직이 활성화될 것이다. 미래 환경 변화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운영 및 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이며, 복지 수급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지속될 것이다. 반면에 전통적인 고용 기반 사회보험제도의 역할이 약화되고, 이로 인하여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출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판옵티콘 통제 사회는 빈곤 증가와 격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 갈등이 낮아지는 역설적 시나리오이다. 또한 미래 사회 변화는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와 저소득·빈곤층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증가와 복지재정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측면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복지제도는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재분배 기능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2절 미래 대응의 우선순위와 복지정책의 주요 과제

미래 사회복지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환경 변화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목적은 미래 대응을 위하여 기존 정책의 개혁과 새로운 제도 도입 등 사회복지정책을 혁신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미래 환경

변화 예측과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미래 대응을 위한 정책 혁신과 대응 전략 수립은 다음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미래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와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은 비교적 간명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대응의 우선순위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과 파급효과 정도를 기준으로 4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대응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미래 이벤트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하는 경우에 파급효과 큰 경우이다. 두 번째 대응의 우선순위는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발생하는 경우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이벤트이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벤트이다. 마지막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고, 파급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은 이벤트이다.

1단계와 2단계에 해당하는 이벤트는 미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4단계 해당하는 이벤트의 경우에는 미래 대응 전략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낮으며, 3단계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미래 대응 전략에 포함하는 것은 선택사항에 해당한다.

〈표 5-2〉 미래 대응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우선순위	미래 발생 이벤트
I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년퇴직 연령 상승</li> <li>• 성별 갈등 심화</li> <li>• 수도권 인구 집중, 일부 지자체 통폐합</li> <li>• 저성장 체제 고착, 기업 간 격차 확대</li> <li>• 불안정 일자리 증가, 고용 형태 다변화</li> <li>• 자연재해 증가, 기후변화·환경오염에 따른 질병 증가, 팬데믹 발생</li> </ul>
II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간 갈등 격화, 다문화 갈등 증가</li> <li>• 출산율 추가 하락</li> <li>• 주택(자산) 가격 급격한 상승</li> <li>• 정치적 포퓰리즘</li> </ul>

우선순위	미래 발생 이벤트
Ⅲ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본격적 출현과 합법화</li> <li>•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li> </ul>
Ⅳ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률 증가</li> <li>• 대인서비스 로봇 일상화</li> <li>• 정부 역할 강화, 행정부 영향력 확대, 지방정부 위상 강화</li> <li>•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청년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li> </ul>

자료: 필자 직접 작성

향후 약 10년의 기간 동안 정책적 대응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벤트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년퇴직 연령 상승’(1단계), ‘출산율 추가 하락’(2단계) 등과 같은 인구구조 변동에 대비하는 것이다. 인구구조 변동은 단기간에 정책적 대응을 통해서 추세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출산율 변화가 인구구조 변동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최소 1세대(3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동을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다.

둘째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핵심적 위상을 유지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성장 체제 고착화, 기업 간 격차 확대, 불안정 일자리 증가, 고용형태 다변화’(1단계),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2단계) 등의 이벤트는 공통적으로 소득·자산 격차 확대와 (새로운) 빈곤 증가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보장체계의 전면적 재구조화, 복지급여의 확충, 복지사각지대 축소와 사회적 보호 강화, 빈곤 및 격차 축소 등은 사회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성별 갈등, 세대 간 갈등, 다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갈등 증가에 대한 대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복지 급여 및 수급 대상자 확대 등의 제도개혁이 사회갈등 완화와 사회통합 수준 향상으로 곧바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통합적 시각에서 준비된 정책 패키지, 정책결정과 집행 전반의 거버넌스 개혁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갈등 대응과 사회통합 수준 향상은 단순히 사회복지정책의 과제로 간주하는 것보다 사회복지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다.

넷째,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질병 증가, 팬데믹 발생 등의 이벤트를 고려해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현행 보건의료체계로 대응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획기적 확대와 확충이 유일한 대안이다. 또한 의료보장제도는 질병의 사후 치료 중심에서 예방,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섯째, 수도권 인구 집중, 일부 지자체 통폐합 같은 이벤트는 지역 간 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동시에 계층 간 격차와 더불어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이 사회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또한 지역 간 격차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특히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좌우하는 핵심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높다.

여섯째, 사회복지제도, 특히 사회서비스 제도의 다양화와 급여의 확충이 필요하다. 공공부조는 최저수준 보장, 전국적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과 고용상 지위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처우를 하며, 비용 부담(기여)과 급여를 연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획일적, 경직적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양식의 고용 형태가 늘어나고 있

으며, 정체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집단이 조직화되고, 이익집단의 갈등 장으로서 정치적 플랫폼이 활용되는 사회와 경직성이 높은 사회복지제도는 상호 모순과 갈등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인 가구, 다양한 형태의 가족, 청년, 아동, 일하는 여성, 은퇴자, 후기 노인, 중장년, 비전형노동자 등 경제활동과 소득 원천이 다양하고, 상이한 생활 양식과 필요한 욕구가 이질적인 개별적 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욕구의 다양성은 사회복지제도의 다양성을 전인하게 되고, 이는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세분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의 분화, 다양화는 공공 부조와 사회보험보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미래 변동의 추세를 고려하면 사회복지제도, 특히 사회서비스 제도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개별적 욕구 충족을 위한 급여 유형도 확대되고 급여 수준도 상향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김미곤, 신영석, 여유진, 박승희, 변재관, 박이택, ... 조한나. (2017). **미래 사회 정책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빈, 송지은, 김홍범, 박성원, 이선화, 정영훈, ... 장승진. (2018).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 김홍범, 박인숙, 김기영, 이명호, 김두환, 김원택, ... 김세운. (2019). **2050 종합 미래시나리오 예측 연구**.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 미래준비위원회. (2015). **미래이슈 분석보고서**.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 민보경, 김홍범, 이재정, 허종호, 강지희. (2018). **미래결정 정책의제 연구**.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 박병원, 서지영, 이성호, 홍성주, 박성원, 윤정현. (2016).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VIII**.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병원, 서지영, 홍성주, 박성원, 윤정현, 최수민. (2017a).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IX: 총괄보고서**.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병원, 윤정현, 정대예, 최수민. (2017b). **미래연구용어집**.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성원, 김유빈, 정영훈, 민보경, 송지은, 강정인, ... 최형섭. (2018). **국민 선호 미래 연구**.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 박찬수, 김영환, 최병삼, 강희중, 김은주, 김태양, ... 고경표. (2020). **2020 대한민국 종합전망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서용석, 윤지웅. (2015). **중장기 국정운영을 위한 국가미래전략공동체 구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송영조, 송재일, 손현주, 박성원, 윤기영, 박제석. (2018). **미래준비 진단을 위한 사례 및 지표 연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신동현, 임형우, 조하현. (2019). 태양광 발전의 그리드 패리티 결정요인 분석: 126 개국 가정용 태양광을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25(1), 39-66.

- 안상훈, 권순만, 이영, 김수완, 김영미. (2013).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 추진 방향 연구**.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삼식, 김상균, 김진수, 여유진, 이소경, 김기성, ... 최효진. (2011). **미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혁신과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선화, 여영준. (2019).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 총론: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 이원희, 남기철, 박기백, 이창원, 이환성, 이성구. (2013). **사회정책분야 미래과제 및 효율적 수행방안**. 보건복지부·한국정책학회.
- 이윤진, 유해미, 조혜주. (2019). **인구·사회 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정책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종성. (2001). **델파이 방법(연구방법21)**. 교육과학사.
- 조영훈. (2012). 탈물질주의와 복지국가: 로널드 잉글하트의 복지국가 쇠퇴론 검토. **사회와 이론**, 21, 257-288.
- 최병삼, 우청원, 백서인, 진설아, 김단비, 이예원, ... 정용찬. (2020).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 데이터 기반의 국가 미래설계(2차 년도)**.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최은진, 김혜련, 이수형, 이난희, 김진호. (2017). **2017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세부1) 미래예측 방법의 적용과 활용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19). **장래 인구 및 가구 추계**.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85624](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85624)에서 2021년 10월 24일 인출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미래연구백서**.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홍성주, 전찬미, 최효민, 장성일. (2014). **미래 혁신전망 방법론 개발 및 적용**.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홍성주, 홍창의, 강홍렬, 전찬미, 박상욱, 최형섭, 강애진. (2015). **혁신 전망 방법론 개발 및 적용 (2차년도)**.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Bennett, N., & Lemoine, J. (2014). What a difference a word makes:



- Understanding threats to performance in a VUCA world, *Business Horizons*, 57(3):311-317.
- Bland, J., & Westlake, S. (2013). *Don't Stop Thinking About Tomorrow: A modest defence of futurology*. Nesta, London, May.
- Camus, A. (2015). **페스트**. (유호식, 옮김). 파주: 문학동네.
- Dator, J. (1979). *The futures of cultures and cultures of the future*. Perspectives on Cross Cultural Psychology, Academic Press, New York, NY, 369-88.
- Dator, J. (2009). Alternative Futures at the Manoa School, *Journal of Futures Studies*, November, 14(2), pp. 1-18
- Erdmann, L., Schirrmeister, E., Warnke, P., & AIT, M. W. (2013). *Deliverable D2. 1: Modular Scenario Report-Synthes*. RIF 2030 New Ways of Doing Research: From explorative to transformative scenarios, EC.
- Giessen, A. van der (2011). *Sectoral Innovation Watch Space and Aeronautics Sector*, EC.
- Glenn, J., & Gordon, T. (Eds.). (2009). *Futures research methodology-version 3.0*. The Millennium Project.
- Gordon, T., & Glenn, J. (2009). Environmental Scanning, Glenn, J., & Gordon, T. (Eds.). *Futures research methodology-version 3.0*, The Millennium Project.
- Inayatullah, S. (2008). Six pillars: futures thinking for transforming. *foresight*. 10(1), 4-28.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2019).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0**, 김영사.

- NIC. (2004). *Global Trends 2020: Mapping the Global Future*. NIC.
- NIC. (2008).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NIC.
- NIC. (2021). *Global Trends 2040: A More Contested World*. NIC.
- Pasi, G., & Misuraca, G. (2020). Welfare 2.0: future scenarios of social protection systems in the digital age. *Policy Design and Practice*, 3(2), 163-176. Retrieved from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25741292.2020.1770965>, 2021.10.11.
- Popper, R., (2008). How are foresight methods selected, *Foresight*, 10(6), 62-89.
- Rhoads, S., & Babor, A. (2018). The future of global research: A case study on the use of scenario planning in the publishing industry, *Learned Publishing*, 31(3):254-260.
- Schwarz, P. (1991). *The art of the long view: planning for the future in an uncertain world*. Currency Doubleday, New York.: Doubleday.
- Ter Weel, B., Gelauff, G. & van der Horst, A. (2010). *The Netherlands of 2040*.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UNDP GCPSE (2018). *Foresight Manual: Empowered Futures for the 2030 Agenda*, GCPSE.
- WEF (2021). **All Topics**. Retrieved from <https://intelligence.weforum.org/topics>, 2021.10.21.
- WEF. (2017). *Shaping the Future of Global Food Systems: A Scenarios Analysis*, WEF Global Agenda.



[부록 1] 델파이 조사표(1~3차)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가능미래

[부록 3]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발생 가능성

[부록 4]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파급 효과

[부록 5]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바람직성

[부록 6]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대응의 고려 정도

[부록 1] 델파이 조사표(1~3차)

1. 제1차 델파이 조사 조사지

작성자:

전공분야:

〈델파이 1차 설문: 우리 사회의 미래 예측〉

향후 10년(2022~2032)의 기간 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event), 또는 변화가 예상되는 점을 아래 제시하는 영역별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또는 변화는 발생이 필요한 또는 희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또는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며, 영역별 가능한 3개 이상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 각 영역(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별로 기술 시 번호는 우선순위에 중요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라도 무방하오니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각 영역별로 예상되는 변화 혹은 사건을 최소 3개 이상 기술해 주시되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줄을 추가하여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정치 영역: 국제 관계, 정부의 정책 목표, 정치 지형, 법률 및 규제 요인들을 포함한 영역의 변화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번호	예상되는 변화 또는 사건
1	(자유롭게 기술)
2	

1. 정치 영역: 국제 관계, 정부의 정책 목표, 정치 지형, 법률 및 규제 요인들을 포함한 영역의 변화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번호	예상되는 변화 또는 사건
3	
4	
5	
6	
7	
8	

2. 경제 영역: 경제 성장, 이자율, 물가, 노동, 국제 무역 등의 요인을 포함한 영역의 변화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번호	예상되는 변화 또는 사건
1	(자유롭게 기술)
2	
3	
4	
5	
6	
7	
8	

142 미래사회 변동이 사회복지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예측 연구: 영향 변수 도출과 시나리오 작성을 중심으로

3. 사회 영역: 사회, 문화, 가치관, 인구 특성을 포함한 영역의 변화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번호	예상되는 변화 또는 사건
1	(자유롭게 기술)
2	
3	
4	
5	
6	
7	
8	

4. 기술 영역: R&D, 새로운 미래 이슈 및 연구, 기술변화의 속도와 규모를 포함한 영역의 변화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번호	예상되는 변화 또는 사건
1	(자유롭게 기술)
2	
3	
4	
5	
6	
7	
8	

5. 환경 영역: 날씨(기후), 에너지(연료 포함) 등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 생태/환경 영역의 변화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번호	예상되는 변화 또는 사건
1	(자유롭게 기술)
2	
3	
4	
5	
6	
7	
8	

6. 기타 영역: 앞에서 제시한 5개 영역 이외에 미래 변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 또는 사건

번호	예상되는 변화 또는 사건
1	(자유롭게 기술)
2	
3	
4	
5	
6	
7	
8	

## 2. 제2차 델파이 조사 조사지

〈발생/변화 가능성〉 발생/변화 가능성 없음: 1 발생/변화가 확실함: 9										〈파급 효과(영향력) 정도〉 파급 효과 없음: 1 회복 불가능한 효과 있음: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변화 또는 사건										
										1. '경제 성장과 발전'은 향후에도 최우선 정책목표로서 중요성을 유지할 것이다									
										2. 정부의 역할과 권한, 시장에 대한 개입은 확대·강화될 것이다									
										3. 정부 정책에서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 re-shoring)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4.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강화될 것이다.									
										5.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을 활용한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6. 정책 결정,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행정부의 역할 및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7.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젊은 세대가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8. 노인세대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 3. 제3차 델파이 조사 조사지

작성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된 변화 또는 사건의 <b>소망성(desirability)</b>과 <b>고려 정도</b>를 판단하시어 1점~9점 척도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b>숫자로 기입</b>해주시기 바랍니다.</li> <li>- 2차 조사 결과 특정 사건이나 변화의 발생 가능성이 낮고, 동시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파급효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를 제외하여 구성한 것으로 일부 문항 번호가 생략되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li> </ul>		
변화 또는 사건	〈질문 1〉 소망성 (desirability)	〈질문 2〉 고려 정도
	1점 ~ 9점 (숫자 기입)	1점 ~ 9점 (숫자 기입)
1. '경제 성장과 발전'은 향후에도 최우선 정책목표로서 중요성을 유지할 것이다.		
4.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강화될 것이다.		
5.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을 활용한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9.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12. 경제성장률이 하락·정체되어 저성장 구조가 고착될 것이다.		
1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14. 불안정한 일자리(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플랫폼노동 등)가 증가할 것이다.		
15. 자율근무, 플랫폼을 활용한 유연한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18. 기업 간 격차 확대로 승자독식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19. 일상생활용품 구매에서 온라인 시장의 비중이 오프라인 시장의 비중을 넘어설 것이다.		
20. 정보·데이터의 생산, 활용, 유통, 통제 등을 통한 기업 이윤 창출이 증가할 것이다.		

변화 또는 사건	〈질문 1〉 소망성 (desirability)	〈질문 2〉 고려 정도
	1점 ~ 9점	1점 ~ 9점
26. 소득 증기를 상회하는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27. 주택가격 하락과 부동산 버블 붕괴가 발생할 것이다.		
28. 세대 간, 연령 간 갈등이 증폭되고, 격화될 것이다.		
29. 성별(젠더) 갈등이 확대·심화될 것이다.		
30.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증가로 인종 간, 국적 간 갈등이 확대·심화될 것이다.		
31. 출산율(출생아 수)은 현재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33. 존엄사,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될 것이다.		
34.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질 것이다.		
35. 수도권,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36. 일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이 진행될 것이다.		
37. 다양한 형태의 가족(동성 부부, 사실혼 등)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것이다.		
41. 정보, 데이터(DB)의 독점적 소유와 활용으로 권력 편중 및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42.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이다.		
43. 개인 매체 확산에 따라 사생활 침해,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44. 사람이 전혀 근무하지 않는 무인공장, 첨단공장이 본격적으로 출현할 것이다.		
45.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자컴퓨터가 상용화, 보편화될 것이다.		



변화 또는 사건	〈질문 1〉 소망성 (desirability)	〈질문 2〉 고려 정도
	1점 ~ 9점	1점 ~ 9점
50.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51.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의 생산 비용이 낮아져서 화석에너지(석유, 석탄, 가스)의 생산 비용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다.		
52. 탄소중립국(탈탄소) 실현과 관련한 법률(탄소세 등 신설 포함)이 제정될 것이다.		
53. 미세먼지,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54. 쓰레기 매립장 확보와 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다.		
55. 플라스틱 사용/유통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가하고, 무역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56. 기후변화로 인하여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57. 자연재해(가뭄, 홍수, 극지성 호우 등)의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58.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질병이 증가할 것이다		
59. 제2의 팬데믹(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것이다.		

##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가능미래

〈부표 1〉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가능미래

정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관리, 방역 등이 국가정책의 주요 목표로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화된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과 소요 발생</li> </ul> </li> <li>○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정부재정 압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변동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 부담 증가</li> <li>- 국가재정 악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간 갈등/대립 심화</li> </ul> </li> <li>○ 사회복지/사회보장정책의 중요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성이 강화</li> <li>- 사회복지 정책목표가 성 평등적 방향을 강조(추구)</li> <li>-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li> <li>-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정부의 등장</li> <li>- 복지체제 및 정책을 둘러싼 갈등 고조</li> </ul> </li> <li>○ 경제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정책(목표)의 중요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확대</li> <li>- 시장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li> <li>- 경제 회복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중요해짐</li> </ul> </li> <li>○ 가상화폐, 거래소, 온라인 서비스, 탈탄소 등에 대한 규제 강화</li> <li>○ 근무방식 유연화에 따른 노동관행 개혁 및 법제도 정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 노동자 증가로 인한 노동정책 확대, 노동규제 강화</li> </ul> </li> <li>○ 노동 안전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 정부의 귀환, 또는 권위주의적 정부의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역할 강화, 시장 개입 확대/강화</li> <li>- 확장 재정, 규제 기능 확대 등</li> <li>-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b>re-shoring</b>) 경향으로 정부 역할 강화</li> <li>- 팬데믹 같은 대규모 사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출현 가능성</li> </ul> </li> <li>○ 사회문제로 인한 갈등의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의 상시화</li> <li>- 사회 전반의 혼란(Entropy) 심화</li> <li>- 이익 집단 간 갈등 심화</li> </ul> </li> <li>○ 정치적(권)의 (부정적) 포퓰리즘(populism) 확산/특세</li> <li>○ 대의 민주주의 한계 봉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에 대한 무관심 증대</li> </ul> </li> <li>○ 디지털 기반 정치 확대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토 국가 및 시민권에서 사이버 국가 및 시민권으로 국적 개념이 확장</li> <li>- 온라인을 통한 정당, 정치활동 증가</li> <li>- 온라인 기술을 통한 시민참여활동(직접적 정치참여 및 의사결정) 확대</li> <li>- 에코챔버(<b>echo chamber</b>) 현상, 확증 편향 등으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li> </ul> </li> </ul>

## 정 치

-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정책결정, 의사결정
  -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한 의사결정, 정책결정 확산
  - 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회 예측 기술의 활용성 높아짐

---

- 권력구조 변화: 헌법 개정을 통한 정치체제 변동
  - 내각제 또는 대통령 중임제
  - 대통령 중임제,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등을 중심으로
- 비례대표제 강화 등의 선거제도 개혁
- 선거 참여 연령이 하향될 것임
  - 선거권 연령 하향
  - 일부 피선거권 연령 하향

---

- 새로운 권위주의 부상
  - 관료중심 사회 가속화: 관료들의 권한과 파워의 심화
  - 최소주의적 국가 개입에서 능동적이고 전면적인 국가 개입으로
- 정당구조 변화
  - 양당제 구조 → 다당제(3당제) 구조
  - 양대 정당의 보수화,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는 새로운 소수 정당의 출현과 강화
  - 양당 정치의 퇴보와 대안적 정치구조 등장
  - 지방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
- 정당이 정책 중심으로 발전: 선거 승리를 위하여 정책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
- 입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 삼권분립 훼손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

- 정치권(분야) 세대 교체
  - 87년 세대, 586세대의 지배력 약화와 퇴조, 젊은 정치인의 등장
  - 다양한 세대의 포진, MZ세대의 정치 세력화
  - 10년 내 상대적으로 세대교체가 대폭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자유주의/보수주의 시장경제 지향성 강화
  -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
  - 코로나 이후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대한 요구 폭발
  - 보수주의 정부의 집권으로 신자유주의 개혁
  - 규제 완화에 대한 압력 증가
  - 극우화 진행,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확산
-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약화(위와 대립적 양상)
- 베이비붐 세대의 정치적 권한/영향력 확대 (다수의 투표권 확보)
-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증가
  -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 여성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수, 비중 증가
  - 여성 우대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 청년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증가
  - 20~30대 청년세대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
-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불안 심화, 정치적 양극화 심화
  - 소득과 자산,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 급진적 개혁 아젠다와 정책 대안 부상
  - 극우와 새로운 권위주의 부상

## 정 치

- 정치 지형의 양극화 강화
- 지역 감정 보다 지역 간 불균등에 의한 지역 간 갈등이 심화
- 정치 지형의 변화
  -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대립의 약화로 실용정치 강화
  - 지역 기반이 아닌 세대별, 성별 기반의 정치 지형 창출될 것임
- 위험 거버넌스로서의 규제 및 정책 역할(???)
  - 기술 규제: 자국 보호정책의 활용
  - 기술 변화 과정에서 규제 지체 현상 심화

-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고민
  - 지역 공동화, 수도권 집중,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으로
  - 메가시티 확산, 지방도시 쇠퇴
  - 지방자치제도 붕괴, 지방정부의 재정불안 문제 심화
- 지방정치(정부)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강화
  - 지방 정부의 경제적 자율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 활성화
  - 비수도권 광역, 수도권 기초 단체 단위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교류 협력 확대
  - 자원, 에너지, 보건의료 분야 등
  -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대한 실리적 접근(경제 협력 진행)
  - 민간 방문 등 교류 확대
  - 북한의 대외 개방 확대
- 북한한 휴전체제 종식과 대북관계 변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 북한의 정세 불안 고조
  - 북한 체제의 균열
- 남북 이질화 심화
- 북한 관련 정치 이슈 지속적으로 발생
  - 남북 관계의 긴장과 해빙이 반복
  -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국내정치 논쟁 격화

## 경 제

- (잠재)성장률 하락, 정체: 저성장(1~2% 수준) 기조(하에 부분적 경제성장) 심화
    - 저성장 상황 지속(고착화), 역성장 위험 증가
    - 저성장 구조의 고착
    - 저출산 고령화가 저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팬데믹으로 경제위기 +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회복
  - (전반적인) 소비 위축
  - 저금리 추세 지속 vs. 이자율의 상승(점진적, 소폭 또는 지속적 상승)
    - 저금리 구조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다
    -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해도, 더디게 증가할 것
    -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리조정 실패와 인플레이션
    - 금리 인상과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가계부채 위기 현실화
  - 경제 변동성과 불안정성 확대
    -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 물가 인상 가속화 현상
    - 인플레이션 확산과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 저성장과 빈번한 경제 위기,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경기 변동
    - 전반적인 소비 위축
  - 자산시장, 금융시장의 지속적 확장
    - 코스피 5,000 돌파
- 
- 일자리 감소, 실업률 상승, 노동(시장) 양극화/계층화
    - 디지털 전환 가속화(자동화, AI, 로봇 사용 확대로 인한)
    - 제조업 분야 고용 인력 지속적 축소(서비스 경제화)
    - 실업자 증가
    - ICT 분야의 경우 전문인력, 숙련자는 오히려 부족
    - 고소득 직장과 불안정 일자리(플랫폼) 간 양극화 심화, 노동자 계급의 양극화
    - **gig economy** 현상(긱 노동 확대)
  - 조직 노동 쇠퇴 또는 변화
    - 노동조합의 조직률/가입률 감소
    - 대기업 사무직 노동조합의 활성화로 노동운동 세력 교체
  - 근로형태의 다양화, 유연화 등 새로운 노동방식 출현, 새로운 노사관계에 대한 요구, 플랫폼 노동 증가
    - 정규직 노동자/근로자 감소, 기존 고용관계의 변화
    - 고용 대체 기술 활성화: 육체노동 자동화와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노동 확산
    - 실적 기반의 재택근무와 자율근로, 플랫폼을 활용한 유연한 노동 등 새로운 형태 고용/노동 증가
    - 인공지능, 로봇의 인간 대체 심화(로봇의 경제활동 증가로 일자리 감소)
    -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지배력 강화(플랫폼 노동이 주류 형태로 정착될 가능성)
    - 기계로 대체되지 못하는 돌봄서비스(복지, 보건의료) 영역의 저임금 문제
    - 노동, 고용관계에 대한 규제 완화, 노동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직종)의 증가,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
    -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
    - 법률, 의료, 교육 등 전문서비스 영역에서 평판기반 플랫폼 서비스 성장, 전문직 플랫폼 노동화
-

## 경 제

- 원격근무, 재택근무 활성화/일반화
    - 새로운 방식의 근로 형태로서 재택근무 확대
    - 근무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방식의 변화
  -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란 지속
  - 실질 임금 수준의 악화
    - 물가 상승 대비 낮은 임금 상승
  -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실업문제 완화
  - 노동 안전의 중요성 강조
  - 외국인 노동자 (수) 증가
- 
- 플랫폼 경제의 가속화
    - 플랫폼 경제 및 기술 발전이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로 연계되는 것이 쉽지 않음
    -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규제 강화(법인세 등 조세 부과체계 변화)
    - 플랫폼 노동의 급속한 증가는 가짜 자영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는 노동법 변화를 추동할 것임
    - 노동소득 분배율 악화, 불평등 심화로 연계
  - 기업 간 격차 확대, 승자독식 현상 심화
    - 저대(빅) 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 등의 본격적 출현과 규모 확대
    - 대기업의 비중과 영향력은 더욱 증가
  -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경영의 영향력 확대
    - 글로벌 플랫폼 기업, 글로벌 OTT 영향력 확대, 경쟁심화 -- 국내시장 잠식 우려
    - 서비스 시장의 국제화(서비스 교역화)
    - 디지털 통상무역 확대
    - 초국적 기업에 대해서 국내 법률 적용의 어려움 증가
  -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확대
    - 온라인 시장의 비중 증가: 온라인 비대면 거래 활성화
    -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독점화 진행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비경제활동 다변화, 기존 시장 플랫폼의 침체 및 쇠락
- 
- 디지털 경제(전환) 가속화, 디지털화는 빠르게 진행
    - 데이터가 경쟁우위 핵심 요인으로 부각: 데이터의 축적, 활용, 보호 등이 중요
    - 정보/데이터의 생산과 유통, 통제를 통한 이익 창출과 이익 추구
    - 전자산업, 반도체산업 중심의 편중적 성장(신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로서)
  - 디지털 금융/화폐 체계 본격화 — 화폐 시스템의 전면적 변화
    -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 현금 사용 증가
    - 핀테크 등 대체 결제 수단 본격화
    -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자화폐, 가상화폐의 본격적 확산과 사용 증가
  - 디지털 화폐(통화)가 국가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
    - 가상화폐, 디지털 통화는 기존 화폐, 경제 시스템에 대한 공격 요인으로 작용
    - 가상화폐, 디지털 통화로 인하여 화폐가치 변동성 심화
  -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투자 및 수익구조 변화(??)
  - 소비자 주권(개입 범위) 확대
    - 대량 맞춤형, 대량 개인화 제품 생산 확산

## 경 제

- 상거래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에서 구독 서비스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화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제 부상**
    - ESG GDP
    - ESG 경영과 이에 대한 사회적 압력 증가
    - 극단적 이익 추구보다 사회적 책임과 공익을 고려하는 기업의 생존
    - ESG 법제 도입과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시의무 확대
- 
-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제조업의 서비스화, 가치사슬 디지털화(변화/재편)
    - 로컬화/지역거점화 진전, 지역공급망 강화, 글로벌 생산 분업의 지역화
    - 생산기지(공장)의 해외 이전 증가 vs. 제조업 본국회귀(re-shoring)의 심화
  - 국제 경제, 교역(무역)의 불확실성 증가
    - 무역 및 해외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정치와 경제의 결부 현상)
    -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
    -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요구 증가
  - 권역 내 교역 비중 증가
    - 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 중국과의 경쟁 심화
    - 대일 무역적자 지속
    - 동아시아 국가 간 느슨한 경제연합 탄생
  - 국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우리나라의 영향력이)
- 
- 빈곤, 소득 및 자산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
    - 경제적 불평등(소득불평등) 심화, 이전에 비해 가장 최고 수준으로 심화 가능성
    - 정보 비대칭, 정보 독점 강화, 일자리 축소, 노동시장 양극화 등으로 인해
  - 무역, 국제수지, 노동시장 등 경제 전반의 양극화 심화
  - 가계부채 문제 심화/장기화
    - 디플레이션이 만연하고, 가계의 파산 위험이 증가
  - 자산소득 상대적 비중 증가 + 노동소득 상대적 비중 감소
  - 주택가격 상승 지속 vs. 주택가격 하락과 부동산 버블
    - 수도권, 대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
    - 수도권 및 대도시의 주택난 지속
  - 부동산 지역 격차 확대(지역 소멸과 저성장이 결합되어)
- 
- 국가채무 증가, 재정 압박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 또는 가중
    - 증세가 용이하지 않음 (조세저항이 증가할 것)
    - 국가 재정 지출 요인은 다양하며, 이로 인한 지출 증가가 지속될 것임
- 
- 소유 중심의 경제에서 사용/활용 중심의 경제구조로 변화
    - 공유경제 확산과 활성화 (교통 영역을 중심으로)
  - 이윤, 성장 중심의 경제에 대응하는 대안적 경제담론과 패러다임 등장
  - GDP 성장을 대체하는 발전 지표의 주류화(???)
    - GDP 중심 국가발전 지표의 변화 논의 가속화
-

## 사 회

- 사회적 양극화
    - (근로)소득, 자산소득(부)의 심각한 차이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
    - 교육의 양극화 현상
    - 문화 자본의 양극화
    - 신기술 적응 여부에 따른 격차(취약집단 등장), 기술에서 소외되는 계층 확대
    - digital divide, untact divide(비대면 서비스 접근성 저하로 배제되는 현상)
    - : 디지털 문맹과 디지털 네이티브 간 격차
    - 아동, 청소년, 청년 세대의 취약성 심화
  - 세대 간 갈등 심화/첨예화
    -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이념/가치관 차이
    - 일자리, 자산 분배 불평등, 사회보장제도 불균형 등에 따른 갈등
    - 연령 차별 관련 쟁점의 부상
  - 성별(젠더) 갈등 첨예화/격화
    - 언어, 교육, 공간 등 일상생활에서 성 중립 논의 확산
    - 성별 갈등 극단화와 ungendering 시대
  - 인종 간, 국적 간 갈등 증폭, 인종차별 심화
    -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사회 내 갈등 및 불평등 심화
  -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
- 
- 사회보장체제의 전면 재편 추진(논의 활성화, 정책적 노력)
    - 복지정책의 확대 및 강화
    - 보편적 복지정책, 서비스의 확대
    - 사회보험 시스템의 변화 등 사회안전망 전면 재설계 필요성 대두
    - 다양한 복지정책 실험 시도
  - 출산을 향상 정책은 한계에 직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예상
    - 삶의 질에 대한 정책 중심으로 전환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득보장정책 전환
    - 연금제도의 근본적 변화
    - (공적)연금과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의 재정 적자 증가
  - 사회적 돌봄 체계의 전면적 개편: 돌봄보장에 대한 기본권 개념 확장
  - 사회구성원 심리건강, 정신건강 악화
    - 경계선적 (성격장애)행동, 조현병, 우울, 불안, 공격성, 폭력성 증가
    - 자살(율) 증가
- 
- 공정성 (가치) 강조, 공정성에 대한 민감성 증가
    - 불평등, 경쟁 심화로 인하여 결과적 평등보다 절차적 평등을 지향/강조
  - 적자 생존/각자도생 강화, 경쟁 중시 가치관,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 팽배/확대
    - 가족 부양의식 쇠퇴, 개인주의
    - 암호화폐, 주식, 자산 투자에 의한 자산 증식 선풍
  - 존엄사, 안락사 문제 제기
    - 적극적 안락사 허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논란
    - 존엄사에 대한 이슈화
- 
- 인구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
    - (기대)수명 연장, 노인인구 (비율) 증가



## 사 회

- 고령자 일자리 문제가 증가 + 노인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 법정 정년연령 상향(연장), 은퇴연령 폐지(소멸)
  - 노후소득보장 문제와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
  - (노인)의료비 지출 지속적 증가
  -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공적)연금 재정 불안성 증가
  - 노인계층에 대한 재개념화
  - 능력 있는(구매력이 있는) 노인세대 등장
    - 586세대 노인인구로 편입(진입), 기존 노인세대와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행사
    - 건강한 노인인구 증가는 인생 이모작 문화 확산/일반화
  -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경제활동인구의 부양 부담 증가
    - 노인부양비 증가로 사회보험(연금, 건강) 보험료 부담 증가
- 
- 저출산 지속(출산을 저하)
    - 저출산으로 인한 (총)인구 감소
    - 저출산의 부정적 여파 확산(사회보험 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출산율 회복: 능동적이고 전면적 국가 개입으로
- 
- 수도권 집중 경향 심화(도시화/인구의 도시 집중 지속)
    - 인구 감소와 연계되어 지역소멸 위기 심화
    - 지방권 공동화, 지역거점도시들의 주변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심화(지역 간 불균형 심화)
  - 도시화 문제에 대한 반발로 탈도시화 현상의 등장
    -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재조명과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공동체 등장
  - 공유도시, **컴팩도시**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도시 등장
    - 새로운 업무 공간과 생활 공간의 등장으로 도시 공간의 재편
- 
- 가족(제도)의 변화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 가구에서 세대로의 전환
    - 1인 가구 증가 지속 + 비증 증가, 고령(노인) 1인 가구 증가
    - 한 자녀 가족 증가(자녀 수 감소)
    - 다문화 가족 확대
    -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가족 증가: 동성 가족 합법화, 혼외 출산 증가, 비혼 증가
    - 가족부양 의식 쇠퇴
    - 비혼, 동성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출현에 따른 입양 문화 확산
    -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증가
  - 비혼 증가(혼인율 감소), 만혼 증가, 비혼 출산 증가
    - 여성의 선택 결과로 인해
- 
- 개인화 추세(개인주의) 강화, 소외 현상 심화
    - 비대면 (문화) 확산(온라인을 통한 교류 확대, 소비 형태도 온라인으로)
    - 사회적 고립과 소외 증대, 개인이 원자화되고 단절되는 환경이 조성
    - 재택 근무 증가 + 외부활동(outdoor activity) 감소: 집(주거)의 역할 변화
    - 공동체주의 약화
    - 디지털 기술 등 접근 및 활용 격차로 인한 소외현상 심화
  - 온라인을 통한 생활방식의 확대
    - 비대면 스포츠/문화/일상활동의 증가
-

## 사 회

- 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
  - 아동돌봄에 대한 갈등과 분쟁
    - 교육, 보육, 돌봄의 경계 구분에 대한 갈등, 해당 인력 간 역할 갈등
  - 아파트 중심 주거 강화
    - 단지 중심의 폐쇄성, 집값 경쟁과 상대적 박탈감, 부동산 문제 집중 현상
- 
-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심화
    - 결혼이민자(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귀화자,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인 노동자 등) 증가
    - 북한이탈주민 증가
    - 다문화사회 요소 강화 및 다문화 가족 확대
  -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전환 혹은 적극적 이민정책을 수용
    - 고용허가, 영주권 등 외국인 정책에 관련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자율성 허용 논의
    - 우수인재, 기술 보유자 등 새로운 이민자 국내 유입과 증가
  -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활용도 증대
    -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통한 개인 맞춤형 문화 소비 증가
- 
- 대규모 교육기관(대학 등) 구조조정
    - 지방(사립)대 위기 심화와 붕괴 위험성, 운영난 심화
    - 수도권 대학 집중화 및 독점 가속화
    - 지방 국립대 통폐합
    - 대학 진학률 하락
    - 폐교 대학 증가, 학생 수 감소로 초중고 학교 폐교 수 증가
  - 학교교육(공교육)의 위상 하락
    - 비교과 과정(정규과정 이외), 사교육 시장 활성화 지속
  - 기술 발전과(에 따른) 교육(체제) 변화
    - 원격교육 비중 증가(중요성이 높아짐), 확대
    - 인공지능 등 새로운 방식의 교육체제 확립
    - 온디맨드(on-demand) 학습 및 즉각적 정보전달 방안에 대한 요구 증가
  - 지식 수명 주기의 지속적 단축, 학습에 대한 개념 변화
  - 평생교육체제 구축, 강화, 활성화
    - 생애 진로교육, 평생학습 등 평생 교육과 학습 확대
  - 융합형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전공교육 강화 요구 증대
  -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 
- 한국문화(K-문화)의 세계화
    - 한류 문화 확산
    - 글로벌 K-한류세대가 가져오는 사회문화적 영향력과 결집 증대
    - 문학 콘텐츠의 해외 수출 확대에 수반한 번역산업 성장
  - 문화 부문의 급격한 성장
  - 문화예술 부문에서 온라인화 증가
    -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갤러리, 랜선 여행 등 증가
  - 지속적인 복고주의 유행
-

## 기 술

- 디지털,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등 혁신 기술: 가상사회 및 가상경제 활성화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일상화 + 관련 산업/기술의 중요성 확대
    - 지능형 자동화 기술 발달
    - 인공지능 기술이 지배적인 기술 패러다임으로 안착될 가능성
    - 일상생활, 생산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일반화
    - 전 세계 언어장벽 문제 해소: 앱을 통한 언어 간 통역 서비스 가능
    -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실용로봇 개발 현실화
    - 5G, 6G 등의 통신기술 발달, 6G 이동통신 상용화
  - 가상현실, 증강현실, 실감기술 등의 급격한 발전과 보편화
    - 가상현실 기술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접목한 다양한 영역 출현
    - IoT, AI, VR, 자율주행 등 가상공간(현실) 기술의 구현/활성화, 발달
    - 디지털 공간에 대한 의존도 증가
    - 3D,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메타버스 기술 발달, 관련 디바이스 보급 확대, 보편화
    -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
  - 생체정보를 활용한 개인 식별(신분 인증제) 상용화
    - 신분증 제도 변화
    - 개인신용 정보업에 생체정보 활용 확대
  - 데이터/DB/정보 독점으로 권력 편중 및 영향력 강화
    - 정보 비대칭, 정보 및 DB의 독점 강화
    - 공공영역에서의 오픈데이터 요구와 활용 증가
    - Dark web 등과 같은 제도/법률 외부에 존재하는 불법적 영역의 존재와 지속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윤리적 논란이 확대될 것
    - AI의 급속한 보급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 자의식 수준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란(로봇 권리, 윤리)
    - 기술 윤리 및 기술 통제 논의의 부상
    - 알고리즘의 윤리와 책임에 관한 법률 제정 + 관련 규제에 대한 국가 간 경쟁
  - 정보 보안 등 정보화 관련 사회적 이슈 제기과 증가
    - 정보보호 기술 확산(향상)과 중요성 대두: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 등
    - 사생활 침해 문제, 정부 통제와 규제 문제에 대한 논란 증가
    - 비대면 서비스, IT 기술 확산 등으로 인한 사이버 리스크 증가
    - 사이버 범죄 증가
  - 개인 매체 확산에 따라 가짜 뉴스(fake news) 등 정보 편향 심화
    - 비대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정보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
    - 확증 편향의 미디어 소비 경향 심화
    - 소셜 미디어 확산으로 여론조작의 가능성(프라이버시 침해와 더불어)
- 
- 스마트 제조 기술(스마트 팩토리/스마트 공장) 발달과 상용화
    - 3D 프린팅, CPS, 로봇, 자동화 진전
  - 반도체, 컴퓨터 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와 비약적인 발전
    - 양자컴퓨터 같은 새로운 세대의 하드웨어 상용화와 보급
    - 양자기술, 양자역학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양자컴퓨터 보편화
    -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서 의료, 금융, 통신, 산업 등 다양한 분야 활용, 난제 해결
    - AI 반도체 진화
  - 우주여행(항공) 시대 도래/개막
    - 우주 개발 확대

## 기 술

- 무선 에너지 전송, 급속 무선충전,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에 따른 산업 및 생활 변화
  - 도시 간, 지역 간, 장소 간 교통수단의 변화(종류 확대 등): 미래 모빌리티
    - 도시형 헬기, 수상 운송, 자기부상 열차
    -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자동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 **통합교통서비스 /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등 운송과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
  -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변화
    - 저공해 운송 수단/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자동차) 증가와 보편화, 사용기반 정착, 관련 기술 활성화
    -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 확대, 완전 자율주행 실현
    - 내연 기관 자동차 퇴출 시작
    - 교통시스템, 법규, 자동차 보험 등 관련 제도의 재편
  - 해저개발이 확대/확산: 자원, 관광 등의 측면에서
  - 스마트 기술 발전
    -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city), 스마트 농업(farming), 스마트 교통 등
    - 지능형 자동화 기술의 활용
- 
- 노령화에 따른 의학 및 웰빙 관련 영역의 발달
    - 돌봄서비스(노인, 장애인)에 대한 R&D 강조/적용
    - 돌봄서비스 로봇 등장
    -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챗봇의 상용화/일반화
    - 치매 조기진단과 치료
  - 원격의료 기술 발달
    - 원격/비대면 의료 도입 요구 확대와 허용
    - 의료 전달체계 개편 요구 심화
    - 기술 활용은 규제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결정(영향을 받을 것임)
  - 의학/보건의료 기술 발전
    - 인공장기 확대, 암 치료제 개발, 치매 치료제 개발
    - 백신과 진단기술 발달
    - 의학기술 발달로 인한 인간수명 연장
    - 백신개발 등 제약 및 바이오 연구 및 사업 투자 활성화, 해당 산업의 중요성 확대
    - 출산을 돕기 위한 의학적 연구 강화
  - 유전공학 (기술) 발전, 바이오 기술 진보
    - 유전자 기술, 바이오 인공 장기,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의 발전 및 상용화
    - 유전자조작식물 논쟁 제기과 반복
- 
- 국가(재정) 중심의 R&D 투입 증가 - 새로운 기술 발굴의 가능성
    - 응용기술 중심성 강조
    - 기초과학의 부실한 학문 생태계 심화
-

## 환경

- 에너지 부족 문제 심화
    - 전기 소비 확대로 전력생산 차질, → 전력 부족 문제
  - 원자력 발전의 한계 노출, 원자력 발전의 축소/감소 등
    -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논쟁의 격화
    - 원전 구축 및 관리 문제: 처리수, 방사능 오염 등
    - 반면에 기존 원자력 발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핵융합 발전소 건설이 추진
  - 신재생에너지(수소, 태양광, 풍력 등) 확대/상용화(저탄소 기술의 주류화), 보편화
    - 화석연료 의존도(사용) 감소(대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확대
    - 대체 에너지산업의 중요성 확대: 대체 에너지 생산(량) 증가
    - 재생가능에너지의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도달, 분산형 에너지 체제의 전면화
    -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 및 활용 증가
    - 탈탄소화 강조: 탄소세 과제 논의, 산업구조 변화, 일자리 충격 확대
    -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국가,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작용
    - 탄소중립국 선언으로 산업구조의 양극화 심화
    -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로 인한 사회적/정치적 갈등 증폭(원전 회귀,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판 고조 등)
  - 앞 항목과 연계: 화석연료 사용 감소(쇠퇴), 관련 분야 구조조정 압력
  - 환경변화 대응 기술: 연구, 활성화, 발전
    - 친환경, 에너지 기술 또는 대체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 증가 및 활성화
    - 재활용 제작 및 전환 기술
    - 탈탄소 관련 R&D 기술 투자 확대
  - 에너지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
  - 전력시장 개방과 민영화 확대: **기업 PPA** 도입
- 
- 환경 오염 문제 전반적으로 심화
    -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폐기물 등
    - 미세먼지, 황사 등의 대기 오염 일상화(심화)
    - 토질 오염, 수질 오염, 해양 오염
    - 환경오염으로 외부활동 감소
  - 대기 오염 심화
    - 황사, 미세먼지 발생 기간 확대
    - 미세먼지로 인한 인접국(중국)과의 갈등 지속
  - 해양 오염 및 해양 생태계 와해 문제 심화
  - 방사능 오염(수산물 수입) 문제로 인접국(일본)과의 갈등 (지속)
    - 원전수 방류 문제
  - 쓰레기 처리의 한계
    - 쓰레기 매립지 포화, 이로 인한 지역 간 갈등 심화
  - 환경에 대한 규제 (요소) 강화: 국내 + 국제
    - 친환경 제품 생산 압력, 정부 규제 요구 강화: 환경의식 강화
    - 생산비용 상승 회피를 위해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지역)로 생산거점 이전 경향
    - 탄소발생 유발 기술,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강화: 유통제품의 화학물질 함유량 규제 등
    - 온실가스 감소 등 국제사회 압력
    -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본격화
-

## 환경

- 화석에너지 이용 발전과 수송의 단계적 금치 조치 시행
  - 순환경제 강조(순환경제로의 전환 담론 주류화)
    -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성 추구
    - 친환경 산업의 대두 등
    - 자원 재활용 기술의 중요성 대두, 관련 기술 활성화
    - 탈플라스틱, 친환경 제품과 관련 시장 확대
    - 복합소재, 바이오플라스틱, 초경량금속 등의 수요 증가
  - 친환경 에너지의 비친환경적 요소 쟁점화
    - 폐태양광 패널 같은 새로운 쓰레기 발생
  - 탄소세 도입, 녹색정치 등의 약진과 활성화
    - 탄소세(과세) 도입 시행, 관련 산업구조 변화와 일자리 충격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
    - 탈탄소화, 녹색 경제, 녹색 일자리 정책의 강화
    - 기후위기 등 환경위기 심화에 따른 정치 의제와 판도 변화
    -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따른 논란과 정치적 갈등 발생
- 
- 재난의 규모와 위험도 증가
    - 대규모 복합 사고 위험도 증가 및 관련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 거대화
    -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 증가, 지역별 국지성 호우의 일상화, 극단적 기상 변동 발생
- 
- 기상이변 일상화, 지속적 발생 가능성: 지구온난화, 기후 변화, 이상기후 심화
    - 극단적 이상기후(기온) 현상(폭우, 한발, 폭염, 한파)의 일상화/연례화
    - 평균기온 상승, 아열대권 확대, 2계절화(여름, 겨울): 한반도 아열대 기후화
    -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으로 (세계)경제 불안정성 증가
    -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비용 증가
    - 극지방 빙하 (극적인) 감소, 해수면 상승
  - 기후 난민 증가
    - 이상기후 재난에 따른 기후 난민 증가와 쟁점화
  - 생물 다양성 악화
    - 한반도의 아열대화로 식생 변화
    - 멸종 위기 동식물의 증가, 인간과 서식지를 같이하는 동식물 종의 감소
  - 물 부족(음료수, 산업용, 농업용 등) 심화
    - 물 사용 제한, 시간제 사용, 수도세(요금) 인상 등 조치
  - 식량 (자원) 부족 문제 심화, 식량 자급률 하락
    - 이상 기후와 생물 다양성 악화, 아열대 기후화 등으로 인해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수산업의 구조 변동 초래
    - 농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존 문제  
vs. 기후위기 대응의 거점으로서 농촌과 농업의 중요성 부각
  - 신종 (인수 공통) 감염병(전염병) 증가 + 팬데믹 재발생: 일상화 우려
    - 신종 감염병, 질병 출현과 이로 인한 경제위기 재출현 간격(주기, 기간) 축소
    - 지속적인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과 감염 사태
    - 제2/제3,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증가와 경제위기 (주기적) 반복
    - 기후 변화(이상기후로 인한) 관련 질병 발생 심화, 부정적 영향 증가
  -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의 범위 확대
    - 신종 공해물질 증가에 따른 호흡기 질환, 신종 질병 확산

## 국 제 관 계

- 탈세계화와 자국 중심주의 강화
    - 보호무역주의 강화
    - 기술 민족주의 강화
    - 식량, 보건, 에너지 등 중요 항목에 대한 자급자족화, 지역화
    -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sation)
    - 국가 간 교역 마찰의 증가 가능성
  - 외교정책에서 자국민 보호에 대한 이슈 부각
  - 감염병 확산, 팬데믹 등으로 인하여 국제교류가 축소될 것임
  - 테러(사이버 테러 포함), 무기 개발, 전쟁 등 국가 안보 위협 증가
  - 유럽연합 와해(해체/붕괴)...
  - 기후 위기, 환경 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규제 강화(협약 등)
    - 기후변화, 탈탄소 정책에 대한 국제적 압력 증가
    - 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체결
    - 탄소 국경세 도입 논의와 확대
  - 인종 간, 민족 간, 이데올로기 간, 종교 간 갈등과 분쟁 심화
  - 우주 및 심해 개척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확대
    - 해양풍력, 태양광, 심해 자원 개발 등에 관련한 국가 간 갈등
- 
- 일본의 쇠퇴: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 한일 관계 악화
    - 일본 보수세력의 한국 견제 지속
  - 러시아의 귀환/역할 강화
  -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 - 중국의 영향력 증대
    - 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증가
  - 동북아(한중일)의 갈등 고조
    - 중국, 일본의 역사 왜곡과 같은 갈등 유발(동북공정, 독도 영유권)
    - 한중, 한일 간 영토 분쟁 심화(지정학적 갈등 심화)
- 
-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갈등 심화 and/or 지속(충돌 지속)
    - 제2 냉전시대 심화,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지적 충돌 가능성
    - (첨단)기술, 무역분쟁(갈등), 자원 확보, 군사(력), 외교 등 글로벌 패권 경쟁
    - 미국의 패권 약화와 중국 우위의 경쟁적 균형관계로 전환될 가능성
    - 국제관계 리스크 증가
  -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에 따른 외교적 압력
    -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
    - 미국과 중국의 대립 심화로 양국과의 관계 유지의 어려움 발생
    -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 따라 한국과 일본 간 갈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 코로나 등 글로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

#### 기 타

- 도시화 진전: 교통, 실업, 주거 등 도시문제 증가
-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재난, 사고, 위험 등의 파급속도와 범위 확대: 복잡성과 연결성 확대
- 자율주행 기술, 보험 등 신규 서비스 출현에 있어서 기준 정립 필요
- 모병제 도입과 정착 가능성
  -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논의
- 의료 인프라 격차에 따른 빈부 격차 심화
- 기본소득 논쟁 본격 부상
  - 기술 발전, 특히 AI, 지능형 자동화 기술로 실업이 증가하고, 기본소득 도입으로 연계



## [부록 3]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발생 가능성

〈부표 2〉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발생가능성

설문내용	평균	표준편차
1. '경제 성장과 발전'은 향후에도 최우선 정책목표로서 중요성을 유지할 것이다	6.63	1.98
2. 정부의 역할과 권한, 시장에 대한 개입은 확대·강화될 것이다	6.24	1.46
3. 정부 정책에서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 re-shoring)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5.74	1.61
4.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강화될 것이다.	6.47	1.47
5.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을 활용한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7.24	1.72
6. 정책 결정,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행정부의 역할 및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5.13	1.80
7.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젊은 세대가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5.45	1.74
8. 노인세대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6.34	1.49
9.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6.63	1.44
10. 청년세대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6.08	1.79
11. 지방정치와 지방정부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5.58	1.69
12. 경제성장률이 하락·정체되어 저성장 구조가 고착될 것이다.	7.47	1.20
1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7.13	1.04
14. 불안정한 일자리(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플랫폼노동 등)가 증가할 것이다.	8.11	0.76
15. 자율근무, 플랫폼을 활용한 유연한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7.61	1.55
16. 노동조합 조직률(가입률)이 감소할 것이다.	5.87	1.92
17.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청년)실업문제는 완화될 것이다.	3.92	1.75
18. 기업 간 격차 확대로 승자독식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7.24	1.17
19. 일상생활용품 구매에서 온라인 시장의 비중이 오프라인 시장의 비중을 넘어설 것이다.	7.61	1.13

170 미래사회 변동이 사회복지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예측 연구: 영향 변수 도출과 시나리오 작성을 중심으로

설문내용	평균	표준편차
20. 정보·데이터의 생산, 활용, 유통, 통제 등을 통한 기업 이윤 창출이 증가할 것이다.	7.76	1.32
21. 전자화폐, 가상화폐, 핀테크 등의 사용 증가로 '현금(화폐) 없는 사회'로 전환될 것이다.	6.58	1.88
22. 기업은 극단적 이익 추구보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경영(ESG)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6.45	1.75
23. 국내 기업의 생산기지(공장)가 해외로 이전하는 경향(Off-shoring)이 증가할 것이다.	5.68	1.79
24. 국제경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다.	6.11	1.39
25.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것이다.	6.11	1.31
26. 소득 증가를 상회하는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5.45	1.87
27. 주택가격 하락과 부동산 버블 붕괴가 발생할 것이다.	5.61	2.10
28. 세대 간, 연령 간 갈등이 증폭되고, 격화될 것이다.	6.58	1.67
29. 성별(젠더) 갈등이 확대·심화될 것이다.	6.68	1.28
30.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증가로 인종 간, 국적 간 갈등이 확대·심화될 것이다.	6.58	1.33
31. 출산율(출생아 수)은 현재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6.55	1.72
32. 자살률이 현재보다도 더 높아질 것이다.	6.08	1.48
33. 존엄사,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될 것이다.	6.97	1.37
34.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질 것이다.	6.74	1.54
35. 수도권, 대도시에 인구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6.82	1.49
36. 일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이 진행될 것이다.	7.37	1.44
37. 다양한 형태의 가족 (동성 부부, 사실혼 등)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것이다.	6.76	1.91
38.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약화될 것이다.	5.68	2.03
39. 사교육 시장이 현재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5.92	1.62
40.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전세계 언어 간 장벽이 해소될 것이다.	5.76	1.88
41. 정보, 데이터(DB)의 독점적 소유와 활용으로 권력 편중 및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7.03	1.24

설문내용	평균	표준편차
42.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이다.	7.63	1.13
43. 개인 매체 확산에 따라 사생활 침해,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7.05	1.36
44. 사람이 전혀 근무하지 않는 무인공장, 첨단공장이 본격적으로 출현할 것이다.	6.87	1.53
45.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자컴퓨터가 상용화, 보편화될 것이다.	6.63	1.48
46. 도시 간, 지역 간, 장소 간 교통수단의 편리성과 이동 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될 것이다.	6.53	1.72
47. 완전자율주행(무인) 노선버스(시내버스)를 운행할 것이다.	6.42	2.18
48.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로봇 활용이 일상화될 것이다.	6.00	2.19
49. 원자력 발전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5.39	1.99
50.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7.21	1.65
51.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생산 비용이 낮아져서 화석에너지(석유, 석탄, 가스) 생산 비용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다.	5.82	2.00
52. 탄소중립국(탈탄소) 실현과 관련한 법률(탄소세 등 신설 포함)이 제정될 것이다.	7.16	1.62
53. 미세먼지,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7.03	1.60
54. 쓰레기 매립장 확보와 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다.	7.61	1.13
55. 플라스틱 사용/유통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가하고, 무역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7.00	1.29
56. 기후변화로 인하여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6.45	1.80
57. 자연재해(가뭄, 홍수, 국지성 호우 등)의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8.05	0.99
58.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질병이 증가할 것이다	7.66	1.36
59. 제2의 팬데믹(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것이다.	7.61	1.46

[부록 4]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파급효과

〈부표 3〉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파급효과

설문내용	평균	표준편차
1. '경제 성장과 발전'은 향후에도 최우선 정책목표로서 중요성을 유지할 것이다	5.82	2.18
2. 정부의 역할과 권한, 시장에 대한 개입은 확대·강화될 것이다	6.08	1.46
3. 정부 정책에서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 re-shoring)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5.92	1.81
4.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강화될 것이다.	6.45	1.75
5.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을 활용한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6.24	1.98
6. 정책 결정,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행정부의 역할 및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4.79	1.83
7.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젊은 세대가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5.55	1.87
8. 노인세대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5.84	1.98
9.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6.05	1.66
10. 청년세대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5.76	1.64
11. 지방정치와 지방정부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5.58	1.70
12. 경제성장률이 하락·정체되어 저성장 구조가 고착될 것이다.	7.42	1.45
1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6.55	1.48
14. 불안정한 일자리(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플랫폼노동 등)가 증가할 것이다.	7.74	1.08
15. 자율근무, 플랫폼을 활용한 유연한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7.34	1.63
16. 노동조합 조직률(가입률)이 감소할 것이다.	5.21	1.98
17.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청년)실업문제는 완화될 것이다.	4.29	1.66
18. 기업 간 격차 확대로 승자독식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7.05	1.37
19. 일상생활용품 구매에서 온라인 시장의 비중이 오프라인 시장의 비중을 넘어설 것이다.	7.13	1.55

설문내용	평균	표준편차
20. 정보·데이터의 생산, 활용, 유통, 통제 등을 통한 기업 이윤 창출이 증가할 것이다.	7.18	1.52
21. 전자화폐, 가상화폐, 핀테크 등의 사용 증가로 '현금(화폐) 없는 사회'로 전환될 것이다.	6.18	1.98
22. 기업은 극단적 이익 추구보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경영(ESG)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5.61	2.05
23. 국내 기업의 생산기지(공장)가 해외로 이전하는 경향(Off-shoring)이 증가할 것이다.	5.79	1.93
24. 국제경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다.	5.13	1.79
25.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것이다.	5.68	1.54
26. 소득 증가를 상회하는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6.61	1.90
27. 주택가격 하락과 부동산 버블 붕괴가 발생할 것이다.	6.74	2.17
28. 세대 간, 연령 간 갈등이 증폭되고, 격화될 것이다.	6.71	1.47
29. 성별(젠더) 갈등이 확대·심화될 것이다.	6.68	1.45
30.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증가로 인종 간, 국적 간 갈등이 확대·심화될 것이다.	6.39	1.69
31. 출산율(출생아 수)은 현재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7.42	1.33
32. 자살률이 현재보다도 더 높아질 것이다.	5.45	1.69
33. 존엄사,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될 것이다.	5.71	1.90
34.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질 것이다.	6.37	1.79
35. 수도권, 대도시에 인구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6.92	1.57
36. 일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 진행될 것이다.	6.58	1.73
37. 다양한 형태의 가족(동성 부부, 사실혼 등)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것이다.	6.05	2.05
38.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약화될 것이다.	5.42	2.04
39. 사교육 시장이 현재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5.21	1.71
40.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전세계 언어 간 장벽이 해소될 것이다.	6.11	1.56
41. 정보, 데이터(DB)의 독점적 소유와 활용으로 권력 편중 및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7.13	1.26

174 미래사회 변동이 사회복지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예측 연구: 영향 변수 도출과 시나리오 작성을 중심으로

설문내용	평균	표준편차
42.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이다.	6.84	1.44
43. 개인 매체 확산에 따라 사생활 침해,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6.13	1.89
44. 사람이 전혀 근무하지 않는 무인공장, 첨단공장이 본격적으로 출현할 것이다.	6.61	1.62
45.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자컴퓨터가 상용화, 보편화될 것이다.	6.45	1.59
46. 도시 간, 지역 간, 장소 간 교통수단의 편리성과 이동 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될 것이다.	6.03	1.76
47. 완전자율주행(무인) 노선버스(시내버스)를 운행할 것이다.	5.74	2.11
48.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로봇 활용이 일상화될 것이다.	5.76	1.98
49. 원자력 발전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5.50	1.83
50.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6.34	1.86
51.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의 생산 비용이 낮아져서 화석에너지(석유, 석탄, 가스)의 생산 비용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다.	6.45	1.80
52. 탄소 중립국(탈탄소) 실현과 관련한 법률(탄소세 등 신설 포함)이 제정될 것이다.	6.82	1.54
53. 미세먼지,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7.32	1.40
54. 쓰레기 매립장 확보와 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다.	6.68	1.53
55. 플라스틱 사용/유통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가하고, 무역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6.76	1.46
56. 기후변화로 인하여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7.05	1.79
57. 자연재해(가뭄, 홍수, 국지성 호우 등)의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7.66	1.34
58.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질병이 증가할 것이다	7.45	1.45
59. 제2의 팬데믹(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것이다.	7.66	1.56

## [부록 5]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바람직성

〈부표 4〉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바람직성

설문내용	평균	표준편차
1. '경제 성장과 발전'은 향후에도 최우선 정책목표로서 중요성을 유지할 것이다	5.26	2.09
4.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강화될 것이다.	3.26	1.75
5.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을 활용한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5.97	1.64
9.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7.39	1.29
12. 경제성장률이 하락·정체되어 저성장 구조가 고착될 것이다.	2.63	1.46
1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7.16	1.48
14. 불안정한 일자리(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플랫폼노동 등)가 증가할 것이다.	2.71	1.71
15. 자율근무, 플랫폼을 활용한 유연한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5.47	1.72
18. 기업 간 격차 확대로 승자독식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2.66	2.02
19. 일상생활용품 구매에서 온라인 시장의 비중이 오프라인 시장의 비중을 넘어설 것이다.	5.24	1.28
20. 정보·데이터의 생산, 활용, 유통, 통제 등을 통한 기업 이윤 창출이 증가할 것이다.	5.34	1.70
26. 소득 증가를 상회하는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1.95	0.96
27. 주택가격 하락과 부동산 버블 붕괴가 발생할 것이다.	3.79	2.26
28. 세대 간, 연령 간 갈등이 증폭되고, 격화될 것이다.	2.26	1.52
29. 성별(젠더) 갈등이 확대·심화될 것이다.	2.18	1.23
30.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증가로 인종 간, 국적 간 갈등이 확대·심화될 것이다.	2.32	1.56
31. 출산율(출생아 수)은 현재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2.37	1.67
33. 존엄사,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될 것이다.	5.18	1.54
34.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질 것이다.	5.89	1.91
35. 수도권, 대도시에 인구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2.61	1.42

176 미래사회 변동이 사회복지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예측 연구: 영향 변수 도출과 시나리오 작성을 중심으로

설문내용	평균	표준편차
36. 일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이 진행될 것이다.	4.18	1.74
37. 다양한 형태의 가족(동성 부부, 사실혼 등)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것이다.	6.76	1.84
41. 정보, 데이터(DB)의 독점적 소유와 활용으로 권력 편중 및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2.66	1.60
42.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이다.	5.50	2.05
43. 개인 매체 확산에 따라 사생활 침해,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2.26	1.31
44. 사람이 전혀 근무하지 않는 무인공장, 첨단공장이 본격적으로 출현할 것이다.	4.50	1.78
45.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자컴퓨터가 상용화, 보편화될 것이다.	5.92	1.70
50.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7.66	1.26
51.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의 생산 비용이 낮아져서 화석에너지(석유, 석탄, 가스)의 생산 비용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다.	7.97	1.03
52. 탄소 중립국(탈탄소) 실현과 관련한 법률(탄소세 등 신설 포함)이 제정될 것이다.	7.26	1.48
53. 미세먼지,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2.21	1.77
54. 쓰레기 매립장 확보와 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다.	2.76	1.50
55. 플라스틱 사용/유통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가하고, 무역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3.53	2.00
56. 기후변화로 인하여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2.13	1.71
57. 자연재해(가뭄, 홍수, 국지성 호우 등)의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2.03	1.65
58.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질병이 증가할 것이다	1.84	1.48
59. 제2의 팬데믹(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것이다.	1.68	1.51



## [부록 6]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대응의 고려 정도

〈부표 5〉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대응의 고려정도

설문내용	평균	표준편차
1. '경제 성장과 발전'은 향후에도 최우선 정책목표로서 중요성을 유지할 것이다	6.42	1.98
4.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강화될 것이다.	5.76	1.70
5.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을 활용한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6.79	1.47
9.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7.08	1.32
12. 경제성장률이 하락·정체되어 저성장 구조가 고착될 것이다.	7.55	1.20
1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7.21	1.44
14. 불안정한 일자리(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플랫폼노동 등)가 증가할 것이다.	8.00	0.96
15. 자율근무, 플랫폼을 활용한 유연한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7.55	1.20
18. 기업 간 격차 확대로 승자독식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7.29	1.14
19. 일상생활용품 구매에서 온라인 시장의 비중이 오프라인 시장의 비중을 넘어설 것이다.	6.26	1.69
20. 정보·데이터의 생산, 활용, 유통, 통제 등을 통한 기업 이윤 창출이 증가할 것이다.	6.97	1.46
26. 소득 증가를 상회하는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7.29	1.29
27. 주택가격 하락과 부동산 버블 붕괴가 발생할 것이다.	7.11	1.45
28. 세대 간, 연령 간 갈등이 증폭되고, 격화될 것이다.	7.05	1.21
29. 성별(젠더) 갈등이 확대·심화될 것이다.	6.82	1.31
30.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증가로 인종 간, 국적 간 갈등이 확대·심화될 것이다.	6.71	1.54
31. 출산율(출생아 수)은 현재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8.00	1.29
33. 존엄사,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될 것이다.	5.89	1.49
34.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질 것이다.	6.50	1.39
35. 수도권, 대도시에 인구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7.21	1.28

설문내용	평균	표준편차
36. 일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 진행될 것이다.	6.37	1.44
37. 다양한 형태의 가족(동성 부부, 사실혼 등)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것이다.	6.61	1.64
41. 정보, 데이터(DB)의 독점적 소유와 활용으로 권력 편중 및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7.37	1.17
42.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이다.	7.00	1.12
43. 개인 매체 확산에 따라 사생활 침해,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6.53	1.29
44. 사람이 전혀 근무하지 않는 무인공장, 첨단공장이 본격적으로 출현할 것이다.	6.32	1.32
45.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자컴퓨터가 상용화, 보편화될 것이다.	5.68	1.68
50.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7.42	1.13
51.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의 생산 비용이 낮아져서 화석에너지(석유, 석탄, 가스)의 생산 비용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다.	7.34	1.15
52. 탄소 중립국(탈탄소) 실현과 관련한 법률(탄소세 등 신설 포함)이 제정될 것이다.	7.53	1.06
53. 미세먼지,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7.68	1.12
54. 쓰레기 매립장 확보와 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다.	6.89	1.13
55. 플라스틱 사용/유통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가하고, 무역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6.82	1.25
56. 기후변화로 인하여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6.82	1.49
57. 자연재해(가뭄, 홍수, 국지성 호우 등)의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7.24	1.38
58.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질병이 증가할 것이다	7.74	1.06
59. 제2의 팬데믹(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것이다.	7.87	1.19

## 간행물 회원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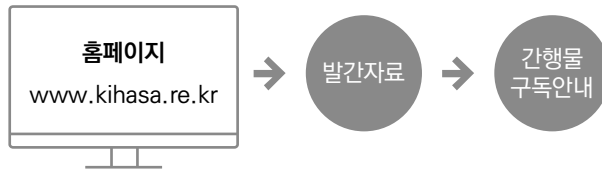
###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120,000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정기 간행물 회원
75,000원	35,000원

### 가입방법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